

2023 기후정의캠프 자료집

2023 기후정의 활동가 캠프



일시 | 2023년 1월 12일 - 14일

장소 | 금속노조 단양청소년수련원

주최 |  **기후정의동맹**

목차	4
2023년 기후정의캠프 참가자 평등한 캠프를 위한 약속	6
캠프 환영문	8
캠프 일정표	10

[정세읽기]

자본주의 위기, 급변하는 정세 아래 기후정의운동의 전망과 과제	12
2023년 한국과 세계경제가 직면한 현실 /홍석만.....	13

[모듬토론]

N개의 기후정의 그리고 기후정의선언.....	46
N개의 기후정의주체들의 기후정의선언운동 /가원	47
의미있는 조별 토론을 위한 질문지	48

[집중토론]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의 전략	52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 에너지 그 이상이어야 한다 /정록	53
지금 당장 기후정의! 홍천의 투쟁 /박성율.....	61
생태계와 공동체 파괴없는 에너지 공영화 /정학철.....	62
발전산업의 민영화 현황 /최재순	64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소용없다 - 제대로 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제정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입장 /이태성	68
반빈곤운동과 기후정의 /재임	71

[주제별 병행세션]

함께 묻고 답하는 기후정의 이야기	74
세션1) 종차별주의와 동물의 권리	75
기후정의와 동물해방-동물해방은 어떻게 기후정의운동의 언어와 실천이 될 수 있는가(되어야 하는가) / 채효정	76
종차별주의와 동물의 권리, 비건실천- 왜 내 언어가, 실천이 되기 어려운 걸까 / 정록.....	83
읽을거리1. - [위커스사진] 동물 /채효정	88
읽을거리2. 상품을 먹다 - 탈육식과 동물해방운동 /채효정.....	93
 세션2) 기후정의운동과 '지역'	106
지역투쟁의 현황 갈무리 /이현정	107
지역 기후정의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윤자.....	108
읽을거리. .기후정의의 정치적 주체 되기/이현정	112
 세션3) 관행적 기후행동을 넘어서려면(직접행동 등 새로운 전술의 모색).....	129
기후정의운동과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김선철	130
단일한 공간, 복수의 전선, 다양한 신체들의 직접행동 /박주석	143
기후운동의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 /박이현, 신영은.....	150
대규모 직접행동, 전 사회적 '기후파업'을 모색해보자 /서린 한재각	158
평가 및 종합토론	164
메모.....	165

2023년 기후정의캠프 참가자 평등한 캠프를 위한 약속

차별과 배제 없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평등한 캠프를 만들어요

- 하나. 우리는 나이, 성별, 성적지향과 정체성, 가족형태, 장애, 병력,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 둘. 개방적인 태도로 서로를 환영하고, 각자의 경험과 현재를 존중합니다. 민주적 토론을 지향하며 모두가 발언하고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합니다.
- 셋. 원치 않는 신체접촉, 성차별을 비롯한 성폭력에 반대합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넷. 우리는 모임과 서로의 발전을 위해 평등약속을 존중하고 실천합니다. 꾸준히 새로운 평등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체크리스트

성별억압에 근거한 외모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성별과 성정체성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모든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동등하게 존중합니다.

나이, 학력, 군복무 여부 등을 이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을 놓거나, 함부로 신체접촉하지 않습니다.

장애, 신체적 특징, 질병,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문화, 종교,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주세요

▷ 캠프가 진행되는 휴대전화를 진동 또는 무음으로 해주세요.

▷ 자신의 물건(자료집, 필기도구, 세면도구 등)은 잘 챙겨주세요.

▷ 쓰레기와 남은 음료 등은 직접 버려주세요.

▷ 흡연은 지정된 공간에서만 해주세요.

캠프 환영문

기후정의활동가캠프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겨울이 원래 춥지만, 올겨울은 유독 춥습니다. 삼한사온은 이제 옛말.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수 주일째 계속되는 이 추위의 원인도 기후위기입니다. 북극의 이상고온으로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북극 공기가 그대로 한반도를 뒤덮어서 만들어진 추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위는 에너지 위기이기도 합니다. 미국, 영국에서 난방비가 폭등해 '난방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죠. 크리스마스 전후 추위때 난방을 틀지 못해 동사한 사람이 미국에서 최소 50명입니다.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고, 에너지를 사유화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올겨울 추위를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여름 장맛비를 끔찍한 폭우로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올해도 체제전환을 통한 기후정의를 고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 9월 기후정의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올해는 기후정의를 향해 한 발 더 진전해야 합니다. 물론 올해 우리 앞에 놓인 조건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깊어지는 경제 불황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불평등이 깊어지고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발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재벌 민간발전사의 이윤은 그대로 둔 채 민중의 전기요금 인상에 나섰습니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투쟁에 혐오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바에야 희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해봅시다. 기후정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장을 다듬고 전략과 기획을 더 구체화해봅시다. 각자의 영역과 지역에서의 기후정의운동을 만들어봅시다. 공공적 에너지 전환,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과 공공주택 보장, 신공항 건설 중단, 해고 없는 산업전환, 불평등 타파를 함께 이야기하며 체제 전환과 기후정의로 가는 길을 그려봅시다. 2박 3일간의 캠프를 통해 올 한해 기후정의운동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캠프 일정표

1일차

시간	프로그램	내용	장소
13:30-14:10	참가자 접수 및 숙소배정		대강의실 앞 테이블
14:10-15:20	프로그램 1 〈몸풀기 마음풀기〉	오리엔테이션 -공통점 찾기 -나를 소개합니다	대강의실
15:20-15:30	쉬는시간		
15:30-18:00	프로그램 2 〈정세읽기〉	자본주의 위기, 급변하는 정세 아래 기후정의운동의 전망과 과제 -강연: 2023 한국과 세계경제가 직면한 현실(홍석만: 참 세상연구소)	대강의실
18:30-20:30	저녁식사 및 뒷풀이		식당

3일차

시간	프로그램	내용	장소
08:00-09:00	아침 식사		식당
09:00-11:00	프로그램 6 〈종합평가〉	간단한 평가 및 종합 토론	대강의실

시간	프로그램	내용	장소
08:00-09:30		아침식사	
09:30-11:45	프로그램 3 〈집중토론〉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전환 투쟁의 전략 -발제: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 에너지 그 이상이어야 한다(정록: 기후정의동맹) -토론: 박성율(홍천군 송전탑반대-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위원회), 정학철(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이재임(빈곤사회연대), 최재순(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이태성(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대강의실
11:45-13:00		점심식사	식당
13:00-15:30	프로그램 4 〈모둠토론〉	N개의 기후정의 : 기후정의선언운동 -발제: 가원(인권운동사랑방)	대강의실
15:30-16:00		쉬는시간	
16:00-18:30	프로그램 5 〈주제별 병행 세션〉	함께 묻고 답하는 기후정의 이야기 세션1) 종차별주의와 동물의 권리 -발표1. (채효정: 기후정의동맹) -발표2. 종차별주의와 동물의 권리, 비건실천 - 왜 내 언어가, 실천이 되기 어려운 걸까(정록: 기후정의동맹) 세션 2) 기후정의운동과 '지역' -발표1. 지역 투쟁 현황 갈무리(현정: 기후정의동맹) -발표2. 지역 기후정의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윤준: 음성노동권익센터) 세션 3) 관행적 기후행동을 넘어서려면(직접행동 등 새로운 전술의 모색) -발표 1. 기후정의운동과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김선철: 독립연구자) -발표 2. 직접행동이란 무엇인가: 전장연 투쟁 사례(박주석: 전장연) -발표 3. 기후운동의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박이현, 신영은: 문화연대) -발표 4. '기후파업'을 사유/모색하자(서린,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세션1) 대강의실 세션2) 1강의실 세션3) 특성화 수련활동실
18:30-20:30		저녁식사 및 연대와 교류의 밤	식당

[정세토론]

자본주의 위기, 급변하는 정세 아래 기후정의운동의 전망과 과제

발제 1 2023년 한국과 세계경제가 직면한 현실 / 홍석만 (참세상 연구소) 11P

2023년 한국과 세계경제가 직면한 현실

홍석만 (참세상 연구소)

2023년 한국과 세계경제가 직면한 현실

2022.01.12

 참세상 연구소 홍석만

1. 세계경제질서와 시장 분할 재편

(1)공급망과 세계시장 분할 재편

- 세계화를 통한 세계시장의 통합에서, 신냉전(구도)을 통한 세계시장의 분할로
⇒ 경제제재 및 포위 전략, 신냉전과 공급망 재편은 세계시장을 재편·분할하는 효과

○ 군사질서와 경제질서의 융합 : 중국-러시아 배제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보고서(2022.2)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 : 반중국 경제연합체로 구상
⇒ IPEF에 공급망 재편, 탈탄소 산업전환 등 신자유주의 질서재편 계획 포함

미 백악관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행동 계획

자료: 백악관

※한·미·일 3각 협력을 ‘쿼드’나 ‘오키스’ 등과 동급으로 취급.
북한 문제 외에도 지역 개발, 사회간접자본, 핵심 기술,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가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밝힘

- 인도·태평양에 새로운 자원 공급
- (올해 초 발표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틀’ 주도
- (대중국) 억지력 강화
- 자율적이고 단결된 아세안(ASEAN) 강화
- 인도의 지속적 성장과 지역 리더십 지원
- 쿼드(Quad)의 구현
- 한·미·일 ‘3각 협력’ 확대
-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탄력성 강화에 협력

미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성격	조약으로 구속하지 않는 <u>반중 경제협의체</u>
목적	<u>미 가치동맹 중심의</u>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질서 재편
내용	디지털상거래 포함한 무역(무역 문제), 서플라이체인 강화(공급망 문제), 인프라 및 클린에너지(탈탄소 문제), <u>세금과 반부패(부패 방지) 등</u>
참여국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등 13개국

• 미국-EU무역기술이사회(TTC)
작업반 구성 및 주요 의제

미국-EU연합연합 TTC 작업반	주요 논의 의제
1. 기술 표준	- 기술표준 협력: 전략적 표준화 정보(SSSI) 메커니즘 구축, 기술 표준 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증진 - 인공지능(AI): 인공지능의 가치와 인간 권리를 증진하는 인간 중심의 선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협력
2. 기후 및 청정기술	- 2050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녹색 공공조달 정책 도입 - 특정 상품군에 대한 탄소 발자국 축소를 위한 방법론 개발 - e-모빌리티 및 스마트 그리드 활성을 위한 협력 - 혁신을 통한 안보화를 위한 공동 투자/내수입을 자체 공급망에 대한 대서양 계획
3. 안정적 공급망	- 태평양 공급망의 투명성 및 감인화 제고를 위한 선제적 방안 - 반도체 공급망 투명성 제고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보 공유
4. ICT 보안 및 경쟁력	- 제3국에서의 ICT프로젝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 금융 조달 - 5G/6G 이후 차세대 커뮤니케이션기술 개발 로드맵 구성을 위한 협력 - ICT 공급망 리스크 정보 공유
5. 데이터 거버넌스 및 기술 플랫폼	- 플랫폼 콘텐츠 중재에서의 투명성 및 반응성 제고 - 불법 및 유해 콘텐츠에 대한 알고리즘 중독에 대한 대응 -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 데이터 제공
6. 안보 및 인권을 위협하는 기술 사용	- 전 지구적 단위에서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감시활동에 대한 대응 - 온라인에서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보호 활동 - 인터넷 차단 대응 - 국가단위에서의 정보 조작 및 가짜에 대한 대응
7. 수출 통제	- 러시아 및 벨로루시에 대한 이중용도 물질, 군용기술 또는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선기술 등에 대한 수출 통제 - 반도체를 포함한 특정 상품 및 기술군에 대한 라이선싱 논의
8. 투자 스크리닝	- 각국의 투자 심사에 대한 정보 공유 - 특정 민감 기술군의 안보 위험에 대한 정보 공유
9. 중소기업의 디지털 접근	-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 청취 - 중소기업의 디지털 도구 접근 강화를 위한 웨비나 개최
10. 글로벌 무역역의 도전	-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협력 - 무역 관할권을 위한 협력 - 비시장적 무역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논의 - 무역과 노동 규약, 책임 있는 기업 경영 등에 대한 협력

○ 공급망 재편 : 생산지 뿐 아니라 소비지도 재편

- 공급망 재편은 생산지 의존성을 완화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대체

⇒ 인플레 감축법 / 반도체법 칩4 동맹 / 바이오 제조강화 : 중국 배제 및 공급망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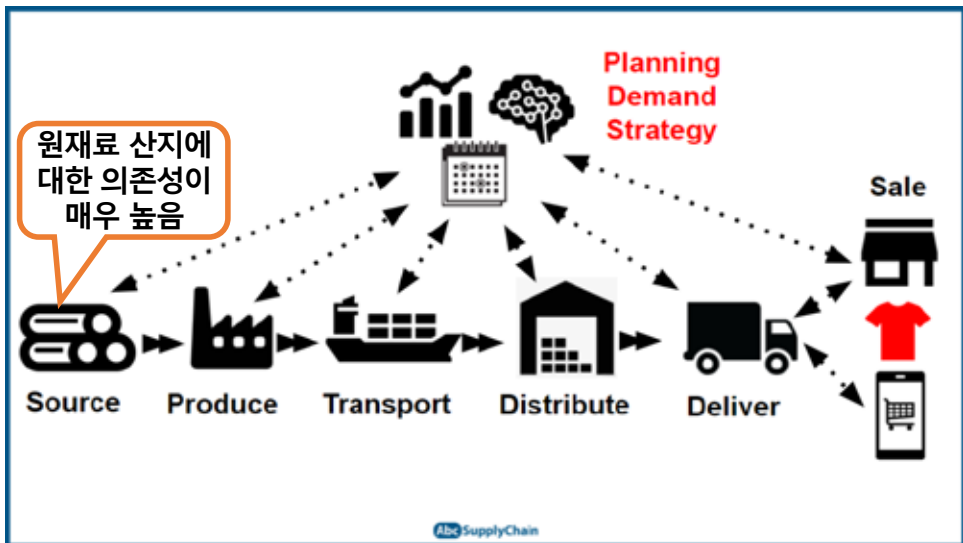
- 미국의 자국 생산주의는 중국에서 미국산 재화 소비 제한과 금지로 이어짐.

⇒ 생산지 분할은 소비지 분할로 나타남

- 인플레 감축법(IRS)
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의 중국 생산 배제
- 반도체법 + 칩4(Chip 4) 동맹
미국 지원 받은 반도체 업체,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생명공학·바이오 부문 미국내 제조능력 강화 및 중국 생산 배제



- 공급망 관리와 재편



○ 광물자원의 안보화 및 경쟁경쟁 확대 : 시장재편의 군사화

- 미국 = **배터리의 리튬·니켈·흑연·코발트·망간** 등 소재 **국방물자법DPA** 발동.
 = **반도체 생산 국방수권법** 포함 : 한국, 대만의 반도체 생산은 각각
 : 북한, 중국 리스크로 인해 안보위험 초래 가능...미국으로 생산지 옮김.
 ⇒ 공급망 재편 계획, 중국 포위 전략에 포함(IPEF) / Chip4 동맹
 ⇒ 핵심광물 없이(대신) 값비싼 대체 생산을 하던가 : 가격 경쟁력 없어짐.
 ⇒ **전쟁을 해서라도 생산지를 빼앗던가 아니면, 타협하던가**
- 중남미 지역 희토류 산지에 대한 개입과 분쟁
 :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리튬 삼각지대(세계매장량의 65%)
 ⇒ 볼리비아 모랄레스 탄핵 퇴출
 ⇒ 칠레 개헌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과 태도
 ⇒ 아르헨티나 정세 개입의 확대

Mining (2019)



Percent of Global Production (%)	Lithium	Cobalt	Nickel	Graphite
1 st Highest	60% - Australia	70% - D.R. Congo	26% - Indonesia	68% - China
2 nd Highest	19% - Chile	5% - Russia	16% - Philippines	10% - Brazil
3 rd Highest	9% - China	4% - Cuba	10% - New Caledonia	4% - Canada
4 th Highest	7% - Argentina	4% - Australia	10% - Russia	4% - India
Total metric tons in 2019	84,700	128,700	2,133,000	930,000

Refining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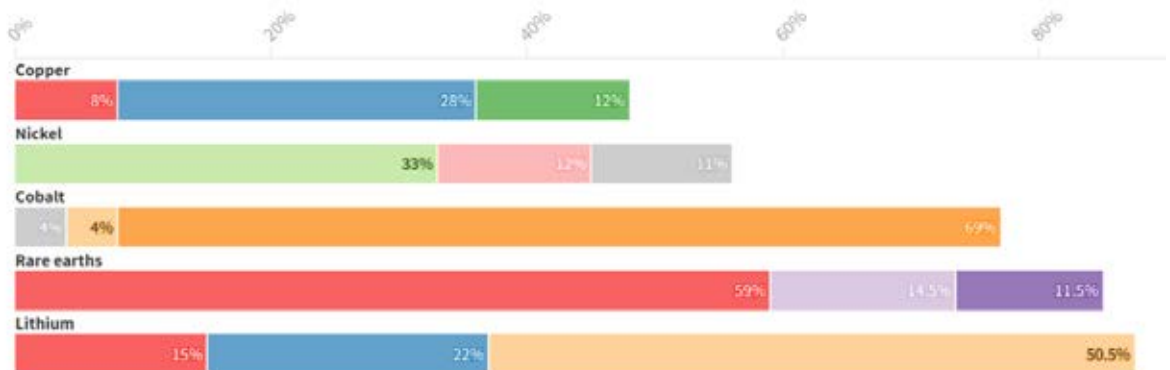
Percent of Global Production (%)	Lithium	Cobalt	Class 1 Nickel
1 st Highest	60% - China	72% - China	21% - Russia
2 nd Highest	30% - Chile	9% - Finland	16% - China
3 rd Highest	10% - Argentina	4% - Canada	15% - Japan
4 th Highest	---	4% - Norway	13% - Canada
Total metric tons in 2019	66,100	162,900	1,171,300

배터리 원료별 글로벌 채굴 및 제련 주요국 비중

주요 광물 국가별 생산 비중 (2022년 IRENA, IEA)

Where critical minerals are mined

China Chile Indonesia Peru Philippines Russia Australia DRC US Myanmar



○ 자본주의 패권 경쟁과 분쟁의 확대

-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본주의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대립의 지역적 성격
- ⇒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이 질서 내에서 덜 강력한 제국주의 또는 하위 제국주의 열강들도 지역 수준에서 개입을 확대. EX)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란, 아랍에 미리트 등이 시리아와 예멘과 같은 분쟁에 지속적으로 개입.
- ⇒ 러시아가 자국 ‘근해’에 대한 주장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존재를 재확인하려는 것도 이러한 제국주의적 경쟁의 맥락.
- ⇒ 미국과 유럽 등 제국주의 세력들의 군사적 견제도 증가
- 군사적 긴장과 충돌은 오늘날 세계 정치의 주요 단층을 구성
- ⇒ 냉전의 직접적 재현(신냉전)을 의미하지 않으나, 전략적 방향속에 구도형성

○ 스태그플레이션 : 전쟁과 군비지출 확대의 유혹

- 스태그플레이션 아래에서 민간소비, 민간투자 확대 어려움
- ⇒ 돈을 지원해도 빚을 갚거나 저축 하지 소비나 투자를 늘리지 않음 : 유동성 함정
- 민간소비나 투자 대신 정부지출 증가 : (뉴딜 같은) 공공투자 지출 + 군비 지출 증가
- ⇒ 뉴딜 같은 공공투자지출은 지출규모나 자금 회전속도가 군비나 전비 지출에 비해 느림.
- ⇒ 스태그플레이션(또는 공황) 아래에서 군비지출 요구 강해지므로 군사대립과 긴장 확대
- 1929년 시작된 대공황에서
- ⇒ 뉴딜은 거의 정책적 성과가 없었고
- ⇒ 2차 세계대전 : 대량의 자본파괴+전쟁비용지출을 통해 극복
-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대응에서도
- ⇒ 급진적 금리인상(10% ⇒ 20%)으로 부실기업, 부실자본 청산 반복
- ⇒ 아프간 전쟁 지원, 스타워즈 등 (신)냉전 고조로 군비지출 확대로 이루어짐.

CF. 1970년대 케인스 축적체제의 종말과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냉전

- 베트남전 패전 및 전비 마련을 위해 달러화 남발 : 달러 금태환 정지(1971년)
 -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과 함께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 1979년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극복과정에서 미·소 간 대리전 횡행, 핵무장, 전략 방위 구상인 스타워즈 등 미국 최대 규모의 군비지출을 이루며 냉전 최고조.
 - 달러 패권 중심의 금융세계화와 자유무역 확대에 기반한 생산의 세계화,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축적체제로 질서재편.
 -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절정 : 노조파괴, 케인스적 유산박탈, 노동유연화 가속화
- ⇒ 스태그플레이션은 2년 내외로 각 2번씩 겪었음
- ⇒ 신자유주의 축적체제로의 재편에는 20년 정도 걸림

(2) 달러 패권 약화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균열(?)

○ 전쟁과 러시아 경제제재의 영향

- 러시아 SWIFT 퇴출 ⇨ **대안적 결제시스템 모색 확대**
 -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자산 동결, 몰수 ⇨ **중앙은행 리저브 구성에 달러화 비중 축소**
 - 인도-러시아(루피-루블) 직접결제 시스템 ⇨ **SWIFT 약화, 달러화 무역거래 비중 축소**
 - 사우디 페트로 달러의 위안화 대체 가능성 ⇨ **달러의 무역결제 비중 축소**
 - 국제결제를 위한 공동통화(합성통화) 구성 움직임 확대
 - (전쟁장기화 시) 유라시아-중국 통합 가속화
- ⇒ **달러화 지위를 흔들고 있음**

달러패권 흔들는 우크라이나戰, 사우디가 지금 '위안화 결제' 빼든 이유?

사우디, 달러-위안화 저울질? '페트로위안' 부상하나
스위프트 제재에 러 경제 경제 공공...사우디 카드 빼낸 시기 주목해야

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 입력 : 2022-03-16 02:48
| 수정 : 2022-03-16 03:50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달러 패권을 흔들는 모습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 일부에 대해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반세기 동안 지속된 '페트로(석유) 달러'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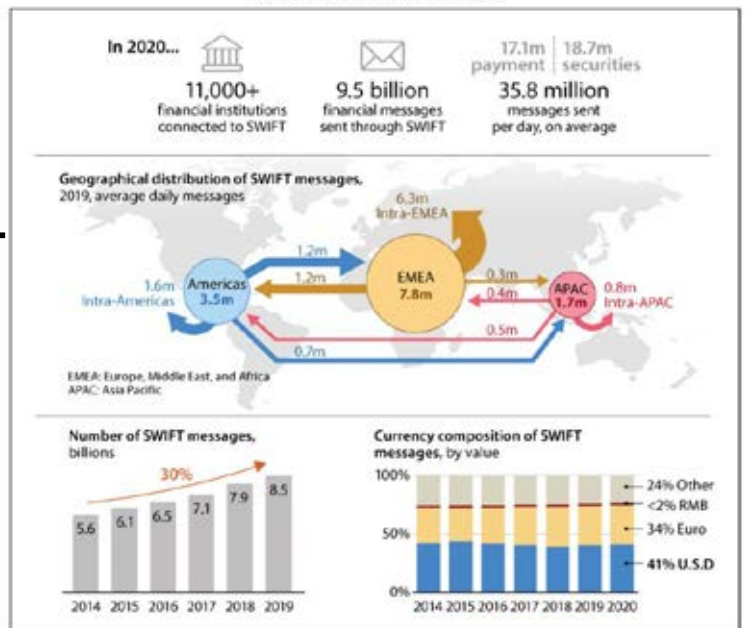


인도 러시아 돕기 위해 루피-루블 결제 시스템 도입

(서울=뉴스1) 박영기 기자 | 2022-03-17 14:09 송고 | 2022-03-17 14:12 최종수정

국제결제망 SWIFT

Figure 2. SWIFT at a Glance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지불 시스템), yes " NYSE 은행간 지불 시스템 " 간단히 말해서, 1970 년 설립, Association of New York Clearing Houses (NYCHA) 사업,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지불 청산 시스템 중 하나, 주요 청산 국경간 미국 달러 거래 .

CHAPS(Clearing House Automatic Payment System)는 런던의 영란은행에 의해 설립된 "자동 경산 및 지불 시스템" 으로, 1984년 에 세계에서 가장 큰 대규모 실시간 결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실시간 결제 시스템 중 하나인 스텔링 파운드 제공, 유로로 표 시되는 두 개의 독립적인 청산 서비스, 그 중 유로 청산 및 유럽 통합 결제 플랫폼 TARGET Connect .

중국의 국경간 RMB 지불 시스템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약어 CIPS) 중국 고유의 국제 지불 시스템 으로, 2015 년에 공식 출시되었으며, RMB 국경 간 지불 및 청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도매 지불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위안화 국경 간 지불 및 결제 채널 과 자원을 더욱 통합하고, 국경 간 청산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주요 시간대에서 위안화 비즈니스의 발전 요구를 충족시키고, 거래 보안을 개선하 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 . 그것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CIPS 시스템 사업은 실제로 1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있는 3000개 이상의 은행 법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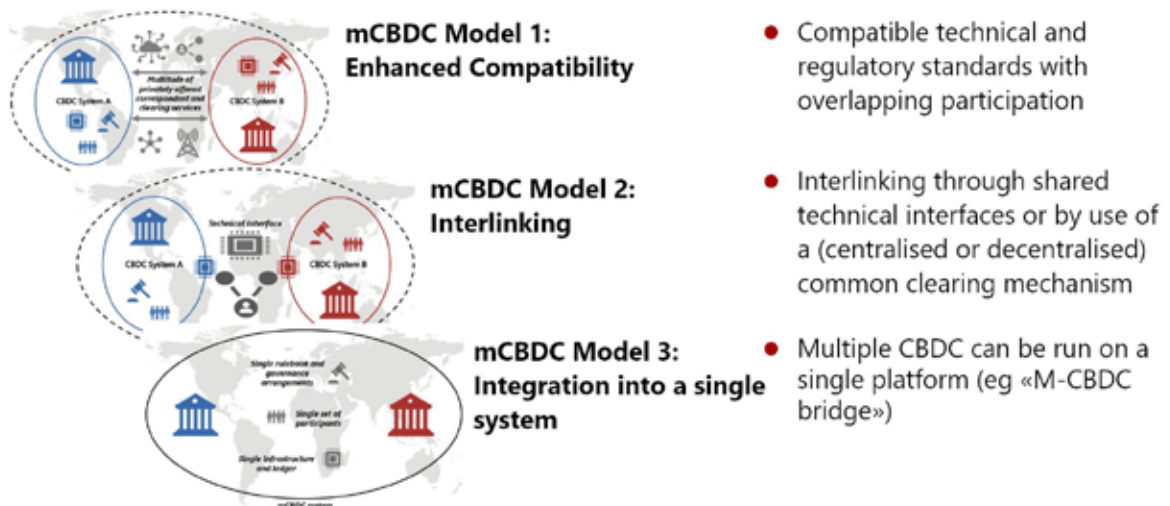
INSTEX(das Instrument Support of Trade Exchanges),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은 2019년에 결제 시스템 시작, 프랑스에 등록됨, 예 " 무역 스왑 지원 도구 ", 결제 메커니즘이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음, 물물교환 및 비 미국 달러, SWIFT가 아닌 이전 방식, 유럽 기업이 미국 제재를 피하고 이란과 계속 교역할 수 있도록 .2019 연말,INSTEX 원래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유럽 6개국에 추가 합류: 벨기에, 덴마크, 핀란 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INSTEX 9A 국가 로 확장 .2019 년 6 월간 운영, 2020 년 3 3 월말 의료 기기의 첫 번째 결제 거래 완료 .

SPFS 러시아 중앙 은행의 금융 정보 전송 시스템입니다. 2019년 연간 개발,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달러에 의해 지배될 SWIFT 시스템의 대안 , 글로벌 은행 간 금융 통신 협회(SWIFT)의 경우 결제를 구성하는 방법을 고려 중 네트워크 연결 끊길 . 뉴스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중국 인도 결 제 시설과 인터페이스할 계획이다.

SWIFT 외에 다른 국제결제시스템

✓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를 통한 국제결제 가능성

Interoperability can be enabled via "multi-CBDC arrangements"



Source: R. Auer, P. Haene and H. Holden (2020) "Multi-CBDC arrangements and the future of cross-border payments". BIS papers 115.

○ 당장 변화는 없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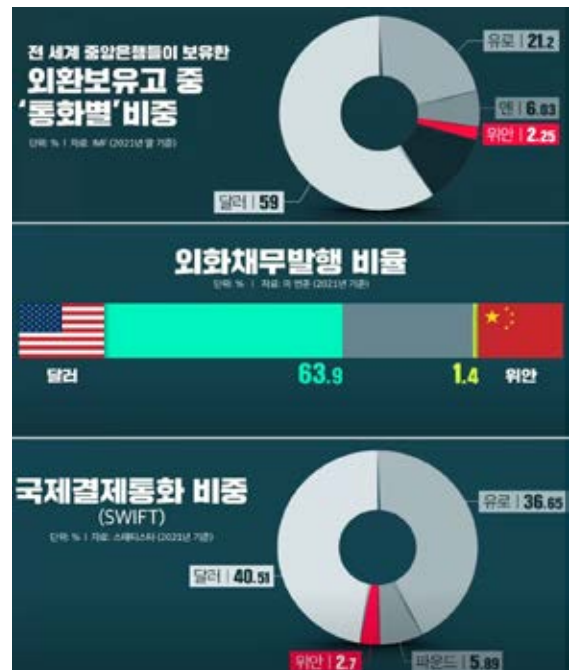
⇒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IMF, “러시아의 대응은 상호 지정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통화 블록의 출현 가능성 있다 ... 중기적으로 미국 달러의 지배가 무너질 것이라고 전혀 확신하지 못하지만... 거대한 글로벌 재편이 시작되었고 세계는 포스트 아메리카 사이클에 진입”

⇒ 소규모 통화블록 등장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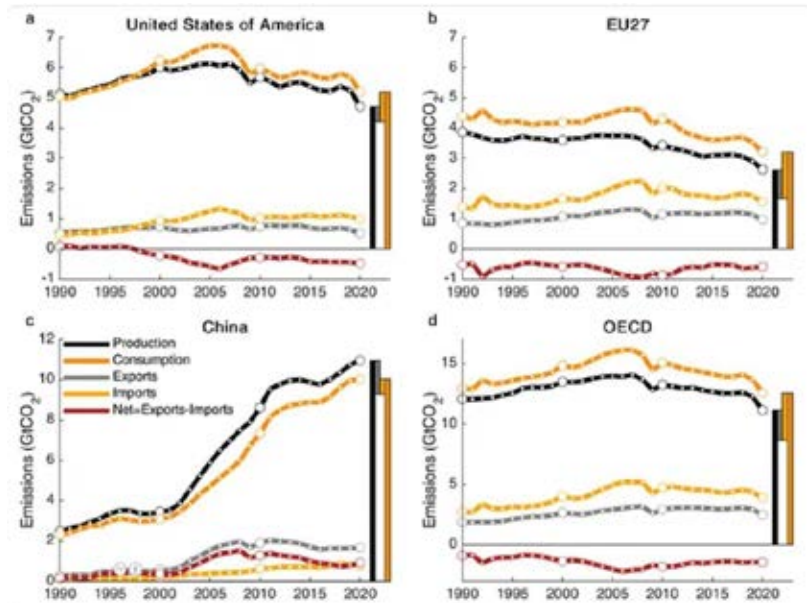
⇒ 달러화 약화 대세 국면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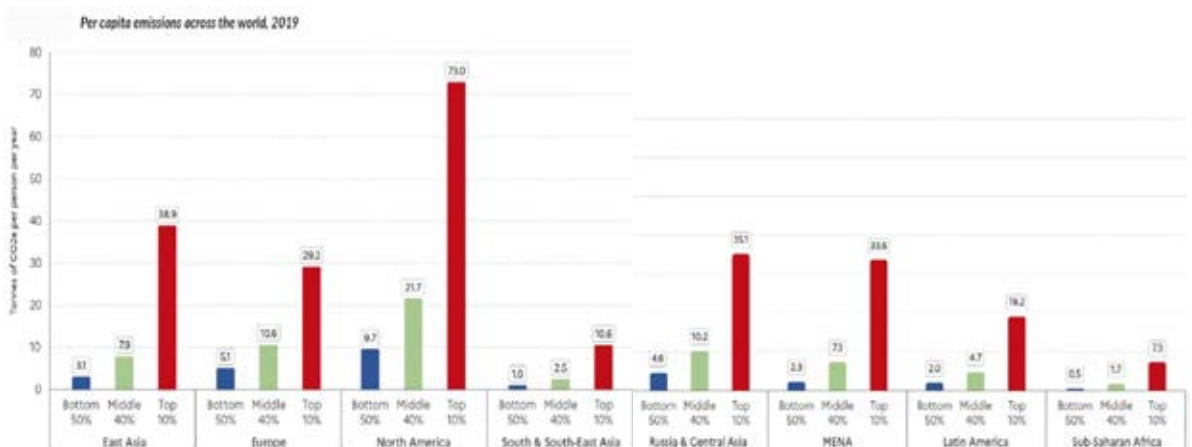
2. 탈탄소 전환과 산업재편 그리고 저성장

○ 기후위기와 기후 불평등 심화

-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생산지를 중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탄소배출을 중국에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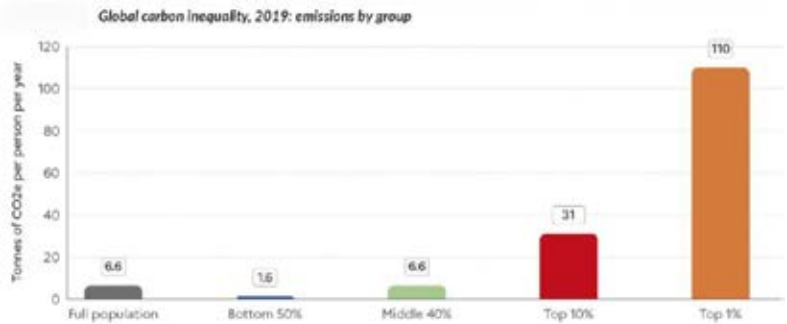


- 탄소배출은 중국 등 신흥국 뿐 아니라 미국과 북미 지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은 탄소배출을 중국으로 이전)
- 어느 지역이든 소득 상위 10%에 의한 탄소배출이 압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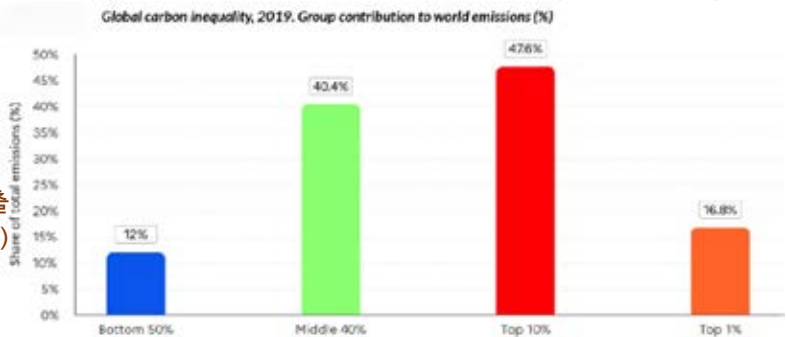
✓ 자산별 1인당 배출량

- 자산 상위 1%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인구 하위 50% 평균의 약 100배 더 많이 배출(OXF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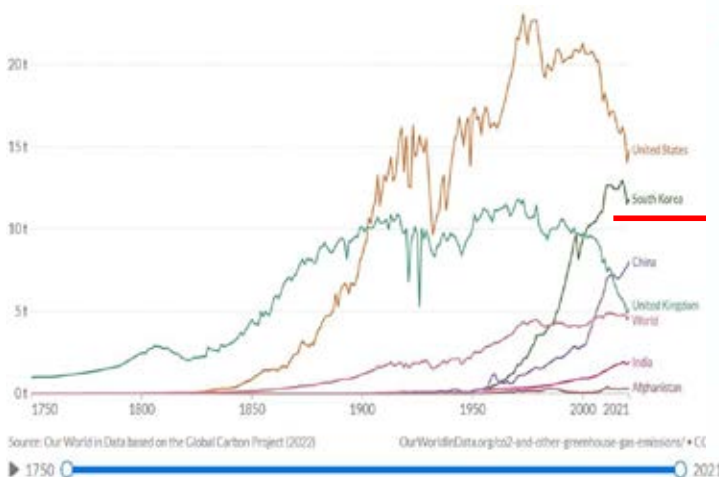
✓ 자산별 총 배출량

- 세계 인구의 가장 부유한 10%가 세계 배출량의 약 48% 배출
- 상위 1%는 전체 배출량의 17% 배출
- 세계 인구의 가난한 절반(하위 50%)은 세계 배출량의 12% 배출



✓ 국가별 1인당 배출량

⇒ 한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세계 최고 수준



✓ 한국, 소득별 탄소배출량

Table 2: Carbon table

	Avg. GHG footprint (tCO2e/capita)
Full population	9.5
Top 1%	97.3
Top 10%	27.9
Middle 40%	10.1
Bottom 50%	5.4

Interpretation: The table presents average CO2 emissions of different groups of the population in 2019. Emissions take into account carbon embedded in consumption and investment portfolios.

Sources and series: wir2022:wid.world/methodology.

○ 탈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심화

2050년까지 기온상승 시나리오

기후변화 없는 세계(0°C 상승) 대비 기온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영향 시뮬레이션(%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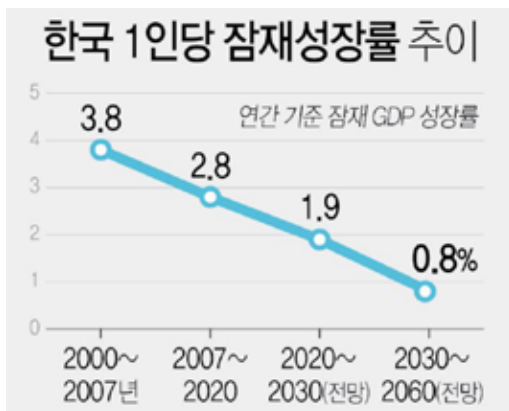
	2°C 미만 상승 파리협정 목표	2°C 상승 현재 대응에서 기온 상승 범위	2.6°C 상승	3.2°C 상승 심각한 경우 (기후위기 무대응)
World	-4.2%	-11.0%	-13.9%	-18.1%
OECD	-3.1%	-7.6%	-8.1%	-10.6%
North America	-3.1%	-6.9%	-7.4%	-9.5%
South America	-4.1%	-10.8%	-13.0%	-17.0%
Europe	-2.8%	-7.7%	-8.0%	-10.5%
Middle East&Africa	-4.7%	-14.0%	-21.5%	-27.6%
Asia	-5.5%	-14.9%	-20.4%	-26.5%
Advanced Asia	-3.3%	-9.5%	-11.7%	-15.4%
ASEAN	-4.2%	-17.0%	-29.0%	-37.4%
Oceania	-4.3%	-11.2%	-12.3%	-16.3%

출처 : Swiss Re Institute, 2021.04.



○ 기후위기 속 저무는 자본주의

“ OECD, 한국 잠재성장률
2030~2060년 **0.8%** ”



취업·고용유발계수 단위:10억원당 명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추정치 (한국금융연구원, 2021.7)

연도	총합	자본		노동		생산성		낙관적	비관적
		균형	부정	균형	부정	균형	부정		
2025	1.57	2.13	1.41	2.34	1.46	1.94	1.34	3.27	1.08
2030	0.97	1.89	0.68	0.92	0.86	1.58	0.59	2.45	0.2
2035	0.71	1.63	0.3	0.66	0.61	1.32	0.33	2.2	-0.19
2040	0.77	1.69	0.22	0.72	0.67	1.38	0.39	2.25	-0.26
2045	0.6	1.51	-0.08	0.55	0.49	1.28	0.22	2.08	-0.56

- (기후위기 배제하고) GDP 성장률, 잠재성장률은 계속 줄어 2050년 잠재성장률은 0.5% 수준에 이를 전망.
- 비관적 시나리오, 2030년대 초 잠재성장률 (-)마이너스로.

기후변화 피해비용 (KEI, 2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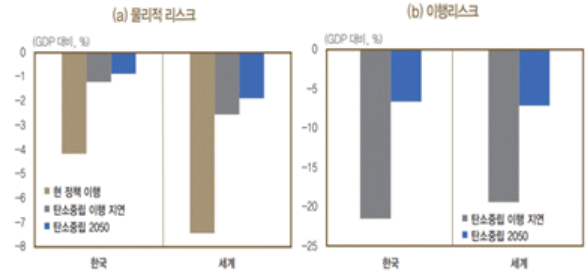
시나리오	2030	2050	2075	2100
No Action	0.00(0.36-0.84)	1.13(0.51-1.18)	2.40(1.82-3.88)	4.25(3.82-5.09)
NDC	0.01(0.35-0.87)	1.13(0.51-1.75)	1.79(0.7-2.88)	2.48(0.95-3.02)
LEDS (2℃ 안정화)	0.01(0.39-1.27)	1.09(0.44-1.67)	1.56(0.57-2.55)	1.73(0.63-2.89)
탄소중립 (1.5℃)	0.03(0.37-0.80)	0.99(0.46-1.51)	1.18(0.45-1.91)	1.39(0.45-2.09)

자료: PAQIE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50 탄소중립(1.5도 상승), GDP 손실액은 1%에 달함. (탄소저감기술, 탄소세 외 탄소저감 활동 고려)
- ⇒ 2050년 이후에도 기후피해 증가, 경제성장률 손실 확대.

물리적 리스크 및 이행 리스크의 GDP 영향

(한국은행, 2021.9)



- 물리적 리스크(GDP손실률) : 현상황 -5% ~ 탄소중립시 -1%
- 이행리스크 : 탄소중립 지연 -22% ~ 탄소중립 -7%

⇒ 2050년 탄소중립(1.5도 상승) 경우에도 GDP 성장률 연 평균

0.32% 손실. (탄소포집기술, 탄소세 영향만 고려)

경제상황만고려
기후영향 배제



기후영향만 고려
경제상황 배제



종합적 고려:
기후영향+경제

- 2050년 잠재성장률은 0.5% 내외 전망
- (비관적 시나리오) 2030년대 초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 2050년 탄소중립 시, GDP 피해액(감소액)은 연간 1%
- 탄소중립 지연 시, GDP 피해액(감소액)은 연간 1.13%
- ⇒ 당장의 GDP 손실이나 감소보다 생산능력을 저하시킴

- 1) 2050년 탄소중립 시
: GDP 잠재성장률 0.5% - GDP손실률 1% = -0.5%
- 2) 2050년 탄소중립 지연 시,
: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2030~35년 성장률 '0' 도달

⇒ 2030년대 초중반 이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돌입

⇒ 이윤(율) 저하로 착취(노동강도,노동시간,임금)와 수탈(기여자산,자원시간) 확대

3. 스태그플레이션

○ 스태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경기침체”

- 코로나19,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및 에너지, 식량수급 불안정으로 인플레이션 확대
- 경기침체 (가능성)확대로 2023년 상반기 전후로 전세계 스태그플레이션 예고
- 1970년대식 ‘임금-물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윤-물가’ 인플레이션**
 - ⇒ 공급부족으로 자동차, 배터리, 석유 등 독점시장의 대기업 이윤 폭증 : 마크업 증가
 - ⇒ 공급부족(교란)과 마크업 증가로 인플레이션 상승
 - ⇒ 그럼에도 투자는 소극적, 이윤 일부 자사주 매입 등 주주친화정책 : 기업투자환경변화
 - ⇒ 경기악화에 따른 수요 감소
 - ⇒ 수요감소에도 투자부족으로 구조적인 공급부족
 - ⇒ **물가인상·경기 침체 ⇨ 수요감소 ⇨ 투자부족 ⇨ 공급부족 ⇨ 물가인상·경기침체**

미국 기준금리 vs 인플레이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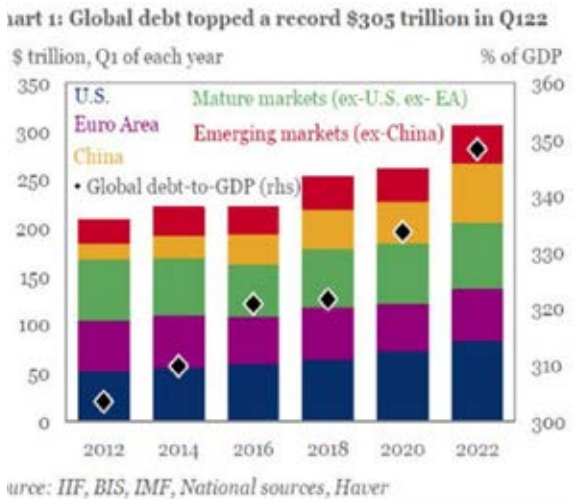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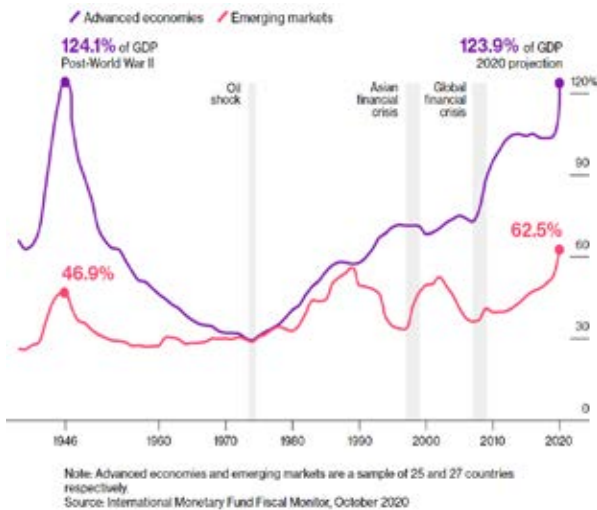


미국, 부채/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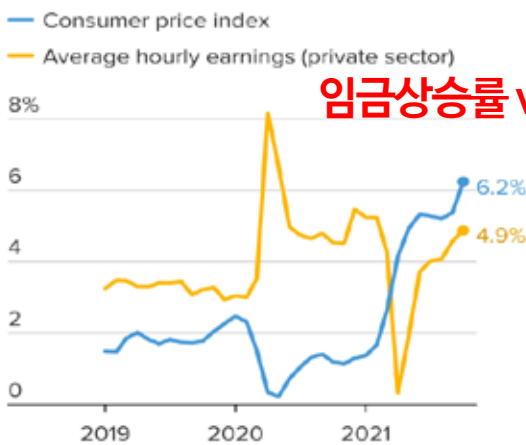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글로벌 부채 302조 달러
(2022년 3월말)



Inflation is outpacing wage growth

Year-over-year change in U.S. consumer prices and earnings



임금상승률 vs 물가상승률 (미국과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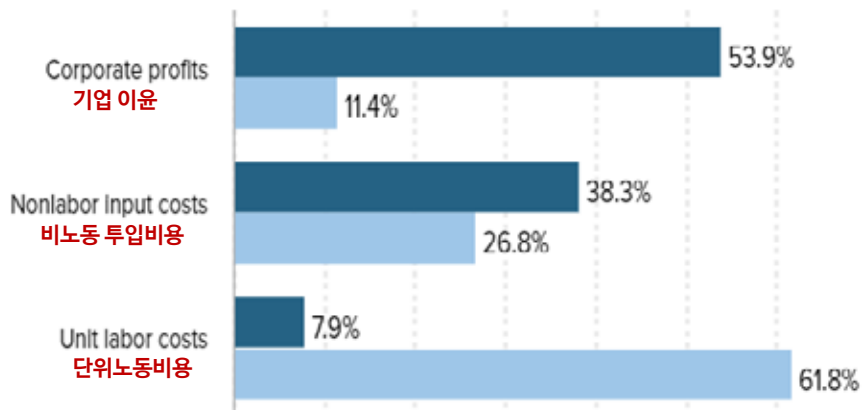
Wages falling further behind price rises

Figures to June 2022



BBC

비금융 부문의 요소별 물가 상승 기여도(미국)



• 출처 :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NIPA), Economic Policy Institute

■ 2020 Q2-2021 Q4 ■ 1979-2019 average

○ 스태그플레이션 대응

1) 인플레이션 대응

- 주로 공급측 문제이기 때문에 통화량 조절(수요 조절)로는 인플레이션 해결안됨.
- 이윤-가격 상승이 문제라서 **이윤(량)을 낮춰야 : 가격통제**

2) 경기침체 대응

- 과잉자본이 근본문제이기 때문에 공급부족 해소된다고 경기침체 해소 안됨.
- 과잉자본(과잉부채) 청산과 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지출)를 (나중에라도) 늘려야 함.

⇒ **(과잉·부실)자본 파괴·청산 + 소비(지출)확대 + 가격통제 로 대응**

○ 고금리 정책의 의미

• 과잉자본 = 과잉부채 **청산 수단**

- 스태그플레이션 아래에서 과잉자본은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
 - 2008년 이후 양적완화와 금융구제 수단 통해 좀비기업 양산하고 부채 증가, 수익성 악화
- ⇒ 과잉자본 청산과 부채 청산은 동일한 과정

⇒ **금리정책은 통화량 조절 수단이기보다 과잉부채, 과잉자본 청산 수단**

• 실업 증대 = 임금억제 수단

- 금리정책은 실업률 증대를 직접적 목표로 함.
 - 좀비기업 퇴출 = 과잉자본 청산 = 실업률 증가 = 임금 정체 또는 하락 : 인상 억제
- : 실업증대로 임금인상을 억제해 소비수요를 줄이겠다는 의미

⇒ **과잉자본이 청산되고 실업률이 오를 때까지 금리인상 반복**

⇒ **스태그플레이션 책임을 한계자본과 노동자에게 묻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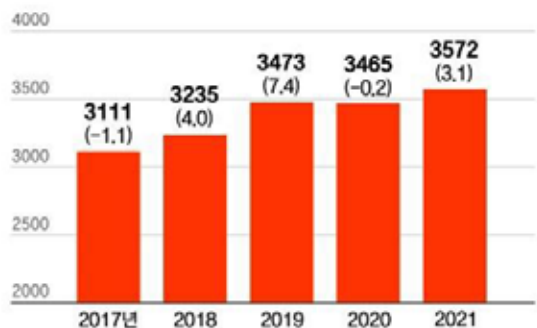
○ 기업이윤 양극화 = 독점이윤(만) 확대

대기업 영업이익 “역대최대” VS 한계기업 “역대최대”



최근 5년 새 늘어난 한계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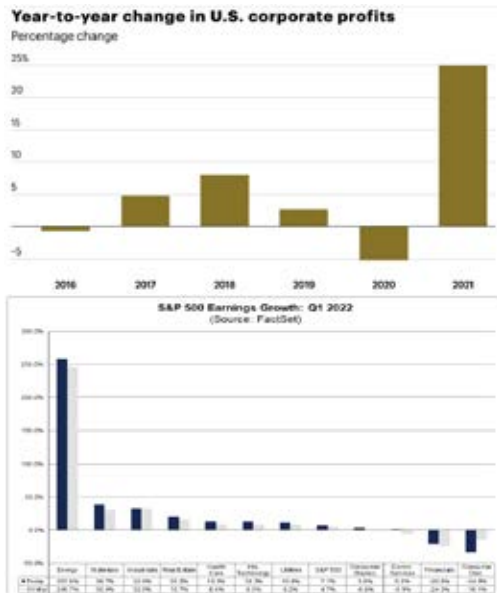
단위:개,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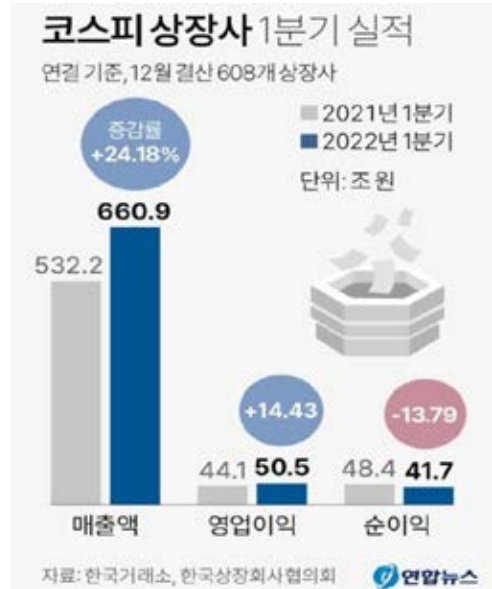
자료: 한우경 의원실, 한국은행

The JoongAng

✓ 영업이익, 사상 최대(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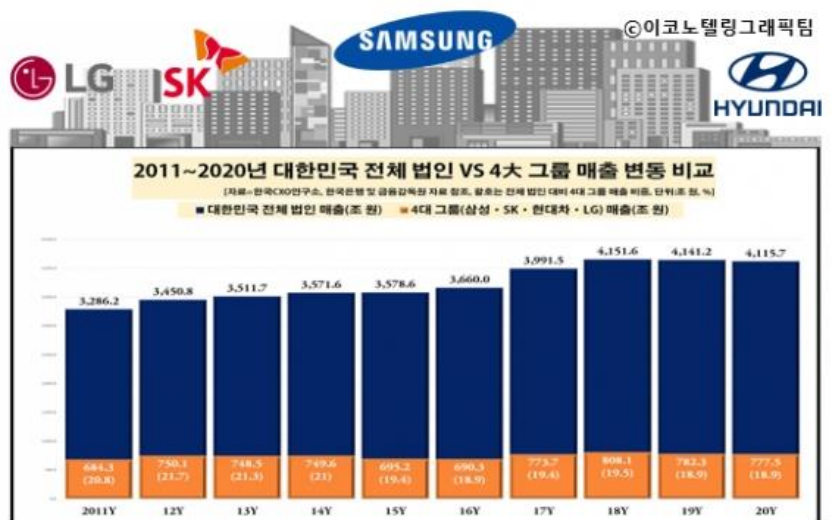


✓ 영업이익, 사상 최대(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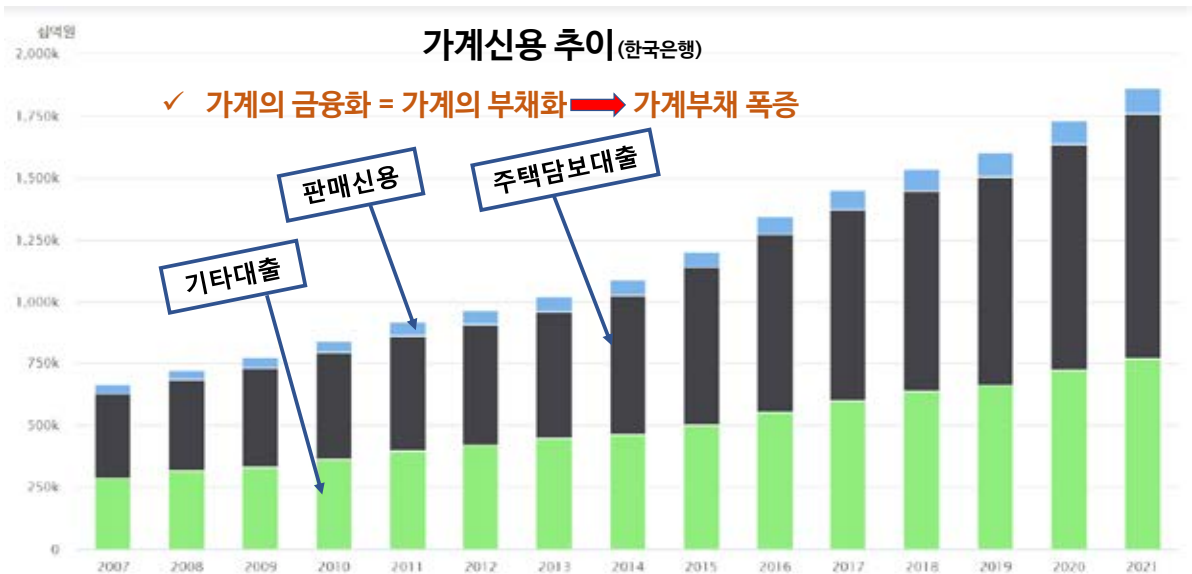


✓ 국내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비중 (2011~2020년)

- 매출액 : 전체 법인의 약 20%, 삼성그룹 8%
- 영업이익 : 전체 법인의 30%, 삼성그룹 15%
- 당기순이익 : 전체 법인의 40%, 삼성그룹 21%



○가계부채 폭증



부채 유형별 보유액 및 구성비

(단위: 만원, %)

✓ 영끌과 빚투

20대 부채증가율 41% (2022년)

30대 부채증가율 11% (2021년)

출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출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증감률		증감률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기타		증감률	구성비	
전	채	9,170	4.2	6,803	4.4	5,381	1,008	71	343	2,367	3.6	25.8
가구주연령대별	39세 이하	10,193	2.1	8,645	2.2	6,657	1,581	39	367	1,549	1.2	15.2
	- 29세 이하	5,014	41.2	4,577	35.4	3,354	1,053	33	137	437	158.6	8.7
	- 30 ~ 39세	11,307	1.1	9,520	1.2	7,367	1,665	41	417	1,788	0.1	15.8
	40 ~ 49세	12,328	1.0	9,701	4.8	7,575	1,580	101	445	2,627	-11.0	21.3
	50 ~ 59세	10,763	6.8	8,018	4.8	6,324	1,125	118	451	2,745	13.2	25.5
	60세 이상	6,045	6.0	3,704	3.1	3,072	383	38	211	2,341	10.9	38.7

		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증감률		증감률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기타		증감률	구성비	
전	채	8,801	6.6	6,518	7.7	5,123	966	63	366	2,283	3.5	25.9
가구주연령대별	39세 이하	9,986	9.5	8,455	12.7	6,649	1,342	33	432	1,531	-5.0	15.3
	- 29세 이하	3,550	2.1	3,381	5.7	2,500	648	17	216	169	-39.3	4.8
	- 30 ~ 39세	11,190	11.0	9,404	14.1	7,425	1,471	36	472	1,785	-2.9	16.0
	40 ~ 49세	12,208	7.8	9,256	4.2	7,163	1,534	102	457	2,952	20.9	24.2
	50 ~ 59세	10,074	1.6	7,650	3.1	5,903	1,178	97	472	2,424	-2.8	24.1
	60세 이상	5,703	8.0	3,592	13.2	2,951	383	33	226	2,111	0.3	37.0

가구특성별 가계의 재무건전성

(단위: %, %p)

		부채/자산			금융부채/저축액		
		2021년	2022년	전년차	2021년	2022년	전년차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전 체	17.5	16.7	-0.8	80.5	79.6	-0.9
	39세 이하	28.0	28.1	0.0	155.0	155.6	0.6
	· 29세 이하	29.2	37.1	7.9	135.4	197.9	62.5
	· 30 ~ 39세	28.0	27.4	-0.5	156.5	152.2	-4.3
	40 ~ 49세	22.0	20.8	-1.2	105.2	102.7	-2.5
	50 ~ 59세	17.8	16.8	-1.0	73.1	70.3	-2.8
	60세 이상	11.7	11.1	-0.5	49.6	48.9	-0.7

- 출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부채/자산			금융부채/저축액		
		2020년	2021년	전년차	2020년	2021년	전년차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전 체	18.5	17.5	-1.0	79.3	80.5	1.2
	39세 이하	28.6	28.0	-0.6	140.3	155.0	14.7
	· 29세 이하	32.5	29.2	-3.2	131.8	135.4	3.7
	· 30 ~ 39세	28.4	28.0	-0.5	140.9	156.5	15.6
	40 ~ 49세	23.3	22.0	-1.2	105.0	105.2	0.2
	50 ~ 59세	19.5	17.8	-1.7	75.7	73.1	-2.6
	60세 이상	12.4	11.7	-0.7	47.9	49.6	1.7

- 출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4.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

목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2022.6.16.)

4 대
정책
방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

민간중심 역동경제

- ✓ 규제혁신·기업활력 제고
- ✓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 중소·벤처기업 육성
-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체질개선 도약경제

- ✓ 공공·연금개혁
- ✓ 노동시장 개혁
- ✓ 교육개혁
- ✓ 금융·서비스산업 혁신

자유·공정
혁신·연대

미래대비 선도경제

- ✓ 과학기술·R&D 혁신
- ✓ 첨단 전략산업 육성
-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함께가는 행복경제

- ✓ 사회안전망 강화
- ✓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 복지시스템 고도화
- ✓ 지역균형 발전

당면 현안 대응

민생 안정

- ✓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 ✓ 주거안정

리스크 관리

- ✓ 경제안보 대응
- ✓ 위기관리 강화

정책 과제

1. 민간중심 역동경제

① 규제혁신·기업활력 제고

-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 규제비용감축제, 규제일몰제 도입 등
- 법률 제·개정시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 국제적인 자발적일 추진
- 규제 완화제 도입
- 상생혁신제도 조성 검토
-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신설
- 입지규제 완화형 개선방안 마련
- 기업규모 등에 따른 불합리한 자발규제 합치화
- 경제혁신을 감시 규제 개선
- 도시 중요지역에 개편 추진
- 신산업 등 투자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별로 개정
- 고질규제 개선

②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기업에 투자·고용장을 요한 제고를 위한 법안제 등 정비
- 기업승계제도 개편(대상기업 매출액 기준 2배 이상 확대 등)
- 경제 활동규정의 행정적 부담, 행정 합치화 등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사망률 개정 등) 현행으로 개정 추진(22.7월~)
- 부실채권 관련 실시지침(22.7)·사각지대해결 관련 실시지침 개정(23.3)
- 국가과학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
- 실비투자 특별자금 확대
- 중소기업·중소기업 지원

③ 중소·벤처기업 육성

- 중소기업 재정지원 정책들을 평가해 개편(22.7)
- R&D 재정지원 체계일괄 지원 중심으로 개편
- 중소기업·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속 확산
- 사업지원 안정화 확대

정책 과제

- 산업중심부하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산업중심대역 확대
-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22.3/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5천만원 → 2억원)
- 복수취업권 도입(벤처기업만)
- 벤처 창업자금 상환부담 감축 금융 프로그램 도입

④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기술혁신 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객관적인 전속고용제도 운용
- 남용단가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추진(시행준영, 22.7)
-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및 발정부 플랫폼 정책협력체 구축

2. 체질개선 도약경제

① 공공·연금개혁

- 재정준칙 제정(22.7)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SOC R&D 역자기준 500~1000억원 상한)
- [가칭]재정비전 2050 수립(22.8월)
- 총 재무·회계 공공기관 집중관리제 도입 및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
- 공직연금 개편 추진(재정비전/23.3월, 개편안/23.7)
- 개인·회계연공 제정(22.7월)

② 노동시장 개혁

-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22.7)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립(22.7)
- 경시대의 내·외 노의 체계화·관·과제발굴, 사회적 논의 추진

③ 교육개혁

- 학업부담 경감의 학기제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 마련(22.7)
- 대학 규제 완화(22.7~), 대학규제완화법 제정, 성과평가 개혁 발구 등)
- 대학평가제를 자율평가제에 따른 자율평가제·성과관리로 개편(22.12월)
- 대학의 재정 자율성 강화
- 지방대, 직업계고에 대한 지역중심 지원체계·교육과정 개편
- 신산업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대학/22.7)

정책 과제

④ 금융·서비스산업 혁신

-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 규제개선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대대공공의 공시제도 개선(22.3/4)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증권거래세 인하(22년)
-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22.3/4)
- 서비스발전기본법 원형 제정 및 입법 추진
- 고용·투자·창업 등 세제지원시 서비스업 지원 축소, 신산업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요양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서비스업 기술평가 체계로 개발 검토
-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대상 단계적 확대
- 산업단지 입주특례지구 지정요건 완화 등

3. 미래대비 선도경제

① 과학기술·R&D 혁신

-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22.11월)
- 국가 전략기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전략기술 로드맵 마련
- 국가과학기술 정책·제도, 조직·기술 확보를 위한 R&D 중점 투자
- R&D 예산·예산 상한(500~1000억원)
- 국제협력 R&D 프로젝트 추진
- 소재산업 투자펀드-CVC 연계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 기술개발 실용화 산다리 지원체계 구축

② 첨단 전략산업 육성

- 신산업 육성 전략 마련(22.12월)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수립(22.7)
-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 지정
- AI·디지털 분야 육성(대기업·중소기업 지원) (22.12월) 등)
- 바이오, 자율차, 스마트물류 등 실용화 인프라 구축
- 원천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과제
③ 인구구조 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계속교육 사회적 논의 추진 철도분야 외국인력 배치 신설 등 외국인 정책 개선 종합 검토 일터-대학 순환형 평생교육체계 구축(‘23.1~)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통합체계 구축(매년의료연구사업(‘22.11월~)) 육아요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④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방안 마련(‘23.3월) 배출권거래제 심도성 강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원전 계속운전 등 탄소 감축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성과연동 사업방식 확산 탄소중립 실현포인트 자급대당 활동 확대 핵융합실험, 핵에너지 개발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 인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
4. 협력가능 행복경제
⑤ 사회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 지원대상, 급여수준 확대 등 보장성 강화 건강복지 설계지원금 인상(‘22.7월) 및 재산기준 완화 상생도움 사업사업 추진(‘22.7월~), 재난지원금 지원 확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립 노인일자리 확대 장애인 특별고용수당(중대사) 지원 확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고보조 지원대상제 포함 65세 미만 실업자 등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확대 장래의 가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지원 강화 장래의 소득·교육 보장 강화 생활보호대상물 부양비용자 기준 단계적 폐지(‘23년) 보훈자료 위탁발행 인격적 활용 등 이동약자 예방 및 보호대상자물 국가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추가복지지원방안 마련(‘22.9), 공동생활주택 50호로 증감(‘23~‘27년)

정책 과제
⑥ 근로 휴양 및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직소통제 부설 경찰, 근로장려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구직급여 제도 개선, 근로빈곤층 탈수급 및 자활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23년) 공정채용임 도입 및 단계별임금 불공정 채용 시정 등 청년도약프로젝트, 청년도전 지원사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23.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8월~) 임차금 대출 지원 확대
⑦ 복지서비스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22.7) 사회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민간투자 활성화, 공공자 유보제, 다변화) 스마트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시장수요 확대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보장 활성학습-직업능력개발 사업 간 연계 강화
⑧ 지역균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역 교육·문화 등을 활용해 강소도시 육성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제재지원 확대 공공화계 역할 강화
5. 달인현안 대응 - 민생안정
①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비 30% 인하 연방(‘22.8~‘22년), LNG 임가액에 적용기한 연방(‘22.8~‘22년) 유연한 LNG 등 유연연료 개발소비를 인허(‘22.8~‘22년) 공공주택 관리비 보가자가제 연방 연방(‘22.8~‘22년) 부가서비스 연방대상 행복가속시 실시협약 체결기한 연방(‘22.8~‘22년) 여러신·청년 특성에 맞는 5G 요금제 등 출시 유도 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 등) 개발소비를 인허 연방(‘22.8~‘22년) 농수산물물가안정 지원금 운영 주요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등 합동점검단 운영 경제회복을 위한 분야별 구조개선 방안을 순차 마련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곡물수산물 비축 확대 소상공인 대상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연방(‘22.12월) 교통·신재생에너지 납부유예 지원(‘22.7~9월) 국가·지자체 계약 임시특례 연방(‘22.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력 강화방안 마련(‘22.7월)
② 추가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22.8월),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22.3/4)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공제시장가액비율 60~45% 하향(‘22.8월) 중부세 공제시장가액비율 100~60% 하향,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도입 등 부유세(중부세) 개편 세부안 확정(‘22.7월) 생애최초 LTV 상한 80% 완화, 대출한도 4~6억원 확대(‘22.3/4)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생활임차금 규제 보완 전월세 공제액 약 3억, 전월세 약 1만, 전월세 약 2만씩 증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22.8월) 관저장군·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제장관회의 운영
5. 달인현안 대응 - 리스크 관리
① 경제안보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안보 대응 전초를 타워 역할 및 상시 위기경보시스템 구축 민간 해외자원 확보에 대한 용자 및 공급가산 지원 확대 후방기업 안정화 지원, 청산·정산·상각을 중시 후방기업 확대 경제적 거리가 큰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 강화
② 위기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경제대응 TF를 통해 대내외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인프라 선진화 및 국책수요 지원 확대 등 국제사실 중장기 로드맵 마련 최초·중장기 스토리텔링으로 양식 개선 금융권 금융리 대응을 저출생 전환 개인채무자·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자금지원 추진 기업·조직 혁신·신규·신규 추진

○ 주요 정책과제 요약

1. 민간중심 역동경제

① 규제혁신·기업활력 제고

- 기업규모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규제 합리화
- 경제력집중 감시 규제 개선

②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한 법인세 등 정비
- 가업승계제도 개편(대상기업 매출액 기준 2배 이상 확대 등)
- 경제 형벌규정의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시행령 개정 등(‘22.7월~)

- 高재무위험 공공기관 집중관리제 및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
- 공적연금 개편(재정계산/‘23.3월, 개선안/‘23.下)

② 노동시장 개혁

-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22.下)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22.下)

3. 미래대비 선도경제

② 첨단 전략산업 육성

-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④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방안 마련(‘23.3월)
-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원전 계속운전 등

○ 정부 경제정책의 특징

- 민간주도·규제완화 핵심은 재벌주도·재벌 규제완화

⇒ 시장독점 보장, 경영권 및 경영권 승계 보장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 ⇒ 22%) : 소수 재벌독점대기업 법인세 인하 효과

- 개별 산업정책은 전환부문, 신산업부문에서 재벌독점 보장 또는 지원

⇒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론+한국판뉴딜’ 정책과 동일

- 탈원전 폐기에 대한 명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동일 : 재벌지원
- 전력 및 의료 민영화 사업이 인수위 때는 포함 /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사라짐.

⇒ 규제혁파 내용 속으로 숨어 들었고 경제상황 상 여론의 향배를 보고 판단할 듯.

- 재벌주도 성장정책(재주성) : 민주성(민간주도성장)이 아니라 재주성

⇒ 민간주도, 재정건전성을 외치지만 위기 하에 경제정책 변화 없음.

CF. 이명박 집권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 또는 ‘줄푸세’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가격통제는 물론, 뉴딜(4대강사업, 원전확대), 국가의 시장개입(자원외교 등) 정책 대폭 확대.

○ 통화는 긴축, 재정은 확장적으로

1) 통화 정책 = 금리인상, 통화긴축

- 과잉자본·과잉부채 청산 및 디스인플레이션 유도

⇒ 부실자본 청산 및 부채축소 : (미국을 따라서) 지속적인 금리인상

⇒ 금융시장 붕괴는 막되, 무차별적 구제가 아닌 선별적 구제로 전환

: 독점 대자본(재벌) 구제 및 시장 수익(보장) 지원

- 과잉자본, 과잉부채 청산에 따라 부채위기 발생

⇒ 취약차주 계층에서 파산 급증, 생활악화

⇒ 기업 파산 또는 구조조정으로 실업률 증가, 노동자 임금소득 악화

2) 재정정책 : 확장정책으로 될 것

- 현재는 재정준칙 또는 재정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 ⇒ 하반기 경제침체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확장재정이 불가피
 - ⇒ 이 때에도 **재정지출 방향이 재벌과 금융시장 구제(안정화)**에 맞춰질 것
 - **정부지출 확대** = 공공투자(민관합작) 확대 + 군비지출 확대 + 민간 소득지원
 - ⇒ **공공투자는 (한국판 뉴딜과 같이) 주로 독점기업의 시장 지원방향**
 - ⇒ **공공투자 형태가 민관합작으로 확대 : 민영화(재벌·금융자본 특혜)**
 - ⇒ 군비지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패권경쟁의 양상에 따라 확대 (대북관련?)
 - ⇒ 생색내기 식 민간 소득지원
 - 결국 **세수도 확대**해야
 - ⇒ 적자국채 발행이나 부자 증세는 최소화 할듯…그렇다고 간접세 인상도 어려움.
 - ⇒ 박근혜 처럼 담뱃값 인상, 교통단속 강화 같은 꼼수인상(꼼세)할 수도...

○ 노동시장 개악

- **(공공+민간) 임금체계 개편**
 - ⇒ **경쟁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임금체계. 임금감소 효과**
 - ⇒ 연공성 줄이고 직무·성과급 확대
 - ⇒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주 단위”에서 “월, 분기, 연간 단위”로
 -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확대
- **신기술과 노동유연화 결합 확대 : 규제개혁의 형태로**
 - 공적연금 개악

고용노동부
(2022.6.23)

우선 추진 과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노사합의에 기반한 선택권 확대	»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 이상으로 확대 검토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 마련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 지원
	임금체계 개편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	» 직무별 임금정보 제공, 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및 현장안착 지원 » 임금체계 개편 시 현장 애로사항 해소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제도개선 과제 검토

○ 미국주도 세계경제 질서재편에 결합

- “국익·실용의 관점에서 경제 안보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강화**” (경제정책방향 4대 기조 중)
 -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가
 - Chip4 참가 (확정적)
 - 나토+, QUAD+, AUKUS+, FIVE EYES+ 등 미국주도 군사동맹체 결합
 - 러시아 제재 동참 확대(무기지원 등)
 - 나아가 중국 봉쇄에까지 확장될 가능성(?)
- ⇒ 미국식 공급망 재편 계획에 적극 복무
- ⇒ 정치, 군사적으로는 한미일, 한일, 한미 동맹 강화

5. 대응과 과제

1) 신자유주의 금융화 및 부채 위기 확대

- 신자유주의 금융화 약화 또는 위기에 따른 부채 위기 확산
- 금리인상에 따라 취약 차주와 부실자본에 대한 자본 파괴 확대
 - : 영끌까지 했던 청년층이나 노동자 가계, 자영업 및 저소득층의 가계파산
 - : 금융화기제(떨감)로 들어가있는 연금기금의 축소 = 노후복지의 축소와 위기
- 신자유주의 금융화에 대한 대응 부재가 가져온 파괴적 결과

⇒가계 파산 및 노후 복지 축소 등에 대한 대응, 어떻게?

⇒보다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대응은?

2) 재벌 독점 심화, 기업이윤의 양극화

-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산업재편, 기후재편, 디지털 전환 등 전략적 지원
: 대기업 감세 및 국가투자 지원
- 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 대기업의 시장 진출 용이
- 대기업 중심의 선별적 규제, 선별적 구조조정 지원
- 대기업 특혜매각(민영화) : 공기업 자산매각, 민간중복영역(경쟁부문) 사업철수(매각)
-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대기업 독점이윤의 극대화 : 기업이윤의 양극화

⇒ 재벌독점, 독점이윤의 확대에 맞선 실질적 대안은?

3) 구조조정·정리해고(=실업 확대)와 일자리 2차 균열 확대

- 산업전환, 기후전환,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빈발
: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은 글로벌 구조조정의 영향을 직접 받을 것
- 디지털·산업전환, 가동률 축소, 기업파산 등 민간시장 일자리 축소 : 실업 확대
-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노동유연화 및 임금유연화 공세 확대
- 일자리의 2차 균열 : 불안정 일자리의 재균열, 알바(시간) 쪼개기, 플랫폼노동 확산
- 불안정 일자리의 조합으로 생계유지 : 투잡, 쓰리잡...

⇒ 산업재편·구조조정 국면에서 정리해고(투자철수) 대응은?

⇒ 이주노동 축소 및 이주노동에 대한 공격/공세 확대

⇒ 민간 일자리 축소와 불안정 노동 확산

4) 경제위기 속 임금(소득) 불평등 심화

- 임금체계 개악, 실업과 불안정노동 확산으로 전반적인 임금수준은 하향
- 경제위기 확대와 금리인상(중소자본의 영향)으로 최저임금인상은 제한될 가능성
- 임금 양극화 심화
: 인플레이션 속 독점대기업의 독점이윤(만) 확대 : 기업이윤(율)의 양극화
- 독점이윤의 재분배 = 주주환원과 함께 대기업-정규직 임금(성과급)상승, 노동시간단축(주4일제 등) 확대

⇒임금불평등 구조개선 또는 철폐?, 어떻게?

5) 저성장 속 기후위기 심화 확대

- 기후 재앙과 경기침체 속 GDP 손실과 생산능력 저하의 문제
- 세계경제질서재편과 패권 경쟁의 격화 및 기후위기의 심화
- 노동착취도 증가와 임금 손실 등 빈곤 심화, 부채위기의 가중

⇒저성장, 경기침체 속 기후정의운동의 대응은?

6) 글로벌 시장재편과 신냉전 구도 : 동북아 위기 고조

- 전쟁과 공급망 재구성 등 세계시장 재편을 염두에 둔 신냉전 구도의 형성
- 세계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시장 재편이 제국주의적 대결로 격화
- 한국정부, 미국 중심의 시장재편과 금융세계화에 편승
-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
- : 미-중 대결 심화, 자원경쟁의 군사화, 대만 위기 고조, 북핵위기...

⇒ 글로벌 시장재편과 동북아 위기 속 한국(노동자 민중진영)의 대응은?

[모듬토론]
N개의 기후정의
그리고 기후정의선언

발제 N개의 기후정의 주체들의 기후정의선언운동-가원(인권운동사랑방)

조별토론지

N개의 기후정의 주체들의 기후정의 선언운동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작년 4월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이 출범하면서, 세상을 바꿀 거대한 힘이 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동맹을 형성하자고 결의했습니다. 동맹이 조직 위에 함께 했던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에는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지구를 살리자’, ‘북극곰을 보호하자’를 넘어, 정부와 기업에 각을 세우며 ‘기후정의를 실현하자’, ‘체제’를 전환하자는 ‘급진적인’ 주장이 대중의 구호로 등장하였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임과 동시에 이제는 ‘기후정의’나 ‘체제전환’이라는 추상도 높은 구호의 내용을 촘촘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과제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문제로 좁게 이해되어오던 기후운동에 점점 더 많은 사회운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자본주의 성장체제가 야기한 위기의 한 단면이자 여타의 불평등, 재생산, 민주주의 위기와 상호연결된 총체적인 위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정의운동과 사회운동의 만남은 어색하기보다 당연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운동과 기후운동의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말하려고 할 때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성소수자, 농민, 장애여성, 이주노동자, 배달노동자,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청소년, 홈리스, 석탄발전노동자의 화두가 어떻게 기후정의의 문제로 연결되고 구성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속도와 경쟁의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술한 차별과 착취의 문제라는 사실은 감각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각 운동이 기후정의의 주체로서 연대 이상의 자기 과제를 확인하면

서 사회적 힘과 권력을 모아내기 위한 연속적이고 끈질긴 밀착업이 필요합니다. 체제전환을 위한 거대한 힘의 결집은 각 운동들의 요구와 과제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의 주체로 자기 운동의 과제와 요구를 재구성하고 반대로 자기 운동의 관점에서 기후정의를 재구성할 때, 기후 운동과 별개로 여겨지던 사회 운동이 서로의 연결을 확인하고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에산 투쟁이 기후정의운동의 요구로 재구성될 때, 공공임대를 늘리라는 요구나 과로에 시달리는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의 요구가 기후정의의 관점으로 재사유될 때, 추상적인 구호로서의 기후정의를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요구와 감각을 대중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정의동맹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4월에는 세종에서 대정부 집중투쟁을 전개하며 구체적 요구와 대안을 버리며 지난 924 기후정의행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격적으로 기후정의선언운동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영역과 의제, 주체들의 요구와 과제를 조직하는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9월에 있을 대규모 대중 집회 즈음하여 N개의 기후정의요구가 터져나오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먼저 각 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는 기후정의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의식을 교류하길 원합니다. 각 운동의 요구가 기후정의의 요구가 되고 투쟁 과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 틀로써 기후정의선언을 고민하고 여기 모인 우리가 선언을 만들고 이를 통해 기후정의의 주체를 세워가보자는 결의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있는 조별 토론을 위한 질문지

나는 ()를 하는 활동가다.

나의 운동에서 주로 함께 하는 사람들(나의 운동의 대중)은?

지금 나의 운동의 주요 과제는?

위의 주요 과제 중 기후정의와 가장 밀접한 의제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의제를 포함해 나의 운동의 주요 과제를 기후정의운동의 의제로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과 조건, 나의 운동과 기후정의운동 내에서의 논의가 필요할까?

기후정의를 나의 운동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과 조건, 나의 운동과 기후정의운동 내에서의 논의가 필요할까?

기후정의선언운동은 기후정의운동과 나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집중토론]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의 전략

발제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 에너지 그 이상이어야 한다 - 정록(기후정의동맹)

토론 1 박성울(홍천군 송전탑반대-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위원회)

토론 2 정학철(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토론 3 재임(빈곤사회연대)

토론 4 이태성(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토론 5 최재순(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 에너지 그 이상이어야 한다

정록 (기후정의동맹)

1. 기후정의동맹의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 무엇이었나?

2022년 4월 28일 출범과 함께 기후정의동맹은 ‘공공/민주/생태적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을 주요 활동 목표로 제시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왔다. ‘6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워크숍’, ‘7월 충남 당진 기후정의버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이드북 발간’, ‘8월 형재세 도입촉구 서명운동, 토론회, 긴급집회’, ‘9.24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쟁취 집회’, ‘11월 에너지 위기 국면, 기후정의운동 과제 모색 토론회’까지 기후정의동맹은 실새없이 달려왔다. 기후정의버스를 통해 발전노동자들과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를 함께 토론하고, 가이드북 발간 이후 전남, 홍천, 삼척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싸움이 어떻게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이라는 공동의 전망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후정의동맹의 에너지 투쟁은 1)기후위기 시대, 대안적 에너지 체제에 대한 전망, 2) 이를 실현시킬 대중운동 주체 조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었다. 올해 동맹의 에너지 투쟁 역시 이 두 축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조직되어 갈 것이다. 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전에 기후정의동맹이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라는 대안을 제기한 핵심적인 이유를 다시금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신자유주의적 녹색 전환은 실패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90년대 이후 탈냉전을 거치면서 지구화됐고, 이 시기 전세계 상품, 에너지 소비량은 급증했다.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절반이상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기인 지난 30년 동안 배출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는 지구온난화/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제기후체제가 작동한 때이기도 하다. 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95년 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까지. 이러한 국제기후체제의 실패는 흔히 선진국/개도국 대립, 국가 간 이권 다툼때문이라고 이야기되지만, 핵심은 배출권거래제, 탄소포집저장, 해외삼림조림, 녹색산업 육성(전기차)과 같은 기술주의, 시장주의적 해결책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자본투자에 기반한 시장주의적 해결책 속에서 ‘화석자본’에 대한 통제와 축소는 당연히 불가능했다. 즉 ‘신자유주의적 녹색전환’은 실패했다. 오히려 가장 기록적인 온실가스 배출체제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이 아닌 확장, 시장 논리에 가로막힌 재생에너지

신자유주의적 녹색 전환 기획의 핵심에 ‘에너지 전환’이 있다. 신자유주의적 녹색 전환의 실패는 ‘에너지 전환’의 실패를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은 코로나19로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021~22년에 다시 2019년을 넘어섰다. 전력부문에서 재생에너지는 크게 확대되어, 세계 전력생산에서 10.2%에 이르게 되었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더욱 크게 늘어나 석유, 가스, 석탄 사용량 모두 증가했다. 늘어난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는커녕 늘어난 에너지 소비의 보조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성장체제에 결박된 근본적 한계때문이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 고유의 문제때문이기도 하다.

유럽과 미국의 에너지전력체제는 90년대 이후, 전력시장구조개편을 통해 ‘시장화/자유화/민영화’ 방식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가의 다양한 지원과 보조금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육성하는 방식

이었다. 즉 시장화를 하니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투자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공적 재원을 사적 기업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본적으로 공적 지원과 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사회적 전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자, 시장화 방식은 한계에 부딪힌다.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하는 화석자본과의 불공정 경쟁,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출 문제가 불거졌다. 화석자본에 대한 통제와 급격한 축소,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가 시장경쟁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녹색 전환’의 실패는 한국의 기후운동에서 충분히 되짚어지고 있는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교훈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 ‘현실가능성’, ‘구체적인 과제’ 등의 수사를 달고 등장하는 요구들이 전혀 현실적이지도 새롭지도 않으며, 지난 역사 속에서 철저히 실패해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조금이라도 높이겠다며 PPA,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 시장 육성책에 매달릴 때, 돌아오는 결과는 에너지 시장의 팽창, 늘어난 에너지 소비, 정부와 시민의 돈으로 이윤을 쌓는 다양한 에너지 자본들일 것이다.

(2) 노동자, 시민, 지역에 대한 착취와 희생으로 굴러가는 에너지 체제를 끝장내자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는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작동 그 자체로 수많은 폭력과 고통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에너지 민영화 흐름 속에서 공공성을 망각한 채 수익성에 매달려 비용절감에 몰두해온 발전 공기업들은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 최근 정부는 30기의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발표했지만 8천 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책은 전무하다. 공공이 주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발전 공기업이 했던 역할을 핵발전과 민자발전사들에 내주겠다는 심산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에너지 체제 속에서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발전소와

폐기 시설이 인구가 적고 토지가 저렴한 농어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다. 서해안에는 석탄발전소가, 동해안에는 핵발전소가 집중되었다. 심지어 분산형 전력이라는 재생에너지조차 민간 사업자들이 땅값이 싼 농어촌 지역으로 대규모로 몰려들면서 일터와 삶터로서 농어촌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은 주요 소비지인 서울 수도권과 대규모 공단 지역으로 원거리 송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송전탑이 끊임없이 건설되고 있다. 기업을 위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정부와 한전이 나서서 주민들을 탄압하며 지역에 발전소와 폐기물 시설들을 만들어오더니, 이제는 민영화 사업방식으로 곳곳에 LNG발전소,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을 허가하면서 전국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정유사의 초과이윤, 화물연대 파업까지 에너지 문제는 사회전반을 뒤흔드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여러 외부 요인들이 분명 큰 작용을 했지만, 최근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사회의유지와 작동의 근간인 에너지가 단기적 이윤 중심의 시장변동에 노출되었을 때 겪게 되는 파괴적 영향이다. 결국 이윤과 가격에 따라 반응하는 에너지 체제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시민들에게는 극심한 생활고를, 독점적 지위의 석유자본에게는 역대급 이윤을 안겨주었다.

2. 그렇다면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은 충분한가?

‘에너지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자본들의 새로운 돈벌이가 되어가는 상황, 지역과 일터에서 난개발과 고용불안에 맞서 싸워온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기후정의동맹이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라는 ‘다른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나서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그런데 공공/민주/생태적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되고 있을까? 유토피아적 목표나 가치지향으로만 남아있는건 아닐까? 우리

의 대안이 이윤 체제에 맞서 싸우며 한발 한발 내딛을 수 있는 힘과 전망이 되고 있는지 묻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에 발 딛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 갈 ‘다른 길-경로’이기 때문이다.

(1)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 ‘공공성’이라는 체제전환의 무기 만들기

21년 전 발전, 가스, 철도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민영화 저지 파업’에 나선 것이다. 노동자들은 ‘사회공공성’을 외치며 민영화가 우리 모두의 삶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사회적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민영화 반대 투쟁은 공기업 매각에 혈안이 되어 있던 정부정책에 맞서, 국민들의 기업을 자본에게 헐값에 넘기려고 한다는 것, 그 결과 전기/가스/수도/철도와 같은 기본 인프라 서비스 요금이 대폭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성’은 공기업의 소유관계와 각종 요금 인상 문제로 집약되었다. 그 이후 역대 정부는 기업매각과 요금인상 문제는 가급적 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보장을 내걸고 여러 공공부문에 자본 투자를 적극 유치했다. ‘은밀한 민영화’였다. 그 결과 발전부문은 민자발전 비중이 30%에 이르고 발전 공기업들은 여느 사기업과 다를바없이 운영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자유주의는 우리에게 공공성이 양상한 기업 소유관계로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렇다면 20년이 지난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성’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윤이 아닌 공공/민주/생태적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꾀한다고 할 때 ‘공공성’은, 에너지는 존엄한 삶을 위해 모두에게 필요한 재화이자 권리임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자 원칙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사고팔아 이윤을 남기는 상품이어서는 안되고, 구매력에 따라 접근가능한 상품이어서도 안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공공성은 존엄한 삶을 위한 공동의 재화인 에너지를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지를 민주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화석연료/핵발전에 대한 축소와 통제,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 어디에 어떻게 발전시설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민주적 참여가 그것일 것이다.

‘에너지 공공성’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요구하는 관철시키는 사회적 투쟁이 이어지고 변화가 만들어질 때, 막연하기만 했던 ‘체제전환’으로 향하는 ‘경로’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체제전환을 향한 투쟁의 무기이자 가치인 ‘공공성’은 에너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택 역시 공공성 원칙에 따라 보급되고 사용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재화이다. 주거권은 존엄한 삶을 위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형태의 주택에 거주할 보편적 권리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거공공성이 없는 사회가 기후재난에 얼마나 취약한지 지난 여름에 확인했다. 단열/방열이 되지 않는 주거지에 거주하는 에너지 빈곤가구, 이상기후때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는 홈리스의 처지는 너무 당연하게도 주거권의 문제이다. 그러나 ‘공공임대내놔라’는 이미 기후정의운동이다. 교통/물류는 또 어떨까. 안전운임제 확대와 제도화를 요구하며 파업했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연대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파업의 위력에서 확인했듯이, 물류유통은 그 자체로 상당한 에너지 소비처인 동시에, 사회 전체적인 신진대사의 속도와 양을 결정하는 핵심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소득과 안전의 문제를 넘어, 기후정의와 공공성의 관점에서 물류유통 영역에 어떤 요구와 개입들을 만들어갈 것인지가 관건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위기의 시대에는 차별과 배제를 더 극심하게 경험했던 소수자운동이 기후위기 시대에 ‘평등과 연대’를 기본원리로 삼는 ‘공공성’에 접속해 전환의 경로를 만들어가는 걸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다.

온실가스 배출과 직결되는 에너지 부문은 기후정의운동의 핵심 전장이다. 동시에 어떻게 탈탄소 전환을 만들어갈 것인가, 전환의 경로, 투쟁의 방향타를 무엇으로 잡고 갈 것인지에 있어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공공성’을 기치로 구체적인 투쟁과 요구들을 조직해가는 에너지 지 체제 전환 투쟁은, 기후위기 시대 체제전환을 위한 싸움의 감각과 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2)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 지역과 일터를 넘어 공동의 문제로

수많은 에너지 발전/폐기물 시설들이 농어촌 지역에 들어서면서 전국 곳곳에 지역대책위들이 꾸려져 이에 맞선 대응투쟁들을 벌여오고 있다. 30기의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까지 진행되며, 발전 정규/비정규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나 당장 맞서 싸워야 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 속에서 정부와 공기업, 지자체, 에너지 자본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각각의 투쟁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왜 함께 싸워야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인지가 분명해지고 이는 투쟁 주체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그동안 기후정의동맹이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을 벌이면서 토론회, 간담회, 집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투쟁 당사자들의 위치에서는 당장의 현안을 넘어 ‘에너지 체제’에 맞선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게 당면 투쟁에 어떤 도움이 될지, 체제에 맞선 투쟁이라는 게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체제’를 문제삼고, 대안적인 에너지 체제를 주장하는 투쟁의 과정은 각각의 투쟁들이 개별 지역이나 일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얽여 있는 공동의 ‘에너지 체제’의 문제이고 투쟁임을 알리고 조직하는 과정이다. 그럴 때 지역의 작은 투쟁일지라도 이는 ‘지역’ 사안이 아니라 이윤 체제에 맞서 대안적인 에너지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금지를 가질 수 있고 미안한 부탁이 아니라 당당하게 연대를 조직할 수 있다.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장의 투쟁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연결해갈 수 있는 전망이자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3. 4월, 대정부 투쟁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공유화/공영화’를 전면화하자

기후정의동맹은 지난 ‘9.24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쟁취 집회’에서 처음으로 함께 모여 에너지 체제 전환을 외쳤다. 현재의 이윤 체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삼 확인했다. 4월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에서 ‘기후정의 대정부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이윤 에너지 체제의 총괄자 역할을 하는 정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맞서는 운동의 힘을 사회적으로 과시하고 각인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후정의운동이 제시하는 에너지 체제 전환의 구체적인 요구로서 ‘재생에너지 공유화/공영화’를 내걸고 이를 전면화하자.

‘에너지 공공성’이 우리가 에너지 체제 전환의 경로를 밝혀가는 투쟁의 무기라면, 재생에너지 공유화/공영화는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공공성을 실현시켜가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민간자본이 건설한 재생에너지는 ‘공유화’ 조치를 통해 수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하고,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재생에너지는 공공이 중심이 되어 건설하고 운영하는 ‘공영화’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공공부문이 쥐고 있는 화력발전/핵발전에 대한 통제와 축소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대폭 확대라는 방향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공영화를 통해 ‘일자리 vs 탈석탄’이라는 허구적인 부당 대립을 넘어서고, 지역 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9.24 행진에 함께 했던 기후정의를 외쳤던 수많은 이들에게 4월 대정부 투쟁을 제안하고 조직하자. 기후위기에 절망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해하는 많은 이들에게, 부정직한 구조에 가담하지 않겠다며 개인적 실천을 결의한 이들에게 ‘공공/민주/생태적 에너지 체제’라는 정의로운 구조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하자.

지금 당장 기후정의! 홍천의 투쟁

박성율(홍천군 송전탑반대-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위원회)

생태계와 공동체 파괴없는 에너지 공영화

정학철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자!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최근 10년간 용도별 전력소비량 비중을 보면 산업용이 53.8%, 상업용이 32.7%, 주택용이 13.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전력소비량의 87%를 차지하는 기업들에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차등 적용한다면 전국의 공장과 건물 위는 태양광 패널로 가득할 것이다.

지역사회부터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자!

기업과 수도권이 무조건 에너지를 자립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수도권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을 파괴하는 방식과 돈벌이 수단이 된 에너지 정책을 바꾸자는 것이다. 기업과 수도권에서도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부족한 전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고 공영화를 실현하자!

에너지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필수요소이므로 에너지 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아니라, 생태보전형, 경관보전형,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에너지를 개발하고 운영, 분배하는 전 과정은 정부와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에너지 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 국민이 동의하는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정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발전산업의 민영화 현황

최재순(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민영화 방향 : 시장 개방을 통한 민영화

○ 민영화는 자산매각 등 소유권 이전에만 한정되지 않고 공공서비스 기능의 민간 이전까지 포함됨. 경쟁체제의 도입 명분으로 전력시장 개방 등을 통한 시장 개방을 통한 시장으로의 기능 이전 등이 이러한 민영화의 주된 방식임.

○ 시장개방형 민영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전반의 주된 흐름임. 에너지 분야 국정 과제는 목표부터가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으로, 이를 위해 LNG 민간 직수입 확대, 직수입 자간 국내 재판매 허용, 전력 PPA 허용범위 확대, 망 중립성 제고 등 공격적인 민영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발전자회사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중단된 상태이나, 그 이면에는 시장참여 확대를 통한 발전산업의 민영화가 계속 진행되어 민간자본 발전설비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40% 점유하고 있음.

발전설비 민간발전사 점유율 변동 추이

단위 : MW

구 분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합계 계
	발전설비용량	비율	발전설비용량	비율	
2011.12	67,003	84.4%	12,339	15.6%	79,342
2012.12	68,848	84.2%	12,957	15.8%	81,806
2013.12	70,845	81.5%	16,124	18.5%	86,969
2014.12	72,305	77.6%	20,911	22.4%	93,216
2015.12	73,282	75.0%	24,367	25.0%	97,649
2016.12	79,217	74.8%	26,649	25.2%	105,866
2017.12	82,132	70.3%	34,775	29.7%	116,908
2018.12	81,362	68.3%	37,729	31.7%	119,092
2019.12	83,672	66.8%	41,665	33.2%	125,338
2020.12	83,854	64.9%	45,338	35.1%	129,191
2021.12	82,459	61.5%	51,560	38.5%	134,020
2022.06	81,249	60.5%	52,988	39.5%	134,237

○ 현재 전력시장(발전분야)의 민영화 상황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을 깨고 민간에게 개방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돈 안 되는 발전 분야는 계속 공기업이 떠안고, 돈이 되는 전력산업 분야는 민간 참여를 통한 민간 자본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제도를 서서히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발전사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많은 민간발전사가 전력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 민간 기업들의 2022년 9월말까지의 실적을 확인하면, 역시나 한전의 기록적 21.8조 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민간발전사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내고 있다. 다만 전수 조사하려 했지만, 분기 보고서를 발행한 회사가 아래 7개 회사만 있어서 일부의 자료만 비교하였다.

2022년 9월말 실적 기준 민자발전소 발전량, 매출액 및 영업이익

회사	발전소명	발전량	발전량비중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율
GS EPS(주)	당진복합	6,997,225	1.60%	1,705,523,226,921	496,601,379,850	29.12%
SK E&S(주)	광양복합	4,941,449	1.13%	926,774,563,466	228,618,536,716	24.67%
GS파워(주)	안양열병합/ 부천복합	9,386,539	2.15%	1,408,894,480,520	250,181,334,798	17.76%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에너지	8,076,376	1.85%	2,485,450,362,169	206,346,810,648	8.30%
파주에너지	파주문산복합	6,354,313	1.46%	1,335,931,081,914	249,939,358,127	18.71%
평택에너지	오성복합	2,615,082	0.60%	656,192,086,066	45,191,386,710	6.89%
에스파워	안산복합	3,985,701	0.91%	811,681,086,820	46,459,687,666	5.72%
합계		42,356,684	9.71%	9,330,446,887,876	1,523,338,494,515	16.33%

* 작성기준 : 발전량(전력통계월보·한전발행), 매출액/영업이익 : 전자공시시스템

발 전 자 회 사 (22년 9월말까지 발전량)								
양수	석탄	유류	가스/복합	집단	원자력	신재생	기타	합계
2,760,337	124,627,268	567,090	35,728,618	2,408,055	130,683,359	1,125,571	53,155	297,953,454
0.6%	28.6%	0.1%	8.2%	0.6%	30.0%	0.3%	0.0%	68.4%

민 간 발 전 회 사 (22년 9월말까지 발전량)						전체 발전량 (22년반기MWh)
석탄	복합	집단	신재생	기타	민자 합계	
14,543,046	57,437,779	33,905,559	31,145,747	982,508	138,014,639	436,202,971
3.3%	13.2%	7.8%	7.1%	0.2%	31.6%	100.0%

위 7개의 민간발전사의 22년 9월말까지의 실적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영업이익률이 평균 16.3%에 이르고 있다.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전 및 발전공기업은 적자를 핑계로 부채관리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하여, 신규 투자를 제약하고, 축소하고, 부채축소라는 명분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진출을 억제하리라 본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빈자리를 민간 자본이 막대한 독점적 이윤을 취할 수 있게 보이지 않게 민영화를 하려 할 것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전력시장에 참가한 민간기업들이 왜 그리 전력시장 참여를 바랐는지는 9월말 실적을 보면 답이 나온다. 9월말 실적발표를 진행한 위 7개 회사 이외는 분기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7개 회사의 발전량 비중을 보면 9.71%이다. 9월말 민간발전사의 발전량 비중이 31.6%인 상황을 고려해 추정해보면 적어도 두배의 수치인 3조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연말까지 추정하면 연간 4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현재 또다시 추진되는 민자발전소 전력시장의 참여를 통해 민간자본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 또 다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소용없다 - 제대로 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제정위한 공공운수노조의 입장

이태성(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일(11.22.) 법안심사소위에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심사를 재개한다. 하지만 환노위 논의가 이대로 가다간 ‘대책 없는 대책’만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방향이 뿌리부터 흔들리며, 자칫 ‘정의 없는 전환’으로 귀결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그에 못지않게 더욱 중요하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제대로 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해 아래와 같이 원칙을 제시한다.

2. 첫째, 해고는 당연하다는 잘못된 전제를 걷어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부만 살려주겠다는 ‘대책’ 수준의 법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는 ‘전환’ 목적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후위기로 고용 위협에 놓인 노동자들을 정책과 입법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시혜가 아닌 권리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민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은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빼앗는다. 돈이 없으면 전기도 못 쓰는 사회가 되서는 안 된다. 넷째,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집행과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현재 환노위에서는 노동부 산하의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 일자리 전환 정책의 심의-의결 권한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의 동등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다. 또 이주대책과 사회복지 등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할 사회대책 논의도 불가능하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첫걸음이다.

3.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2만5천명 중,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된 발전노동자들은 이처럼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옥 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탈탄소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정부의 대책이라곤 취업교육과 이직알선이 사실상 전부다. 이런 정부 대책은 전혀 효과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미 실패한 대책을 다시 결정하는 오류를 겪지 말아야 한다.

4.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환노위에서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논의가 화력발전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책임-공공성 강화 원칙 아래 진행되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2022. 11. 2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구분	임의위원	이수진위원	강은미위원	노동부 입장
심의·의결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 설치 : (위원장) 정부위원 중 위원회 투 표로 선출 : 위원: 정부6, 일하는사람6, 사용자 6, 지역업자등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정책심의회 활용 고용정책심의위 신하에 전문위원회 설치 등의 방식으로 개편
업종·지역 위원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업종·지역별 위원회」 설치 : (목적) 구체적인 정책계획 수립 및 이행 : (구성) 15인 이내 : 정부2, 노동조합1, 비노조1, 사용자1, 협력업체1 등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영향 사전평가 지원기관 설치 지원전담기관 설치·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전환 분석센터(고용정보원 내) : 인력수요 전망분석 노동전환 지원센터 : 수요조사, 컨설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 : 인력수요 전망, 일자리 전환 프로그램 개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기관 설치 등의 다만 특정 기관에 특정 센터를 규율하지 않고, <업무수행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정도 문구로 규정 분석센터는 고용정보원 내 노동전환분석센터 설치 의견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 구조혁신센터에 설치 의견 필요 경비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근로자대표 공동결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는 기후위기·디지털 변화 관련 중요 계획 결정 → 근로자대표와 공동결정 (미결정시 변경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은미위원안은 노동관계법과 상충 (산업전환에 대해서만 노동관계법 예외 조항을 둘 수 없음)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5년 주기) 지원 방안(훈련, 전직, 재취업, 생계안정, 채용 등) 세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수요 전망 및 분석 지원 방안(훈련, 전직, 재취업, 생계안정, 채용 등) 세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일자리·지역 등 전망 지원 방안(훈련, 전직, 재취업, 사회보장, 지역업자 등) 세계 지원 	

반빈곤운동과 기후정의

재임(빈곤사회연대)

반빈곤운동과 기후정의

빈곤사회연대는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쪽방 주민, 거리 홈리스를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시혜나 보상이 아닌, 이윤중심 체제·불평등한 체제를 거부하고 평등한 길을 마련하는 투쟁이 필수적이라 여긴다.

주거권은 필수적인 권리인 동시에 한국사회에서는 쉽게 등한시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작년 여름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에서 비롯된 수해참사가 있었다.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재난은 반지하 등 비주택·비적정 주거를 재난의 조건으로 조명하게 만들었다.

그간 빈곤사회연대는 복지제도 개선·확대, 강제철거 반대 등 빈곤층 생존권 쟁취를 중심으로 활동해왔기에 기후정의 운동과 다소의 실천적, 심리적 거리가 있었다. 가까운 활동이라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겨울마다 발생하는 에너지 빈곤층 참사에 대응하는 활동이 있다

코로나19와 폭염, 폭우, 혹한은 반빈곤운동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려주었다. 더불어 주거권 확보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와 같은 기존 반빈곤운동의 요구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조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해 말 924 기후정의행진, 주거권 대행진, 빈곤철폐의날 행진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재난 불평등’으로 삼고 참여를 조직했다. 또한 빈곤철폐의 날을 기점으로 조직한 <불평등한 기후재난의 시대, 싸우는 사람들의 안부를 묻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빈곤활동가와 당사자가 체감하는 기후정의에 대해 듣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간 반빈곤운동이 기후정의와 다소 서먹한 사이였다면, 반지하 수해참사와 이어진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을 거치며 주거권과 빈곤층의 생존권이 기후위기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체감하고, 말할 수 있었다.

빈곤층의 에너지 문제

2018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로 일곱명의 주민이 사망했다. 개인 난방 기구에서 비롯된 불이 미로같은 고시원 구조 속에 크기를 키웠다. 그러나 참사 이후에도 (그리고 그 훨씬 이전부터) 쪽방, 고시원에 사는 이들은 날씨의 위협, 그리고 충분치 못한 냉·난방 속에 계절을 난다. 2022년 겨울, 민간개발 사전퇴거 조치로 스산한 창신동 쪽방촌에서는 몇몇 주민들이 가스 버너로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울지역에는 총 다섯 개의 쪽방촌이 있다. 여인숙이나 여관으로 활용하던 건물 내부를 구획지어 두 평 남짓한 방으로 쪼갬 형태가 대부분이다. 수십명의 주민이 하나의 화장실을 나누어 쓰지만 월세는 26~31만원에 이른다. 취사 가능한 부엌은 없기에 각자 방에서 휴대용 버너를 이용해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자동 주민협동회의 파악에 따르면 1년에 약 720명 가량의 주민이 8,000개 가량의 부탄가스를 이용한다. 일주일에 평균 4개 사용, 총 판매량의 40%가량이 겨울에 소비 된다. 끼니때가 아니더라도 따뜻한 음료를 위해, 몸을 씻을 더운 물이 필요해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잦다.

에너지 빈곤가구는 ‘가구(가처분)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 취사, 조명 등과 같은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정의. 이에 따르면 에너지빈곤가구는 2016년 7.2% 이 정의의

문제는 에너지에 관한 관점도, 빈곤에 관한 관점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 그렇다면보니 현재 에너지 빈곤가구가 누구인지, 에너지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움.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 복지사업은 크게 연료비지원, 에너지요금할인, 효율개선 및 보급사업으로 구분 됨. 이 중 에너지 요금 할인이 전체 지원규모의 75%를 차지.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에는 해당 바우처 이용자와 에너지 빈곤층이 일치하지 않음. 소득기준에 더불어 세대원 특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임. 쪽방이나 고시원 등 개발 계층기가 달라지지 않은 가구는 사용할 수 없음.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빈곤 문제는 몇 가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다만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의 지나치게 협소한) 에너지 감면 할인, 바우처 제도의 확대와 적정에너지비용 보조를 활성화 할 필요 있음. 장기적으로는 주거권 보장과 함께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의 접근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속에 에너지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함.

더불어 함께 인지해야 하는 것은 주거취약계층의 문제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 자체를 문제로 지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됨.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으로의 전환은 필요하지만 빈곤층의 저렴주거지를 비효율 에너지 공간으로 지목하면 현재 주택 시장의 불균형 때문에 오히려 빈곤층에게 필요한 주거지 자체를 구축하는 효과 발생시킬 수 있음. 열악함을 강조하다가 그곳에 사람이 산다는 사실이 망각해서는 안 됨.

[주제별 병행세션]
함께 묻고 답하는
기후정의 이야기

세션1)

종차별주의와 동물의권리

세션2)

기후정의운동과 '지역'

세션3)

관행적 기후행동을 넘어서려면
(직접행동 등 새로운 전술의 모색)

세션1) 종차별주의와 동물의 권리

발제1. 기후정의와 동물해방-동물해방은 어떻게 기후정의운동의 언어와 실천이 될 수 있는가(되어야 하는가) - 채효정(기후정의동맹)

발제2. 종차별주의와 동물의 권리, 비건실천- 왜 내 언어가, 실천이 되기 어려운 걸까 -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읽을거리1. [위커스사전] 동물 - 채효정(기후정의동맹)

읽을거리2. 상품을 먹다- 탈육식과 동물해방운동 - 채효정(기후정의동맹)

기후정의와 동물해방-동물해방은 어떻게 기후정의운동의 언어와 실천이 될 수 있는가(되어야 하는가)

채효정(기후정의동맹)

1. '동물'과 '생명'
2. 기후정치와 동물정치 - 지금 필요한 정치적 상상력
3. 동물보호와 동물해방 - 자유주의적 '동물권' 담론을 어떻게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인가
4. 지구공학과 생명공학은 공명한다 - 콩고기와 클린미트라는 선택 대안을 넘자
5. 후기 자본주의의 트로이카 - 정보·통신, 금융, 생명 자본주의는 지구 데모스 공동의 적
6. 비건 실천 - 채식이나 육식이나 식단 선택을 넘어 육식자본주의에 맞선 저항으로
7. 노동계급은 동물계급이다 - 동물로서, 동물과 함께 하는 기후정의운동을 전개하자

1. 동물과 생명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성스럽던 것들이 동물이라고 말할 때는 뭔가 (복)잡스러워진다. 왜 동물이라고 말하는 순간, '신성함'이 사라지는가.(반대로 동물권 활동가들에게는 '동물'에 신성함이 부여된다) 생태주의 운동가들이나 기후정의운동 활동가들에게 '생명'은 운동의 중심에 위치하는 용어다. 반면 '동물'은 그렇지 못하다. 철학에서의 '존재'에 대한 물음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경이로움에서 시작된 것이듯, 생태학에서 '생명'도 그와 같은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동물'은 말 그대로 혼(anima)을 가지고 용맹하게(animus) 살아 움직이는 존재(zoon; living being)임에도, 그런 철학적 아우라도 없고 생태학적 근본 개념으로 사유되지 못한다. 일례로 '생명정치'는 정치적 존재를 '벌거벗은 생명'으로, 다시 말해 동물 상태로 되돌리는 권력의 통치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동물화’는 여전히 ‘낙하’와 ‘퇴보’, 그리고 ‘열등함’의 은유다. 존재의 위계는 기독교를 비롯해서 가부장제 철학 계보에서 부단히 강조되어온 것이지만 인간 정체성(인간임)을 ‘동물이 아님’을 통해 규정하고, 동물을 기계나 사물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인간의 반대로 표상하며, 동물성이 인간에 대해 뚜렷한 열등성의 표식이 된 것은 근대의 사건이다. 동물인 인간, 동물에 가까운 인간, 인간 속의 동물성이 부정되고 그것이 극복되어야 할 자연 본성으로 이해될 때, 자기 속의 동물(자연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자는 지구의 지배자로 등극한다. 대신 경제학은 새로운 자연본성(그러나 인간 외 다른 동물들에겐 존재하지 않는)을 유일한 인간본성으로 인정하고 정당화하는데, 그것은 욕망(탐욕)이다. ‘끝없이 욕망하는 인간’은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고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낸 인간상이다. 새로운 인간(부르주아)은 배부르면 먹지 않는 동물을 마침내 극복한다.

2. 기후정치와 동물정치 – 지금 필요한 정치적 상상력

그런 점에서 기후정의운동은 동물이 지구에서 거주하는 법, 지구를 탕진하지 않고 거주하는 법으로서 ‘동물-되기’를 운동의 실천론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후정의 개념을 기후위기 피해자와 약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 개념으로 국한해선 안 되듯이, 우리는 ‘기후정치’라는 용어 역시 기존 지배세력이 주도하는 지구관리 시스템, 기득권 엘리트 집단의 합의 체제로서의 ‘기후 거버넌스’와 구별해야 한다. 기후정치는 기후위기를 정치적 문제로 만든다. 기후위기 당사자들, 최일선 존재들이 전면에 나서고 대안적 정치세력이 되는 권력주체와 권력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외부 환경으로 설정되어 있던 ‘기후’를 정치적 문제로 만들고자 한다. ‘기후’라는 과학 용어에 감각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현실로 만드는 존재는 바이러스, 박쥐, 메뚜기, 꿀벌 같은 동물들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는 68년의 구호는 공과 사의 분리 패러다임을 해체했다. 이제 이 구호는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가장 동물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다’로 다시 쓰여 자연과 정치, 동물과 인간의 이분

법을 허물어뜨려야 한다. 기후정치도 동물정치도 기존의 언어 체계, 상징체계로는 다 말이 안 되는 말이다. 기후에는 정의도 불의도 없다. 그러나 ‘기후정의’란 용어가 기후위기를 둘러싼 평등과 불평등, 정의와 불의를 경계짓는 분리선(또는 전선)을 만들어냈듯이, ‘동물정치’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적 전선을 만들어낸다. 이를테면 동물의 언어(신호)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3. 동물보호와 동물해방 - 자유주의적 ‘동물권’ 담론을 어떻게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인가

오늘날 동물권 운동은 크게 두 가지의 노선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동물보호와 동물해방.(물론 동물해방이라 쓰고 동물보호라 읽는 경우도 많다) 똑같이 동물권을 외치지만 이 두 노선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전자의 동물권이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안에서 강자(인간)가 약자(동물)의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한다면 후자의 동물권은 권력을 다시 구성하고 수립할 것(참정권)을 요구한다. 이 둘 사이의 거리는 권리와 권력의 간극만큼이나 크다. 우리는 기존의 권리 확장이 권력 구조를 바꾸기보다 권리 대상을 확장하거나 한 집단의 권리를 억압함으로써 다른 집단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성찰해야 하고, ‘동물권’도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가 분배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간의 권리를 동물로 확장하는 논리 방식은 부르주아의 권리를 프롤레타리아에게도 나눠주거나 남자의 권리를 여자에게도 일부 허용하는 방식, 서구의 권리 개념으로 비서구로 확장 적용하는 것과 상당 부분 유사하게 전개된다. 권리의 증진이 그 자체로 권력을 만들거나 해방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루즈벨트 뉴딜이 백인남성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킨 대신 흑인과 여성의 권리를 억압했듯이, 서구 사민주의 국가들에서 내부의 노동권의 확대가 외부의 노동 착취와 연결되어 있듯이, 시민권이 비시민권자의 규정과 권리 없음을 전제하고 있듯이, 권리가 사적이고 특권적인 것이 될 때, 권리는 다른 권리들과 충돌한다. 동물권이 인권과 충돌하기도 하고 채식권이 노동권과 충돌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대립 구도를 단순화하거나, 쉽게 빠져들지도 않아야 하며, 이해 가능한 설명 방식을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구 사회에서 발전해온 권리 개념(특히 소유권에 토대한 법적 권리)과 서구 시민들이 비인간 동물들과 맺는 관계보다, 전 자본주의 사회와 비서구 지역에서 민중들이 동물들과 맺는 관계의 양식들(인류학적 양식들)에 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때 동물해방운동은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운동, 농민 운동, 민중운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콩고기와 클린미트 - 지구공학과 생명공학은 공명한다

기후위기도 상품으로 남아채는 것이 자본이다. ‘기후를 팝니다’도 가능한데 ‘채식을 팝니다’야 말해 무엇하랴. 채식주의자는 비건 실천 과정에서 반자본주의자가 될 수도 있지만 기술주의자, 시장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에 대한 시장주의적 기술주의적 대응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비건인 기후정의 활동가라면 콩고기와 클린미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동물의 권리와 해방을 빙자한 채식 상품들이 개인적인 소비실천으로 우리를 이끌 때, 동물권 옹호와 비건 실천이 지난 환경운동의 패배적 전철을 따라 에코백, 머그컵, 플라스틱 제로, 친환경 웰빙, 녹색 펀드, 탄소 중립 상품으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동물해방운동이 불평등 체제를 바꾸는 급진적 정치운동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5. 후기 자본주의 트로이카 - 정보·통신, 금융, 생명 자본주의는 지구 데모스 공동의 적

글로벌 식품생산 시스템에 대한 저항은 동물해방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공통 과제다. 공장식 축산업의 현장만이 아니라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제약, 육종, 가공, 유통, 금융산업 전체가 ‘육식 자본주의’를 구성하고 있다. 육식 자본주의는 과학, 기술, 정보통신, 금

용, 물류를 장악하고 생명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여 먹어치우는 육식 산업 모델이 전 산업 분야, 전 사회적으로 적용된 후기 자본주의의 고유한 양식이다. 생명(에너지)을 낭비하고 탕진하는 - 죽여서 먹어치우는 - 육식자본주의를 인간에 대해서 명명할 때는 '식인 자본주의'라고 불린다. 살아있는 생명으로부터 에너지(노동/역량/상품/고기)를 추출하는 이 모델은 돌봄 없는 약탈 경제를 대표한다. 에너지 산업은 육식 자본주의의 표본이다. 사라진 아마존 열대 우림의 90%를 소, 대두, 팜유가 먹어치웠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경계 지대인 숲이 얇아진 구역에서 발생했다. 시장 우생종을 위한 교잡과 육종은 생태계 면역력과 회복력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육식 자본주의가 계걸스럽게 먹어치운 지역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과 그대로 겹친다. 후기 자본주의에서 성장을 지탱하는 세 축은 정보통신, 금융, 그리고 생명산업이다. 산업혁명과 화석연료는 탄소배출의 시작이지만, 거기에만 주목하면 후기 자본주의 트로이카가 만들어낸 가공할 파괴력과 폭력성은 쉽게 간과된다.

6. 채식이나 육식이나 식단 선택을 넘어 육식자본주의에 맞선 저항으로

어떤 이유에서 비건이 되었건, 비건으로 살아가려 마음먹는 순간부터 슬한 기성 체제의 장벽에 부딪친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사회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이 없을 때 비건 실천은 결국 각자의 정체성 인증이나 개인적인 소비 실천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문제를 인식한 각자가 개인적 실천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사회를 변혁할 운동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 그 또한 기후정의운동의 중요한 시작점이 아니었나. 우리는 동물해방운동을 통해서도 그런 장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있는 동지들과 적극 교류하고 연대하며 반육식 반자본주의 반신자유주의 기후운동의 헤게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때 비건 실천을 포함한 동물해방운동은 '무엇을 먹느냐' '육식이나 채식이나' 하는 식단 선택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먹는 존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사유하도록 하며, 존재로부터 삶을 박탈하고 생명을 채굴하고 낭

비하는 육식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후정의 운동에서도 중요하고도 필요한 세계관의 전환이다.

7. 노동계급은 동물계급이다 - 동물로서, 동물과 함께 하는 기후정의운동을 전개하자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중세계에서는 귀족과 공유하는 부분(노모스)보다 주위의 동물과 공유하는 부분이 더 많다. 이러한 동물-인간 간의 근친성은 나이, 젠더, 지역, 연령에 따라서도 나타난다. 닭장에 갇힌 닭이 자신과 같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나, 암소들의 강제 임신과 출산에서 출산 기계처럼 대접받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여성들이 동물권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지하는 것과, 기후정의운동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그와 무관하지 않다. 이시무레 미치코의 르포 소설 '신들의 마을'에 나오는 일본의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은 도시에서 온 양복 신사들이 쓰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의 일본어는 외국어처럼 낯설지만, 산, 바다, 들판에서 같이 살고 있는 동물들이 하는 몸짓과 눈빛은 고향말처럼 익숙하게 잘 들린다. 산업이 기계화 되기 이전까지 노동자의 몸은 늘 동물의 몸과 연결되어 있었다. '사유하는 인간'과 대비되는 '노동하는 동물'은 노동과 동물을 동시에 비하한다. 그러나 지배계급이 복종시키기 위해 비하한 언어를 피지배자들이 재전복하고 재전유한 사례를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새끼 낳는 자들을 뜻하는 '프롤레타리아'는 '짐승 같은 놈들'을 칭하는 고대 언어에서 유래했지만, 마르크스는 이 말에 계급성과 주체성을 부여했고, 노동자들은 '생산자'라는 자부심을 불어넣었다. 주인들은 복종시키기 위해 성서를 읽혔지만 노예들은 평등 사상과 해방의 언어를 찾아냈다. '동물'에 대한 재해석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를 다시 만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다. 동물은 지구의 생명 존재를 통칭하는 의미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 동물의 반대말은 식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그것은, 죽지 않는 것, 신, 기계(기술), 자본이다. 지구의 한계는 흔히 공간의 한계로 표상되지만, 생태 한계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간적인 것

이며 순환의 단절이자 동물적인 것의 말소다. 오늘날 노동자와 동물은 삶을 박탈하고 살아있게만 만드는 생명자본주의의 케이지 안에 함께 갇혀 있다. 노동해방과 동물해방은 다른 것일 수 없다. 기후위기를 불러온 주범이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동물을 학살하고 멸종시킨 주범이고, 노동자들로부터 생명을 앗아가는 주범이다. 동물인 인간인 우리, 이제 ‘비인간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로서, 동물과 함께 기후정의운동과 동물해방운동을 전개하자. 자본의 착취로부터 여성해방 없이 노동해방 없고, 동물해방 없이 인간해방 없다.

종차별주의와 동물의 권리, 비건실천- 왜 내 언어가, 실천이 되기 어려운 걸까

정록(기후정의동맹/인권운동사랑방)

0. 들어가며

기후정의운동에 ‘동물의 권리’가 기입되어야 한다고, 이 세계를 규정하는 권력/폭력으로 ‘종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활동가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동시에 섣뚱 이에 동의하기 어려우면서도,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지 못한 채 거리감을 느끼고 (불편한) 감정들을 경험하는 나 같은 활동가들이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규정’하고 ‘판단’해버릴 것이다.

이 메모는 기후정의운동을 하며 만났던 동물권 활동가, 비건실천을 하는 동료들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작은 응답이다. 여러모로 부끄러운 응답이지만, 어디까지나 ‘나의’ 관점/위치에서 ‘동물의 권리/비건실천’에 대한 판단과 경험을 담아보았다. 주로 왜 거리감을 느끼는지 나의 언어와 실천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메모를 적어보았지만, 이 역시 동물권 활동가들이 제기한 질문 덕에 가능한 것이다. 자연/환경/생태/생명/인간이라는 질문에 직면하기. 이 토론을 통해 명쾌한 결론이 아니라 각자의 질문을 하나씩 품고 가면 좋겠다.

1. 정치철학적 차원 : 주체, 권리, 타자

-종차별주의, 동물의 권리는 누구의 언어인가?

‘~중심주의’는 근대 이후 ‘주체’의 위치에 지배권력의 행위자를 두고 타자를 대상화하면서 착취/수탈/폭력/관리의 대상으로 놓는 권력의 양태를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중심주의’가 ‘종차별주의/동물권’과 결합되어 사용될 때 이는 주체의 위치와 권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존재’의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나에게 이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생태적 관계를 맺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생태주의’의 문제설정과는 다르게 다가온다.

오히려 인간의 위치와 행위성을 분명히 하고, 인간이 직면하는 조건이자 타자인 ‘자연’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지를 대면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내게 ‘인간중심주의’는 생태주의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진지하게 대하게 된 언어가 되었다. 더 나아가 인간은 결코 ‘생물종/단독자’로 자연과 대면하지 않는다. 지금 자연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종’이 아니라 인간이 대상이자 주체로서 조직한 ‘자본주의’라는 구조이다. 그럴때 ‘종차별주의’는 문제의 원인이라기보다 적절하게 차용되지 못한 표현으로 느껴진다. 종차별주의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기때문에 결국 인간공동체의 정치와 윤리를 동물로까지 확장하자는 기획으로 ‘동물권 운동’은 나아갔다.

-인간공동체의 정치와 윤리를 동물로 확장하자는 기획에 대해

종차별주의/동물의 권리 관점에서 제기된 인간중심주의 비판이 오히려 ‘주체와 권력’의 문제를 진지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초월적인 태도처럼 느껴졌다면, 인간공동체의 정치와 윤리를 동물로 확장하자는 기획은 반대로 지나치게 인간중심적인/의인화된 기획으로 다가온다. 그런 점에서 인간사회가 타자/자연과 어떻게 대면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기획으로 나에게 ‘동물권’은 큰 울림이 없다.

한편 이러한 동물 의인화에 대한 비판은 꽤 광범위하고 오래된 비판인 것 같다. 의인화가 아니라 동물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과 관계맺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방식이 왜 ‘동물의 권리’여야 할까? 인간은 동물에게 어떻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가? 권리가 부여되면 동물은 우리 앞에 주체로 서게 되는가? 권리는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부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나의 인권운동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난감한 질문이 계속 만들어낸다. 동물은 인간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가? 동물 공동체에 인간은 어떻게 참여가능한가?

동물권은 결국 인간이 동물에게 부여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는 동물과의 직접적인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인간에게 ‘동물권’을 규범으로 인식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럴 때 다시 떠오르게 되는 질문, 왜 동물인가? 결국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지 여부인가? 내가 속한 세계로서 자연/생태계 차원과 다르게 ‘동물’을 특권화하는 것은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인가?

하지만 쾌락과 고통을 느끼며 인간의 생활과 감정, 의식을 교류하는 생명체로서 반려동물의 존재를 떠올린다면 인간공동체의 윤리를 동물로 확장하자는 주장은 ‘이해된다’. 동물권 활동가들이 (불편하게) 비유했지만, 과거 노예제 신분 사회에서 일부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인간성’의 전이가 일어났듯이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동물 일반’은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도 동물로서, 인간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 인간사회에 종속되어 반려종들의 세계가 형성되고 가축종들의 세계가 있는 건 아닐까.

인간과 비인간동물/자연의 다른 관계를 지향한다고 할 때, 그 경로로서 ‘동물권’이 등장할 수도 있지만, 생태사회주의적 지향에서도 다른 관계의 형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때 이 관계에는 살림과 죽임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와 자연을 생산하고 배치하고 새롭게 조직해 온 과정이 지난 역사였다. 이는 모든 생명체가 자기보존을 위해 행위하는 것이다. 바로 그 ‘자본주의’ 역사가 만들어낸 파괴적 결과에 직면한 지금 다른 관계/배치/조직이 필요하다.

2. 정치/사회운동으로서 : 개인주의적 라이프스타일 정치? 윤리적 정체성 정치?

-규범적 정체성의 라벨로 작동하는 비건실천

직접 동물권 운동을 하지 않는 위치에서, 경험하게 되는 '종차별주의/동물권' 기반의 운동의 대부분은 '비건실천'이다. 그리고 비건실천은 특히 음식/식사를 중심으로 매우 일상적으로/긴장도를 높이며 전개된다. 결국 어떤 식사가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라는 질문을 적극적으로 던지는 게 비건실천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들에게 비건 실천이라는 가늠자 또는 요청을 통해 '윤리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음식은 개인적 선택과 실천의 영역이라기보다 현대사회에서는 고도의 이윤 생산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윤 기반의 식량/음식 시스템 속에서 수익성이 높은 육식을 강제하는 사회인 것은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작동원리에 따라 살아갈수밖에 없지만 그 너머를 향해 집단적/정치적 운동을 조직한다. 그런데 비건실천은 음식에 대한 개인적 '선택'을 갖대로 윤리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활동양식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이는 앞서 언급한 '생명/동물권' 관점과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럴 때 그런 개인적 차원의 윤리를 누가 어떻게 '선택'가능한지 역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앵그리 비건', '비건 경찰'과 같은 말은 분명 비아냥대는 행위지만, 적어도 비건실천이 어떤 점에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유발하는 활동형태인지는 드러난다)

기후와 관련된 다양한 개인적 실천들처럼 비건실천 역시 '개인'으로서 부정의한 구조와 폭력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결의 또는 약속일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결의/열망을 모아 '이윤 기반 식량/음식 시스템'을 바꿔내기 위한 정치적/집단적 투쟁이 등장하기도 전에, 자본주의는 비건 시장 개척에 나섰고 서구에서는 '식물기반 자본주의'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비건실천은 개인주의적 라이프스타일 정치, 윤리적 정체성 정치를 넘어설 수 있을

까?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비건실천은 일상적 실천이기에 오히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비난/비판도 많고 까탈스럽고 특이한 행동이라는 인식도 많다.(최근에는?)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회운동에서 이런 형태의 ‘정치적 도덕주의’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활동기풍/분위기는 익숙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제안하는 ‘불매운동’도 그렇고 ‘~거부운동’들도 그렇다.(물론 이것들은 좀 더 집단적/정치적 기획이다) 앞서 동물로의 감정/의식의 전이가 이해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일상적 실천으로서 비건실천 역시 사회운동의 자연스러운 형태 중 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일상적 실천-비건실천의 위치에 대한 감각이 아닐까 싶다.

읽을거리1. [워커스 사진] 동물

채효정(기후정의동맹)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동물(動物)이란 말은 경멸이나 혐오 등 대부분 부정적 비유나 상징들과 관련되어 있다. ‘동물적’이란 말은 오직 감각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이성이나 사유가 결여된 것을 뜻하며, 그런 방식으로 ‘인간적인 것’과 대비된다. 문명이 나 문화와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야만적 상태로서 자연적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노동’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동물성’과 연결된다. ‘노동하는 동물(animal laborans)’이란 개념이 대표적이다. 이 개념의 반대쪽에는 ‘호모(homo)’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다운 삶이 놓인다. 이를테면 ‘호모 폴리틱우스’는 정치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호모 루텐스’는 유희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호모 파베르’는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제작하는 인간을 나타낸다. 여기서 ‘인간’으로 번역되는 ‘호모’는 ‘남자(man)’를 뜻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아이들은 어른이 못된 자로 동물에 가까우며, 여자들은 남자가 아닌 자로서 동물에 가까운 존재에 귀속된다. ‘호모’에 딸려오는 수식어들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규정되며 다른 생물 종과 인간 사이의 종차(種差)를 나타낸다.

노동은 ‘인간다운’ 행위라기보다 인간이 동물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 설명된다. 인간이 노동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은 먹고 살아야 하는 자연 법칙에 귀속돼 있고, ‘먹고 살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해야 하며 그것이 고대의 수렵 채취 사회로부터 현재의 임노동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필연적 운명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특히 인간이 계몽을 통해 자연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사회를 이루고 그 속에서 문명과 문화의 진보를 이

문다고 하는 ‘자연과 사회’의 서구적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자연의 이분법은 정신과 육체, 지성과 감각의 이분법과 위계로부터 나아가 문명과 야만, 서구와 비서구라는 공간적 분리에도 적용되며 남자와 여자, 인간과 동물의 관계로도 확장된다. 자연에서 동물의 삶이란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 덩어리의 물질대사일 뿐인가. 인간이 아닌 자연의 생명체들에겐 고유한 자기 생의 기쁨과 슬픔, 도전과 적응의 여정이 없는 것일까?

서양철학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존재의 위계는 가장 완전한 존재인 신으로부터 가장 불완전한 하등 존재까지의 서열을 보여준다. 동물들의 위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다시 말해 신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 또한 인간이다. 이 위계를 인간 사회 내부에 투영하면 그 속에는 다시 동물에 가까운 인간과 신에 가까운 인간이 촘촘한 서열 속에 상징화돼 나타난다. 그 상징은 왕과 사제와 남자가 신에 가까운 인간인 반면, 여자와 아이들과 노동자들은 동물에 가까운 인간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것은 지배자들이 지배를 위해 만들어낸 상징이다. ‘가장권’은 여자, 아이, 노예, 가축 등 ‘동물-재산’에 대한 주인의 지배권이다.

하지만 동물이 언제나 인간 이하의 열등한 의미로 비하돼 쓰였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 동물(animal)이라는 말이 유래한 라틴어 ‘아니말(animal)’은 ‘아니마(anima, 혼)’를 가진 존재를 뜻한다. 이 아니마는 ‘숨’을 뜻하고, 생물적 대사만이 아닌 영적인 차원과도 관련된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는 숨(혼)을 가진 존재다. 이러한 사유에서는 인간이라는 종에 대해서 동물 전체가 집단적 실체로서 나타나지도, 전체 동물이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인식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서양 신화에서도 동물은 다양한 신들을 대표하고, 신성과 동물성은 종종 교환된다.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도 창조주인 신의 힘이 피조물에도 미치며 창조된 존재로서 동물에 대한 경외심을 요구한다. 특히 민중적 세계에서 동물은 형제, 동료, 가족, 친족으로 여겨진다. 인간과 동물의 절대적 구분과 위계가 성립한 것은 존재가 순수한 사유체(res cogitans)와 순수한 물질체(res extensa)로 구분되고 인간이 그 둘의 복합체로 이해되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정신과 물체로 나뉜 세계

에서 인간과 동물은 ‘생각하는 동물’과 ‘오직 동물’로서 구분된다. 이것이 근대의 인식론적 사건이다.

과거에 동물을 이해하는 방식은, 금(禽) 수(獸), 축(畜) 같은 용어에서 보듯이 날짐승, 들짐승, 집짐승처럼 주로 거처와 서식지에 따라 다른 이름과, 인간과 맺는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 동물은 신성과 연결되어 있어 그 상징 또한 길흉을 나타내거나 하늘로부터의 전조와 전령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12지신이 모두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신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의 개념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과 기술, 자본이 신적인 것을 대체하고, 존재의 신성함이 무너지자 동물성에 내재한 신성함도 힘을 잃었다. 인간의 신체와 동물의 신체가 오직 물질의 덩어리(res extensa)로만 환원된 곳에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자연에 대한 윤리와 금도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거주하던 공동체가 파괴되면, 지상의 공동 거주민(demos)으로서 함께 살기 위해 맺고 지켜왔던 인간과 동물 사이의 공동의 규약도 힘을 잃는다. 사냥을 금지하는 기간 같은 촌락의 공동체 규약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 오늘날 축산공장과 도축장에서는 그 누구도 동물의 죽음에 예를 다하지 않는다.

근대 서구의 ‘사회계약’은 ‘시민들 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상호협약이었다. 부르주아들의 정치적 권리 투쟁은 새로운 정치적 인클로저(enclosure)를 만들어내 ‘비인간 동물’과 ‘시민이 아닌 인간’을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공유지의 관습적 권리를 모두 박탈했다. 이후에 전개된 시민권 운동은 배제된 인간들에게 시민권을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시민권을 통해 노예는 자유인이 되고, 여자도 인간이 되고, 흑인도 시민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권리는 인간이 아닌 동물 앞에서는 멈춰 섰다. 동물은 권리 없는 존재, 절대적 무권리자로서, 신으로부터의 보호도, 자연으로부터의 보호도, 공동체로부터의 보호도, 모두 벗겨진 채로 완전히 ‘벌거벗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동물보호법이라는 협소하게 규정되는 법률들이 있지만, 그 법의 바깥에 있는 더 많은 동물에 대한 규정 외의 착취를 허용하는 역설을 가져올 뿐이다. 이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역설과 일맥상통하며, 불안정노

동의 확대와 비정규직화는 노동자로부터 권리의 옷을 벗겨내는 과정이다.

과거 자연과 인간 사이에 공동으로 수립되어 있던 노모스라는 대지의 관습법은,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그것을 함부로 훼손할 수는 없었다. 오늘날 법의 범주는 하늘의 법도, 대지의 법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법전에 적힌 성문법의 한계로 축소되어 ‘법이 허용하는 대로’ 절차만 지키면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승인된다. 갓 태어난 새끼를 어미로부터 떼어내거나 죽이지 않는다는 금도 같은 것은 없다. 1년에 10억 마리든 20억 마리든 도살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학대하고 차별하며 비참하게 사육하고 참혹하게 살해하는 것도, 모두 규정대로만 하면 ‘합법’이다.

문제는 동물의 이러한 상태가, ‘동물에 가까운 존재’로 규정되는 인간, ‘노동하는 동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이 자연에 가하는 생명에 대한 폭력적 변형과 삶의 재조직화는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수익을 위해 밤낮 없이 알을 낳도록 강제되는 양계장 닭들의 야간 노동과 ‘가치사슬’이란 이름의 24시간 지구 생산체제 속에서 잠과 밤을 빼앗긴 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심야 노동을 조직하는 원리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육값을 최소화하고 고깃값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되는 축산업은, 노동자에 대한 비용은 최소화하고 노동으로부터의 착취 이익은 최대화하려는 노동정책과 동일한 논리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구로 벤처타운 콜센터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 된 후 콜센터의 내부 도면이 드러난 적이 있다. 나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도면이 예전에 봤던 공장식 축사, 그리고 노예선의 구조와 똑같았기 때문이다. 최소 면적에 최대 인원을 배치해 관리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든 공간 배치였다. 사슬과 채찍이 없어도 공간이 신체를 통제하고 콜 수가 자발적 경쟁을 시키는 그곳에서, 쉬는 시간도, 위험을 피할 방법도,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자유를 빼앗긴 돼지들과 같은 상태에 놓여있었다. 폭력적 축산업의 문제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도미니언(dominion 2018)’에는 푸른 초원 위에 아마존이나 쿠팡의 물류센터를 닮은 거대한 사각형의 축산 공장들

이 등장한다. 구로공단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실리콘 밸리 이름을 딴 ‘G-밸리’가, 미싱사와 봉제공이 사라진 자리에 콜센터 노동자라는 새로운 취약 여성 노동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감추듯이, 겉으로는 깔끔하고 세련된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건물들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완벽하게 감춘다. 그 속에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를 밤낮없이 죽은 자본의 증식을 위해 갈아 넣어야 하는 존재가 있다.

동물권을 말하면, 일각에서는 그것이 인간의 권리나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맞세우기도 한다. 채식주의는 친환경 유기농 식품처럼 부르주아의 선택권에 속하고, 비싼 채소를 먹는 자들이 노동자들이 먹는 값싼 고기를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한다. 그런 면도 성찰해봐야 한다. 하지만 저렴한 식량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가 아니다. 저렴한 식량은 저렴한 노동을 떠받치고, 저렴한 노동이 다시 저렴한 식량을 떠받친다. 토피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착취의 악순환은 노동자의 삶을 계속 악화시킬 뿐이다. 무급의 가내노동과 노동시장에 유입된 여성 노동의 평가절하가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동이 노동을, 생명이 다른 생명을 착취하게 함으로서 자본은 이익을 창출하고, 분노하는 힘들이 서로를 향하도록 함으로서 분열 시켜 통치한다. 자본의 통치는 상급 노동자가 하급 노동자를 괴롭히고, 지친 노동자들이 지친 동물들을 학대하며, 약자가 더 약자를 향해 욕을 하고 침을 뱉게 만든다. 그 착취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리는 누구와 연대하고 분노의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하겠는가.

동물권 운동은 자본에 맞선 ‘삶-권리’로서의 생명권 투쟁으로서, 생존권과 민중권, 노동권 투쟁으로 연결되고 확장돼야 한다. 동물해방은 노동해방, 여성해방과 함께 생명들의 반자본주의 투쟁에서 피억압자들의 공통 목표가 되어야 한다. ‘새끼만 낳는 짐승’이라는 프롤레타리아의 경멸적 의미도 해방의 주체로 바뀌내지 않았던가. 우리는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가 아닌 다른 생산 관계를 상상할 수 있듯이, 인간과 동물이 맺는 다른 관계의 방식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니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돼지와 단결하자.

읽을거리2. 상품을 먹다 - 탈육식과 동물해방운동

채효정(기후정의동맹)

한 끼 한 알 삼시세끼 알약 세 알로 때웠으면 했던 시절이 있다. 밥이란 건, 하는 시간도 먹는 시간도 아깝다 생각한 젊은 날. 밥 하는 시간에 한 자라도 더 읽고, 더 쓰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자. 그 때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아니다. 텃밭 농사부터 매일 밥상 삼시세끼를 ‘내손내만’ 해먹는 사람이 되었다. 흙과 불과 물을 다루는 이 노동이 내 하는 일 중에 제일 근본이라 생각한다. 물론 귀찮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간단히 먹는다. 식사공동체의 협동 규칙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한 사람에게만 독박으로 씌워진 의무라면 그건 강제노동이 되고 만다. 반대로 지루하고 반복적인 노동이라도 그 노동을 자기의 생활리듬 속에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같이 나눠 할 사람이 있고, 자연의 절기에 맞춰 변주하고 음미할 수 있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노동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밥을 먹는 데는 소화기관만 필요한 게 아니다. 건강한 음식을 제대로 해 먹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다. 날마다 일에 치여 녹초가 되고 안팎으로 가부장제 문화가 이토록 견고한데, 임금으로 돌아오는 노동의 기쁨도 느끼기 힘든 마당에 대가 없는 돌봄의 기쁨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는가. 그러다보니 창조적 활동으로서의 ‘요리’란 것은 돈 많고 시간 많은 유한계급의 과시적인 취미활동이 되어버렸다. 트렌드에 따라 유행하는 식문화는 계급적으로 ‘하류화’하면서 부유층의 미식 탐사부터 ‘프로페셔널 주부’의 중산층 집밥을 거쳐 정크푸드 먹방까지, 각종 상품 선전의 도구가 되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홈쇼핑으로 이어지는 푸드포르노 산

업을 떠받친다. 다들 이 음식 포르노의 관람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슬픈 풍경을 볼 때마다,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는 ‘남이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는 말은 남의 밥을 차리느라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이들의 채워지지 않는 또다른 허기를 표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풍요가 넘치는 사회에서 만성화된 배고픔은 위장의 허기가 아니라 돌봄의 허기가 아닐까 하고. 지금 그 허기를 채워주는 것은 대부분 외식산업과 식품산업, 그리고 먹방과 음식 사진으로 채워진 문화적 소비생활이다. 그리고 반대편에, ‘그렇게 먹고 살고 싶지 않은’ 이들의 거부와 저항도 나타난다. 채식주의에도 그런 저항적 반(反)문화의 성격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비거니즘’은 먹거리의 시장화와 상품화가 극단화된 서구의 선진산업국가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다. 풍요로운 문명에 대한 반성 또는 지루함의 반응으로.

알약 먹고 사는 세상이 정말로 도래한 곳, 북반구의 선진국에선 ‘알약’처럼 편리한 음식들이 날마다 쏟아진다. 정성과 시간을 쏟지 않아도 돈만 내면 차려주는 밥상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고, 마트에 가면 물만 붓고 끓이면 되는 반조리 식품, 냉동식품, 1인용으로 소분된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깨끗하게 세척·절단·가공된 채소와 육류들은 손님들의 눈길을 끌도록 포장되어 신선식품 코너 진열대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 신선한 진열대에는 계절이 없고, 관계가 없으며, 전체는 없고 부분만 있다. 우리가 먹는 ‘알약’의 본질은 ‘상품’이다. ‘상품화’는 상품을 생산한 노동자의 노동도 자신이 만든 생산물로 부터 소외시키지만 동시에 그것을 최종적인 상품관계로만 만나고 소비하는 소비자에게서도 생산의 전 과정에서 맺고 있는 모든 존재와의 관계를 지워버린다. 가뭄에도 홍수에도, 산지의 농산물이 타죽고 농민이 병들어도, 마트 진열대의 ‘신선식품’들은 항상 신선하고 건강하다. 삶도 노동도 지워진 상품으로서의 음식은 맛과 가격, 영양성분과 유통기한 따위로만 표상된다. 하지만 매끈한 포장지 속 먹음직스런 음식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화학비료와 살충제, 항생제, 방부제 등으로 뒤범벅이 된 재료와 생산과정의 노동착취 같은 추악한 비밀. 우리가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찍어 올리는 사진들은 알약이 만들어낸 판타지일 뿐이다. 어디서 본 듯한 수많은 복제 이미지들의 원본이

‘광고’라는 건 또다른 비밀이겠다.

진실을 마주하기

얼마 전 영화 ‘매트릭스Matrix’를 패러디해서 만든 ‘미트릭스Meatrix’란 애니메이션을 보았다. 원작 속에서 진실을 알리는 저항군 대장으로 등장했던 모피어스는 이번엔 소가 되어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들고 공장식 축산농장에 갇힌 돼지 네오를 찾아온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소, 돼지, 닭으로 바뀌어 동물해방군을 조직한다. 돼지 네오는 빨간 약을 먹고,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비로소 직시하게 된다. 영화 속 거대한 인공자궁, 생명의 공장인 매트릭스는 생명으로부터 이윤을 빨아먹고 성장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원형을 상징한다. ‘미트릭스’는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이 모두, 자본주의가 만든 지옥에 함께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그 지옥은 생명의 존재들로부터 ‘살아가는 힘’을 박탈하고 ‘살아있기만 하도록’ 하는 생명자본주의의 지옥이다.

진실을 직면하는 건 고통스럽다. 리얼리즘의 세계는 판타지를 깨뜨린다. 하지만 만나야 한다. 부리가 잘리는 닭과, 수평아리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나자마자 선별장에서 분쇄장으로 직행하는 병아리와, 마취 없이 꼬리와 성기를 절단당하는 돼지들과, 피고름이 섞인 젖을 짜며 울부짖는 젖소들과, 방금 죽은 동료의 뜨거운 피가 낭자한 도살장에 들어가며 터질 것 같은 붉은 눈으로 눈물을 흘리는 소들을. 젖과 알과 고기의 생산 기제가 되어 버린 몸들을. 그걸 보는 순간, 식품 광고와 푸드 포르노가 만들어낸 도착적 감각은 깨어진다. 자기 살덩이를 들고 농부 같은 차림새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과, 그걸 보면서 마치 건강하고 행복한 ‘한돈’과 ‘한우’가 ‘나를 먹어주세요,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라고 말하고 있는 듯 느끼며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신선육’에서 식욕을 자극받는 포르노적 도착 말이다.

포르노가 어떤 서사도 맥락도 관계도 없이 오직 성행위 자체만을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푸드 포르노도 먹는 행위 그 자체의 쾌락만을 자극적으로 극대화 한다. 이 현실과 극단적으로 분리된 미각과 식욕 위에서만 ‘고기 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에 대한 서사를 은폐하면서 ‘살’로 환원된 존재가 자기 삶을 가진 고유한 존재로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비가시화 한다. 포르노에서는 ‘살’만 보여야지 ‘삶’이 보이면 안되는 것처럼, 삶에 대한 물음이 생기는 순간 진짜 감각이 살아나고 ‘맛’이 사라져버리니까. 쾌락을 방해하는 물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식욕과 도덕감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기업은 광고와 마케팅으로 감각을 왜곡시키는 동시에 대량사육시설과 도축장을 우리의 시야로부터 철저히 차단 분리시킨다. 그 결과 식량으로 사육되는 동물은 한편으로는 절단된 스테이크나 갈아진 소세지 덩어리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인화된 소, 돼지, 닭의 브랜드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현실 속의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판타지 속에서 실재 세계는 완전히 암전되어 있다. 나는 그 무감각과 무사유의 ‘암전’ 상태가 도착적 판타지가 만들어내는 이성과 감각의 마비상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마비상태에서 각자가 알아서 깨어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행복한 꿈은 누구라도 깨고 싶지 않으니까. 살기가 힘들고 팍팍할수록 짧은 행복의 감각은 더 소중하고, 일시적 도파민으로 망각되는 고통은 반복될수록 더욱더 강력한 감각자극을 요구한다. “우울할 땐 고기를 먹으세요, 슬픈 날도 기쁜 날도 고기를 먹으세요, 고기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야, 오늘 고기 먹자!” “오늘은 고기 먹는 날!” 의례화된 육식문화 속에서 우리가 ‘고기 먹는 낙’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찌면 여기에는 의도적 기억상실 같은 것도 결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진실을 알면 먹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빨간 약’이 필요하다.

탈육식은 마약중독이나 도박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과 비슷하다. 단약과 단도박 과

정에서 행복 도파민의 자극 물질이 끊기는 순간 찾아오는 고통처럼 ‘탈육식’도 고통스럽다. 육식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그동안 행복하다 믿었던 세계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미가 추로 뒤바뀌며, 자기 존재까지 부정당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인간의 본성과 미각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육식산업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고기에 중독되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고기 끊기’가 수월했던 건 중독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육식을 즐겨하지 않은데다, 시골로 이주한 뒤로는 자연스레 마트도 멀어지고 음식 배달이나 외식도 쉽지 않아, 편리와 식욕을 자극하며 지갑을 낚아채는 상품의 유혹에 쉽게 걸려들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약이나 알콜, 도박 중독과 달리 육식은 개인적 중독이 아니라 사회적 중독이며, 나아가 어떤 규제도 없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기를 먹도록 국가적으로 장려되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홀로 벗어나기 힘든 ‘문명의 중독’이다.

불편하고 불쾌한 운동이 필요한 이유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다. 깨고 싶지 않은 꿈에서 깨어나려면 현실을 일깨워주는 ‘빨간약’이 있어야 하니까. 나는 동물해방운동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이 그런 ‘빨간약’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나에게도 그 동물해방군이 찾아왔던 것 같다. 그들의 직접행동은 마치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된 판타지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버그와 같은 것이다. 즐겁게 보고 있던 드라마가 잠시 중단된 사이에 보고 싶지 않은 전쟁 뉴스가 나와서 처참한 주점들을 여과없이 보여 준 ‘방송사고’ 같은 것처럼, 잠깐 동안의 버그가 일으킨 소음과 소란은 잘 작동될 때는 볼 수 없었던 다른 세계를 작은 틈새를 통해 일시에 충격적으로 드러낸다. 아주 작은 틈새가 일순간 열리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통증을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진실을 알리는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불쾌를 자극할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운동을 하라고 충고한다. 고발과 증언은 거부감을 심어주지만 감동적인 호소는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쾌가 아니라 감동

을 느끼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돌고래를 살리는 일에 기꺼이 돈을 내고,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죽은 새의 뱃속을 보며 참회하며, 얼음 위에 위태롭게 서있는 북극곰을 보면서 불타는 지구를 식혀야겠다고 다짐하듯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향의 마음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종종 우리의 관용은 직접적 이해관계 밖의 대상에 대해서는 무한히 관대하다.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칭찬받지만, 한국에 입국하려는 난민들은 경계의 대상이고 그들을 도우려는 이들은 의심받는다. 자신의 삶에 난입할 가능성이 없는 북극의 곰과 남극의 펭귄은 보면 마음이 아프고, 산에 있는 멧돼지나 동물원에 있는 곰은 보호대상이지만, 그들이 인간의 동네에 출현하면 즉각 사살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동물은 인간을 위협하지 않을 때만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식량동물은 어떤가. 우리가 오랫동안 ‘가축’이라고 불려왔던, 집에서 키우는 동물은 더 이상 없다. 여전히 관행적으로 ‘가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인간과 함께 살지 않는다. 신종플루에서 코비드19까지 인간과 바이러스를 공유하는 이 동물들은 야생동물과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죽어서 음식이 된 소, 돼지, 닭은 그토록 좋아하면서도, 살아있는 동안의 그들은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다. 분노, 오물, 사체, 냄새, 폭력, 착취 속의 비프, 포크, 치킨은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누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면서 그를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시작은 진실을 아는 것이다. ‘목격자’가 되는 것만큼 강력한 동기는 없다. ‘비질’은 폭력의 목격자와 증언자가 되는 활동이었다.

야생동물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보호운동’은 대중적 지지를 쉽게 얻는 반면, 고기로 사육되는 식량동물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감금과 학대 학살을 중지시키려는 ‘동물해방운동’은 진보적 환경운동 내에서조차 소수적이다. ‘동물해방’이란 용어는 ‘너무 급진적’이라거나 ‘취지는 알겠으나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지적을 받기도 한다. ‘동물보호’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만 ‘동물해방’은 어떤 이들에게 불온한 사상이 되는 까닭

은 기득권 집단에서 ‘노동존중’이나 ‘여성존중’이란 용어가 거부감 없이 수용되는 반면 노동해방이나 여성해방이란 용어는 거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이유다. 그러나 동물을 보호하고, 여성을 보호하며, 노동을 존중하는 주체는 지금까지 동물을 학대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노동을 착취해온 주체와 동일한 주체가 아닌가. 이들에게 ‘우리도’ 존중해달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력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체/주인들에게 좀 더 나은 대접과 처우 개선을 호소하는 것이다. 반면 해방이란 용어는 권력관계와 지배관계를 뒤집는다. 권력을 쥔 지배자에게 권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운동은 지배자들에게 위협이 된다. 그래서 노동해방, 여성해방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하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며, 지배체제를 위협하는 불온한 사유인 것이다. 동물해방운동도 마찬가지다.

동물에 대한 학대라는 점에서 똑같이 인간의 잔혹함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는 해도, 고통 받는 야생동물이나 반려동물을 구출하고 보호하는 인간의 모습에서는 ‘휴머니즘’과 종적 우월감을 느끼지만 식량동물의 경우에는 그럴 수 없어진다. 소, 돼지, 닭은 자연세계의 동물과 달리 취급된다. 자연의 동물들은 신의 창조물이지만 소, 돼지, 닭은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며, 무엇보다 사유재산으로 취급된다. 그러니 이들을 구출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이며 영업방해가 된다. 인간과 동물 간에 설정된 보호-피호, 지배-피지배의 일방적 관계만 아니라 생명의 상품화를 용인하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관계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 관계를 전복시켜 상호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식량동물’을 상품의 원료가 아니라 동물존재 자체로, 즉 살아있는 생명 존재로 대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부정 할 때에만 가능했던 일, 즉 지금까지 허용되어온 감금, 학대, 학살을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게 만든다. 동물해방론이자 새로운 생명사상으로서의 비거니즘은 육식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시스템 자체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 자본과 권력은 시장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친환경 소비자로서의 채식주의자는 환영하지만 자본주의적 식품생산 체제에 맞서는 동물해방의 실천론으로서의 채식주의는 억압한다.

시장과 기술이 인도하는 대체식품이 탈육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을 때, 자본주의 시장은 그것이 체제에 대한 저항이 되지 못하도록 소비실천으로 전환하는 루트를 재빨리 만들어낸다. 비건을 위한 다양한 대체 상품도 그중 하나다. 편의점에서 다양한 비건 김밥, 비건 도시락, 비건 라면이 출시된다는 소식은 육식사회의 소수자로 살면서 서럽게 채식하던 이들을 기쁘게 한다. 한국에도 유럽의 도시들처럼 더 많은 비건 레스토랑과 비건 샵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축산업의 잔혹함이나 환경오염 때문에 육식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선 ‘인공배양육’을 ‘대체육’이라며 대안으로 제시한다. 거대자본과 거대기술의 결합체인 인공배양육의 상품화를 허용하는 건 식량주권을 완전히 식품대자본에게 넘기는 것이다. 글로벌 육류 시장의 가장 큰 투자자이면서 소비자인 식품 기업들이 정크푸드와 친환경 유기농 제품을 함께 생산하며 육식과 채식 상품을 동시에 개발하고 투자한다. 이런 모습은, 석탄발전 핵발전으로 돈을 버는 다국적 기업들이 기존의 발전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에도 투자하면서 시장 확대와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마치 ‘기후위기’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인 양 홍보하는 모습만큼이나 모순적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채식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하는 것 또한, 산업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이 가장 크고 상위 10%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도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은 채, 저마다 탄소를 내뿜는 78억 인구가 각자의 에너지 절약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주류 환경운동의 주장 만큼이나 탈정치적이고 몰계급적인 말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그 채식이 지금까지의 동물착취 주범인 기업과 시장을 통해, 여전히 착취적인 ‘상품화’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그동안 자본은 개인들에게 각자의 선택권을 주면서 구조적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생명의 권리를 소비자의 권리로 치환하는 논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 왔다. 친환경 상품에도 ‘레벨’이 있고 계급적 차이가 있듯 이 비건 소비도 마찬가지다. 정크 비건을 하든 에코 비건을 하든 시장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선택지를 줄 것이다.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건 진열대의 상품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시간과 관계에 대한 권리다. 채소도 공장식으로 생산하는 자본주의적 농업생산체제에선 채식도 폭력 없이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한겨울의 신선 채소를 키우기 위해 비닐하우스엔 밤낮없이 전기가 흘러야 하고, 하우스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겨울에는 얼어 죽고 여름에는 찌죽는다. 자본이 생명으로부터 이윤을 짜내는 데는 동물과 식물을 가리지 않는데, 각자가 식단을 동물성을 식물성으로 대체하는 것이 과연 생명을 쥐어짜서 이윤을 추출하는 폭력의 사슬을 멈출 수 있을까? 그건 현재의 생산체제와 성장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도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만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녹색성장론과 마찬가지로 논리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장주의적 문법과 축산업 동물착취에 대응하는 시장주의적 문법은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며고 현재의 성장체제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닮았다. 시장주의적 기술주의적 관점은 육식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탈육식’을 ‘채식 대 육식’의 식단 선택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식물성과 동물성의 에너지원 문제로 논쟁으로 축소시킨다. 기후위기 시대 갑자기 ‘너무 많은 소’들이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면서 기후위기 주범이 되었다. 소 한 마리가 내뿜는 메탄가스가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 과학적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 너머의 ‘진실’은 그렇게 많은 ‘소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있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시장주의적 기술주의적 대안은 연료를 교체하는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연기관만 전기배터리로 바꾸면 된다는 생각은 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소의 입에 메탄가스를 흡수하는 마스크를 씌운다든가 육상동물인 소의 사료를 해조류로 대체한다는 발상은 소의 내장기관과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똑같이 기계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어떤 항공사는 ‘탄소중립’ 좌석을 친환경 상품으로 내놓기도 한다. 비행기 여행은 탄소배출량이 가장 큰 이동수단인데, 이를 상쇄하는 탄소흡수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여 비

싼 탄소중립 좌석을 상품으로 개발한 것이다. 승객이 구입한 항공권에는 탄소배출권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항공사는 당신이 앉은 좌석에는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 몇 그루가 깔려 있는 셈이니 실질적 탄소배출량은 제로가 된다고 홍보한다. 승객은 자신의 비행기 여행이 가중시킬 기후위기에 대한 죄책감을 요금지불로 상쇄할 수 있다. 얼마나 혁신적인 발상인가. 채식 시장의 상품들 역시 이와 유사한 ‘소비 실천’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마치 우리가 식단의 재료들을 식물성과 대체육으로 바꿀 때마다 동물의 고통도 줄어들고 ‘상쇄’의 효과가 나타날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시장의 처방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감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통제 처방일 뿐이다. 육식산업 체제 안에서 고작 생산라인의 극히 일부를 할애하여 채식상품을 생산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옹호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선전하는 기업에 속아서는 안된다. 세계화된 자본주의적 식품 생산 시스템과 그걸 만들어낸 기업이야말로 인간과 비인간동물, 동물과 식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죽이는 주범이다. 비거니즘은 인간의 에너지를 동물성에서 식물성으로 바꾸는 ‘연료 대체’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비거니즘을 채식주의라는 말보다 ‘탈육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채식은 정치적 실천 보다는 사적 선호와 취향의 문제로 이해되기 쉽지만 ‘탈육식’은 육식, 특히 육식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과 적극적인 반대와 저항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동물해방 없이는 노동해방도 인간해방도 없다

비건이 된다는 것은 나에겐 식단의 전향보다 관계의 전향이다. 채식이나 육식이나 라는 선택적 질문은 무엇을 먹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을 것이냐의 문제로, 나아가 먹는 자와 먹히는 자의 관계에 대한 물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사람마다 채식을 시작하는 계기는 다르지만 내가 ‘탈육식’하게 된 동기는 ‘먹을 수 없게 된 마음’이 가장 컸다. ‘동물해방군’을 만났고, 이름과 얼굴을 하는 돼지 친구가 생겼고, 더 이상 잔혹한 폭력성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채식도 하다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나의 텃밭과

밥상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세계의 폭력에서 홀로 평화로울 수는 없다는 것도 점점 알게 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실을 알면 알수록,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혼자서는 이 폭력의 사슬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또다른 진실의 벽에 부딪치기도 한다. 그런 채식은 너의 마음을 평화롭게 할 뿐 이 폭력을 끝낼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진실의 벽은 잔인하다.

어떤 이들은 이런 구조적 폭력을 말하면서 개인적 채식이 답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극단적 채식보다는 그냥 조금 덜 먹는 육식을 하자고 하기도 하고, 공장이 아니라 농장에서 생산된 ‘착한 고기’를 먹자고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어정쩡한 타협론이 양심의 알리바이를 충족시킬 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급진적 채식 소비보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관계의 근본적 전환이 아니라 계속 소비의 방식만을 변경하는 이런 절충론은 자본의 ‘지속가능한 발전’같은 개념만큼이나 우리를 마비시키는 ‘파란약’이다. 이런 주장은 현재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유통되는 육류의 90% 이 상이 글로벌 대기업들에 의해 독점된 상태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수직계열화한 식품산업체제의 농가들도 이미 하청생산기지로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지금 어디서 좋은 농부가 생산한 좋은 고기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캘리포니아 경작지대의 지하수를 고갈시킨 주범은 아몬드 나무도 아니고 우유 대신 아몬드를 먹는 채식주의자도 아니다. 주범은 ‘아몬드 기업’이다. 아마존에서는 콩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숲을 태우고 원주민을 내쫓는 건 콩도 아니고, 콩을 먹는 소도 아니고, 소 대신 콩을 먹겠다는 이들도 아니다. 주범은 ‘소고기 기업’이다. 또 그 뒤에는 아몬드 산업과 소고기 산업에 투자하는 금융자본이 있다. 노예해방이 노예산업을 중단시킴으로서만 가능했던 것처럼 동물해방도 자본주의적 육식산업을 해체할 때에만 가능하다. 노예해방을 위해선 노예제 하에서의 착한 노예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동물해방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육식산업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착한 생산자와 착한 소비자

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답이 될 수도 없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독자들은 허탈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난 뭘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채식을 하고 있는가도 싶을 것이다. 하지만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진 말자.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상의 실천이 지닌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유하자면 그건 매일 먹는 ‘빨간약’ 같은 것이라고 할까. 육식이 주류이고 채식이 소수인 사회에서 채식을 한다는 건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회의 관행과 계속 부딪치는 과정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 행위의 의미를 묻게 한다. 그리고 날마다 깨닫게 한다. 망각의 힘은 강하고, 소비의 유혹은 더 힘이 세다. 진실을 보고 나서 몇 날 몇 달 ‘고기’를 끊었다가도 다시 먹을 수 있는 건, 꼭 인간이 비루하고 나약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육식자본주의의 중독 메커니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밥상의 실천은 그 거대한 벽을 향해 작은 물결을 계속 일으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고통과 슬픔의 존재들로 이어지는 해방의 통로를 조금씩만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런한에서 탈육식 운동은 일상 저항의 생활정치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상과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풍요를 거부하고 불편을 선택하는 이 일상의 실천이 다른 해방 운동과 연결되어야 하고,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어떤 사회적 생산을 통해 온 것이며 타인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야 한다.

오늘날 육식자본주의는 ‘음식에 대한 무절제한 탐욕과 과잉소비’를 조장하는 자본주의 문화산업의 최정점에 있다. 이 문화자본주의의 이면에는 생명자본주의가 있다. IT산업이니 스마트산업이니 하는 ‘창조경제’의 물질적 토대가 여전히 광물자원을 캐내는 광산업의 궤도에서 시작되듯이, 문화산업과 서비스경제의 외형을 띤 ‘푸드 산업’도 그 시작은 생명의 궤도가 된 농축산업이다. 공장식 축산 이전에는 어떤 농부도 자연의 시간을 압축하거나 앞지르며 생산하지 못했다. 육식자본주의는 생명의 자연적 원리에 개입하고 조작하는 기술을 통해 이윤의 축적이 자연의 순환과 재생 시간을 초월할 수 있게 만들었다.

생명자본주의는 생명의 번식력과 성장력을 극대화해서 지구의 유한성과 자연의 성장 속도를 초월한다. 초기 자본주의가 오랜 시간 축적된 과거의 에너지, 지하에 매장된 화석에너지를 동력으로 급발진 할 수 있었다면, 후기 자본주의의 동력은 지금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실시간 추출하는 에너지다. 그런 점에서 경쟁을 통해 인간 노동에 강도를 높여 생산력을 더 뽑아내는 기술과 동물의 몸을 더 빨리 더 크게 자라게 해서 생존주기를 극단적으로 단축시켜 이윤을 뽑아내는 기술은 근원적으로 동일하며, 육식자본주의는 생명자본주의와 결합한 신종 채굴주의의 형태를 띤 신자유주의적 착취 산업이다.

나는 나의 채식이 지구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자의식보다는 ‘한계속의 실천’이지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는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더 소중하다 여긴다. 지구를 구하는 건 채식이 아니라 사회 운동이다. 죽음의 산업으로 성장하는 자본주의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체제 안에서부터 그 체제에 길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 더 큰 우리가 되어가기 위해 함께 할 동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일상의 실천을 반자본주의 운동의 저항 근육을 키우는 맨손 체조라고 말하곤 한다. 우리들의 탈육식의 실천도 그런 일상의 저항 훈련이자 먼저 온 해방자들의 함께 추는 춤이 되길 바란다.

세션2) 기후정의운동과 '지역'

발표1. 지역투쟁의 현황 갈무리 - 이현정

발표2. 지역 기후정의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윤자

읽을거리 .기후정의의 정치적 주체 되기 - 이현정

지역투쟁의 현황 갈무리

이현정

지역 기후정의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윤자

토론 ① 자본주의 체제는 어떻게 생태성-공공성-민주성을 훼손하고 있나?

조 :

참가자 명단 :

기후부정의를 일으키는 자본주의 체제는 ㉔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무엇을 생산하는지, 어떻게 유통하고 폐기하는지에 관한 ‘생산양식과 노동의 문제’ ㉕ 파괴적이고 착취적인 이윤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뒷받침해주는 ‘법률, 제도 및 정책의 문제’ ㉖ 위와 같은 경제체제의 물리적 토대를 재생산하고 확장하는 ‘교육, 문화, 이데올로기, 언론 및 미디어의 문제’ 등이 상호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종속된 각 체제 부문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영역인 생태계/노동/돌봄/식량/에너지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연결하고 조망해보아요.(구체적인 경험과 지역 현안을 놓고 논의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토론 ② 생태성-공공성-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체제가 필요한가?

조 :

참가자 명단 :

앞의 토론에서 나온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논의를 이어갑니다. 우리에게 지구의 모든 민중을 지키기 위한 생태계/노동/돌봄/식량/에너지를 지키고 구축하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양식·노동 ㉢법률·제도·정책 ㉣교육·문화·이데올로기·언론·미디어 등 각 체제 부문에서 어떤 변혁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마음껏 상상해봅시다!

토론 ③ 기후정의 투쟁 지도 그리기

조 :

참가자 명단 :

국내외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정의 투쟁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각 투쟁 단위의 주체와 내용, 진행상황, 활동 일정 및 모습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기후정의 투쟁 지도”라고 불러본다면, 기후정의 투쟁 지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만들면 좋을까요?

토론 ④ 어떻게 동맹을 조직할 것인가?

조 :

참가자 명단 :

기후위기를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인식하는 주체들은 많으나, 이를 공동의 투쟁으로 연결하고 조율하는 활동은 빈약한 실정입니다. 운동사회에서 이러한 활동이 부차적인 활동으로 취급되어온 반면, 기후정의동맹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어떻게 동맹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과 분야, 주체의 투쟁을 소개하고, 공동의 투쟁으로 해석하고 담론을 생성함으로써 헤게모니를 만들고, 폭넓은 연대 실천의 장을 기획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구상해보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을 '이음 활동'이라고 불러본다면, 이음활동가의 활동 기반(주체, 재정 등)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해주세요.

기후정의의 정치적 주체 되기

이현정 李賢貞

녹색정치LAB '그레' 소장,
기후정의동맹(준) 집행위원.
저서 『다시, 원은 달해야 한
다』가 있음.
luna980hanmail.net

우리는 기후위기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최근 몇년 사이에 급격히 높아졌다. 적어도 이제는 기후위기 자체를 부정하거나, 기후위기가 인간활동의 결과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기후위기 인식도가 세계적 인식에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작년 6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¹⁾에 따르면, 한국인의 94%가 지구온난화를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답했다. 34개국 평균 85%를 훨씬 웃도는 결과였다.

올 1월 『시사HN』은 '2022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보다 본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²⁾ 『시사HN』 스스로 이 기획의 의도를 “한국

1) 「한국인 기후위기 인식 선두... 세계인 1년새 기후낙관론 더 커져」, 한겨레 2021.6.14. 참조.

2) 『시사HN』과 한국리서치 공동 기획으로, 한국리서치의 웹조사 패널 72만명 중 인구비례에 맞춰 4,154명에게 요청을 보내 최종 1,000명이 응답했다. 『시사HN』 747호(2022.1.11.) 참조.

사회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해 얼마나 준비돼 있을까”를 묻는 것으로 밝혔는데,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무엇보다 대선과 연결된 질문의 응답이 그러했다.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하겠다’ ‘나에게는 이번 대선에서 다른 어떤 공약보다 기후위기 공약이 중요하다’라는 항목에 대한 긍정 답변이 각각 38.8%, 36.8%에 달했다. 설문조사에 답하는 것과 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사회구성원 3.5%가 꾸준히 참여한 운동은 성공한다는 ‘3.5%의 법칙’³⁾의 10배가 넘는 수치라서 기후운동을 하는 나에게는 놀라움을 넘어 흥분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흥분의 순간이 지나가자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 조사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과 괴리가 컸다. 작년 11월 JTBC가 실행한 4차 차기대선 여론조사⁴⁾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응답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불과 1.2%를 기록하며 10개 분야 중 꼴찌였다. 1, 2위는 각각 부동산 등 주거안정(25.5%), 일자리 등 경제 활성화(24.1%)로, 두 응답을 합치면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⁵⁾

올 1월 서울경제가 시행한 2차 대선인식여론조사⁶⁾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환경 문제는 10개 분야 중 7등을 차지했다. 하지만 시급성을 좀더 인정받아 6위를 차지한 ‘물가 문제’(7.6%)에 비하면 절반인 3.6%에 불과했으며, 이 역

3)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Erica Chenoweth)가 주장한 이론이며, 2013년 테드(TED)에 소개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법칙에 해당하는 시위는 모두 비폭력이었으며, 영국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운동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여인원 목표치를 180만명으로 보는 근거로 소개되기도 했다.

4) 2021년 11월 27~28일 양일간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 응답완료자 1,006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5) 기후위기 대응은 연령대별로 봐도 만 18~29세와 40~49세에서 9위, 만 30~39세 8위로 간신히 꼴찌를 면한 수준이었다.

6) 2022년 1월 11~13일 3일간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 응답완료자 1,344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시 『시사IN』의 조사 결과와는 괴리가 컸다. 게다가 ‘2030년 탄소감축 40% 목표 달성’ 대 ‘탄소감축 목표를 현실화하여 하향조정’ 중 자신의 생각과 더 가까운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후자 하향조정을 택한 쪽(45.1%)이 전자를 택한 쪽(40.0%)보다 높아, 시민들이 강력한 탄소감축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

주변의 기후활동가들도 『시사IN』의 조사 결과가 체감과는 차이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시사IN』의 조사는 총 290개의 문항에 답해야 하는 난제여서인지 요청 대비 응답률이 24%에 불과한 만큼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고관여계층에 편향되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제 시민 대다수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으며 당위적으로는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다른 문제들보다 비교우위는 여전히 높지 않아 보인다.

낭비되는 마음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인지 기후 관련 강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요청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해달라는 것이다. 그런 요청에 나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한겨레의 유튜브 채널 내 ‘기후싸이렌’에 올라온 「탈플라스틱은 ‘깍’, 탈석탄은 ‘어퍼컷」⁷⁾의 내용을 소개한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인이 한해 동안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33억개(2017년 기준)의 생산·소비·폐기 전과정에 걸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될 경우 일년간 배출하게 될 온실가스의 양을 비교한다. 전자는 최대도 잡아도 16만 5천톤⁸⁾인 반면, 후자는 1280만톤에 달한다. 결과

7)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겨레 영상뉴스’에서 볼 수 있다. 영상 게시일 2021.4.19.

8)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제시한 플라스틱 10그램당 온실가스 배출량 ‘10~50그램’ 중 최대값

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플라스틱 컵을 단 한개도 쓰지 않아도, 석탄 화력발전소 한곳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최대 1.3% 정도밖에 줄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최근 SNS에 ‘기후위기’를 태그로 개인적인 실천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콘센트 플러그를 뽑는 고전적인 실천부터 개인 텀블러나 빨대, 장바구니 등을 들고 다니며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 달리기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혹은 ‘줍깅’도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지구를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땀다’는 모토하에, 달리면 에너지 취약계층에 기부가 되는 ‘솔라런’이 한창 유행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이토오 코오헤이(齋藤幸平)는 “당신의 그런 선의만으로는 무의미할 뿐이다. 오히려 유해하기까지 하다”⁹⁾라고 일갈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자신이 뭐라도 하고 있다는 자기위안이나 착시효과로 이어져 진짜로 해야 하는 싸움에 나서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의 책임과 실천이 개인 차원으로 떠넘겨지고, 기업은 자신들이 벌인 일을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린워싱’(greenwashing)을 하는 동안 정치인들의 행보는 기후위기 극복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후보는 앞다투어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의 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두 후보가 모두 용적률 500%를 공약으로 걸고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도시계획 전공자로서 이 공약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오징어 게임」의 대사, “제발 그만 해, 이러다 우리 다 죽어!”였다. 서울 아파트를 재개발하면서 용적률 500%를 가능케 하겠다는 것은 지방은 지방대로 소멸하게 하고, 서울은 서울대로 지옥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인들은 한편에서는 기후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 산업 정책에 불과하고, 정책 전

50그램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다.

9) 사이토 고헤이 『지속불가능 자본주의』, 김영현 옮김, 다다서재 2021, 5면.

반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을 못내 안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후위기 시대, 모든 정책이 기후위기를 전제로 설계되고 평가되어야 하지만 견고한 칸막이가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흔히 지속가능한 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불리는 개념의 정확한 이름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이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줄여 부름으로써 발생한 가장 큰 오해는 ‘발전’ 그 자체가 무한히 지속될 수 있는 상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 ‘sustainable’을 ‘지속가능한’으로 번역하기보다는 ‘(환경이) 지탱가능한’ 발전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¹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프레임은 지금까지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바탕이 되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그 기대를 부추기는 기술중심적 해법을 제시하며 환상을 심어준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만 교체하면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른바 탈동조화(decoupling)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와 운동가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할 만큼의 절대적인 탈동조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제이슨 히켈(Jason Hickel)은 호주의 과학자 제임스 워드(James Ward)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극단적으로 낙관적인 기술혁신 속도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조차 장기적으로 자원 사용이 늘어나 “성장을 위해 재동조화한다”는 점을 전한다.¹¹⁾ 탈동조화는 잠시일 뿐 영구적일 수 없으므로, 탈동조화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성장 지향적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이또오 코오헤이는 또다른 연구 결과를 인용해 탈동조화처럼 보이는 현상의 중요한 이면을 지적한다. 선

10) 줄저 『다시, 원은 닫혀야 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너머』, 진인진 2020, 181면 참조.

11) 제이슨 히켈 『적을수록 풍요롭다』, 김현우·민정희 옮김, 창비 2021, 211면. 강조는 원문.

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 보이는’ 탈동조화는 사실 제품 및 식량의 생산을 지난 30년간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로 전가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수출입을 감안한 탄소 발자국을 살펴보면 ‘상대적 디커플링’조차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¹²⁾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환경 부하가 줄어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기술진보가 오히려 환경 부하를 가중시킨다는 제번스의 역설(Jevons paradox)처럼, 결국 시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놓아서 탄소배출을 충분히 줄일 수 없다.

앞서 이야기한 ‘기후싸이렌’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움과 허탈함의 반응을 거쳐, 그렇다면 ‘나’라는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다르다. 거대한 구조의 문제를 알면서도 ‘그래도 당장 뭐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낭비’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본과 권력은 큰 변화 없이도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헛된 희망이나 시장과 기술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며 세상을 마음껏 휘두르려고 한다. 기후운동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는 맞서 사람들의 마음이 낭비되지 않는 제대로 된 전장(戰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드러내고, 다시 평가하고, 다시 정의하자

(1) 드러내기(Revealing)

기후정의(climate justice)라는 빨간 약을 삼키면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기후

12) 사이토 고헤이, 앞의 책 74~75면 참조.

위기는 자본주의의 속성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나 불평등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풍요는 누군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또한 이 과정에서 먼 지역에 사는 다른 생물종들의 공간을 집어삼키는데, 생태학자 안드레아스 말름(Andreas Malm)은 이를 “생태적으로 불평등하고 병적인 교환”¹³⁾이라 표현한 바 있다. 사회학자 슈테판 레세니히(Stephan Lessenich)는 댕가를 먼 곳이 치르게 하고 비가시화하는 것이 “선진국 사회의 ‘풍요’를 지키기 위해 불가결하다”고 지적하며, 희생을 보이지 않게 외부화하는 사회를 비판했다.¹⁴⁾

이러한 일은 국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2021년 기준 11%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¹⁵⁾ 수년 동안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과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을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인천, 충남, 부산, 경북, 강원, 전남 등이 전력자립도 150% 이상¹⁶⁾으로 전기 생산과정에서의 위험부담과 환경오염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반면, 서울과 경기, 대전, 광주 등은 그 열매만 따먹는 격이다. 강원도 영동지방의 삼척과 강릉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송전탑 440개에 선로 길이 230킬로미터에 달하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며 강원도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태양광 사업 역시 전국 곳곳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장에 맡겨놓은 결과 썩 지대(地代, rent)를 찾아 태양광사업이 농촌

13) 안드레아스 말름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우석영·장석준 옮김, 마농지 2021, 70면.

14) 사이토 고헤이, 앞의 책 29면 참조.

15) 2013년 기준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4%대였다. 이후 서울의 유일한 화력발전소인 서울화력발전소(구 당인리발전소)가 지하화 공사를 시작하며 1%대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11월 지하발전소 1, 2호기가 완공되어 상업운전을 개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가 되었다.

16) 가스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 247.3%,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235.4%,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과 경북이 각각 180%대의 전력자립도를 보인다. 한국전력공사 「2019년 한국전력통계」 참조.

으로, 습지로 간 결과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경기 등 도시지역이 가장 큰 에너지 소비처임에도 석탄화력발전소, 핵발전소, 송전탑 건설, 태양광 및 LNG 발전소 건설 등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에 대해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운동가나 생태주의자조차도 ‘서울 100% 전력자립’이라는 의제를 금기시하는 경우가 많다.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다. 만일 서울이 태양광으로 전력자립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면적이 필요할까? 필자가 계산해본바 대략 150제곱킬로미터로,¹⁷⁾ 서울 면적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서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현재로서는 알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100% 전력자립을 원칙으로 세우고,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어떤 대안이 가능할지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 그 뿐 아니라 3기 신도시를 짓고 서울 재개발 용적률 500%를 공약으로 내걸며 서울 및 수도권 밀집도를 가중시킬 계획을 세운다. 이는 근본적으로 서울의 부담을 외부화하고 전가하여 타자화시키는 일이다. 게다가 소위 ‘중앙’에서 서울 사람들이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으면 제대로 공론화되기 어려운 구조도 문제를 덮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간, 지역 간만 아니라 동일한 공간 내에서도 우리 삶의 비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가되고 감추어진다.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으며 ‘그림자노동’이라 일컬어지는 가사노동, 돌봄노동은 물론이고 인간 사회에서 분해자(decomposer) 역할을 하는 재활용이나 정화조, 하수도 관련 노동, 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 역시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되는데 필수적이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감추어지기 십상이다. 최근

17) 2019년 기준 국내 발전설비 총량은 125GW이며, 서울은 총 판매량 대비 9.1%를 사용한다. 서울 전력자립도 100%가 되려면 발전설비 용량도 총량의 9.1%인 11.4GW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태양광 1GW당 13.2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하므로(산업통상자원부 기준)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서울 태양광발전 면적 필요치는 150.48제곱킬로미터가 된다.

10년 동안 정화조 맨홀 등에서 질식사고를 겪은 노동자는 316명에 달하고 그중 절반이 넘는 168명이 사망했지만,¹⁸⁾ 우리는 도시의 지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다.

기후위기와 함께 실태가 폭로되고 있는 한 분야는 축산업이다. 육식을 계속할 것인지 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별개로, 고기의 ‘단가’를 낮추기 위한 대규모 농장은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고통받게 하며, 그 안의 동물들은 평생 동안 학대받으며 살아간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유지되기 위해 이 도시의 구석에서, 지하에서, 혹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 화려한 문명사회의 이면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간 이외의 생태계 구성원들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지 외면하지 않는 것은 ‘인류세’(Anthropocene) 이후의 세상을 구상하는데 꼭 필요한 첫걸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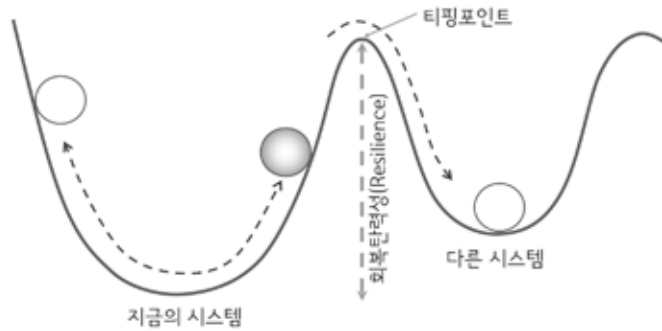
(2) 다시 평가하기(Re-evaluation)

라즈 파텔(Raj Patel)과 제이슨 W. 무어(Jason W. Moore)는 자본주의가 ‘자본세’(Capitalocene) 600년 동안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일곱가지, 즉 자연, 화폐, 노동, 돌봄, 식량, 에너지,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어떻게 ‘짜구려’로 만들어왔는지를 이야기한다.¹⁹⁾ 그동안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비용절감 전략에 따라 가치를 매겨온 결과, 그 과정에서 감춰졌던 사회적·자연적 비용이 뒤늦게 청구서로 날아든 것이 지금의 극단적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것이다. 이제는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고 재정향할 필요가 있다.

영국 멸종저항운동의 대표적인 구호 ‘삶을 위한 반란’(Rebel for Life)은 우리가 가야 할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자본주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기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삶

18) 「정화조·맨홀 등에서 질식사고 겪은 노동자 절반이 숨졌다」, 한겨레 2021.4.18.

19) 라즈 파텔·제이슨 W. 무어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백우진·이경숙 옮김, 북돋움 2020 참조.



회복탄력성 개념²⁰⁾

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필수적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그림자노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간 헐값에 팔려왔지만, 이윤이 아니라 ‘삶’을 기준으로 둔다면 훨씬 높게 평가될 것이다.

또다른 기준은 지구라는 시스템 자체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당연하고 무한한 것으로 여겼던 생태계의 조절 기능(regulating service)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의 의미는 그 지점에 도달하면 일시에 세상이 멸망하거나 인류가 멸종한다는 뜻이 아니다. 홀링(C. S. Holling)이 제안한 공과 컵 모델(그림)은 이 개념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공을 컵 위쪽 끝까지 밀어 올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생태계가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힘을 회복탄력성(resilience)²¹⁾이라고 한다. 그러나 티핑 포인트를 넘을

20) Crawford Stanley Holling,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 Systematics*, 1973, 1~23면 참조. 본문에 제시한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새로 그린 것이다.

21)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자연 시스템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다. 관련하여 홍덕화는 기후위기의 피해 격차는 단순히 노출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기후재난의 전과정에 걸쳐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아우르는 회복탄력성의 격차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홍덕화 「기후정의와 전환 담론의 급진화」, 구도완 외 『생명 자유 공동체 새로운 시대의 질문』, 풀씨 2020, 317면 참조.

정도로 강한 교란이 작용해서 공이 꺾의 바깥으로 넘어가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완전히 다른 상태로 전이된다. 순식간에 꺾 밖의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버리면 우리는 ‘썸통지구’(Hothouse Earth)²²⁾ 상태에 고착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활동을 평가할 때는 지구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얼마만큼 강화 혹은 약화하는가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채굴-생산-소비에서 끝나는 선형경제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방향이며, 이런 맥락에서 분해자노동은 더욱 가치있는 것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농지나 산림을 훼손하는 방식의 에너지 전환은 생물다양성과 원충지대를 파괴하고 생태계 조절 기능을 약화시켜 회복탄력성을 소실시키며, 파괴를 가속하는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을 일으키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가령 바이오에너지 기술로 고안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나무를 벌목해 에너지를 생산하며 이때 발생하는 탄소를 지하에 포집·저장한다는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저장’(BECCS)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우리는 한정된 토지²³⁾를 놓고 물-에너지-식량 넥서스(water-energy-food nexus)를 고민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흡수를 위해 선불리 대규모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또다른 재앙을 부추길 뿐이다.

(3) 다시 정의하기(Redefining)

앞에서 지금의 세상이 은폐하는 모순들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과 지구 생태계를 기준으로 재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좀더 본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스스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환의 주체임을 선언한 노동자들은 노동이 더이상 상

22) Will Steffen et al., “Trajectories of the Earth System in the Anthropocen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8, 114.

23) 심지어 오늘날 토지는 해수면 상승으로 더욱 좁아지고 있다.

품이 아니라고 재정의할 수 있다. 또는 위기와 재난의 시대, 우리는 국가 혹은 정부가 무엇인지 다시 정의 내릴 수도 있다. 말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강력한 조치들을 나열하며 이런 사업의 시행 주체는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에게는 (일정한 이행기 동안에는) 국가가 필요하다”는 레닌(V. Lenin)의 문장과 “잠재적 재앙 앞에서” “엄혹한(draconian) 제한”이 필요하다는 월러스(R. Wallace)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시 꼬뮤니즘(war communism)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²⁴⁾ 물론 이러한 재정의는 기후정의운동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쟁과 토론을 거치고, 힘을 얻어 실현되었을 때만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타자화를 넘어 기후정의운동을 엮어내자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 for Future), ‘썬라이즈 운동’(Sunrise Movement), ‘멸종저항’ 등 해외의 급진적인 기후정의운동에는 공통점이 있다. 기후위기가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석탄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태우자’는 구호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며, 영국의 ‘멸종저항’은 지금 체제에의 ‘불복종’을 전면으로 내걸고 있다. ‘썬라이즈 운동’이 제안하는 그린뉴딜도 표면적으로는 녹색 케인즈주의나 녹색 경기부양책과 유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지역공동체 강화와 민주주의 확대, 공적 소유 확대, 민주적 계획에 기초한 지역적 생산 통제, 군비 축소 등²⁵⁾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급진화된 것

24) 안드레아스 말콤, 앞의 책 175면 참조. 강조는 레닌의 원문(*Revolution at the Gates*(1917), Verso 2002, 41면).

25) 홍덕화, 앞의 글 331면 참조.

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21년 1월 20일,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사업²⁶⁾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결국 단 한개의 발전소도 취소시키지 못했다.²⁷⁾ 그러나 이 차이는 결코 정치인 개인이나 정당의 역량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었다. 땅과 물을 둘러싼 송유관사업에 대한 원주민들의 끈질긴 싸움과 연대가 있었으며, 월스트리트 점령운동 이후 다양하게 전개되어온 다른 사회운동과 결합하는가 하면 그 시기에 성장한 기후정의운동이 ‘쥘라이즈 운동’으로 조직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또한 정치권 안에서도 미국민주적사회주의자(DSA) 그룹이나 정의추구민주당원(Justice Democrats)과 같은 조직이 약진하는 등 ‘정치세력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20년 4월, 샌더스(B. Sanders)는 경선 레이스를 중단하고 바이든 지지를 선언한 후 바이든과 함께 꾸리는 기후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며 ‘쥘라이즈 운동’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서 “내가 TF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 일구어낸 정치적 힘 때문”이며, “TF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앞으로 우리의 운동이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힘을 가질 때까지 우리 운동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했다.²⁸⁾ 이 과정은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결코 스스로 이 같은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부터 사보타주까지 일체의 대중적 영향력을 통해서”²⁹⁾ 시민이 국가에 실행행사를 해야 한다는 말름의 주장과도 맞

26) 캐나다 앨버타에서 미국 텍사스까지 대량의 원유를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미국-캐나다 간 송유관 연결사업.

27) 5개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당진에코파워만 태양광발전소로 전환했다. 고성하이발전과 신서천화력은 각각 2021년 4월과 7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삼척블루파워와 강릉에코파워는 현재 공사 중이다.

28) 김선철 「바이든 정부 기후-노동 정책과 시사점」, 『기후위기와 노동』, 민주노동연구원 2021, 198~99면 참조.

아떨어진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은 수소경제라는 이름으로 대표되어 정부가 노골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다. 탈핵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두산중공업에 1조를 긴급 대출해주기도 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두산중공업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와 연계조차 없어 ‘구린뉴딜’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만 탓할 수는 없다. 썬더스의 말처럼 “운동의 정치적 힘은 민중의 힘(people power)만큼”³⁰⁾만 주어지며, 그런 면에서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과거 민주화세력과 자본에 포섭되어버린 운동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럼 새로운 운동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 전반에 변화가 요구되면서, 지금의 위기가 단순한 ‘기후’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인권, 민주주의와 시스템의 문제라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기후위기 자체에 영향을 받거나 전환의 과정에서 위기에 내몰리는 노동자 및 농민은 이 위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급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는 당위로만 다가설 뿐 ‘실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기후위기의 체감도가 현저히 차이 나는³¹⁾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에서는 먼 곳으로 전가한 오염이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도 전기를 평평 쓸 수 있고, 날씨의 영향도 덜 받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시스템이 도시민들을 오히려 ‘기후위기로부터 타자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도시의 성장은 ‘외부’가 있기에 가능했음에도 이미 타자화된 외부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기후위기가 훨씬 심각해져서 더이상 남의 일로 생각할

29) 안드레아스 말름, 앞의 책 193면, 강조는 원문.

30) 김선철, 앞의 글 199면.

31) 강경석·김선철·정진화·채효정 대화 「기후위기와 체제전환」, 『창작과비평』 2020년 겨울호 227~28면 참조. 채효정의 지적처럼 언론사 기자, 연구자 등 오피니언 리더라 할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는 현실도 위기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큰 이유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구도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깨야 한다. 서울이 쓸 전기를 스스로 생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서울 시민들에게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나 충남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공감능력이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조차 조금 안타까운 일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의 세상 이외의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실험하는 것도 당장 나의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미뤄지고 말 것이다. 기후정의운동의 성장이 기후위기의 진행속도를 넘어서려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에 균열을 내는 질문을 던지고, 타자화의 벽을 넘어야 한다.

새로운 세계의 이름

누군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계를 ‘민주적 생태사회주의’(Democratic Ecosocialism)³²⁾로, 또 누군가는 ‘생태적 맑시즘’(Ecological Marxism)³³⁾으로 명명한다. 국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생태적 레닌주의’(Ecological Leninism) 혹은 ‘생태적 전시 코뮌니즘’(Ecological War Communism)³⁴⁾을 주장하거나, ‘탈성장 코뮌니즘’(Degrowth Communism)³⁵⁾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다른 누군가는 탈성장을 전제로 한 ‘포스트 자본주의’³⁶⁾라고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든 명확한 것

32) 나옴미 클라인 『미래가 불타고 있다』, 열린책들 2021, 342면 참조.

33) John Bellamy Foster, *The Return of Nature: Socialism and Ecology*, Monthly Review Press 2020, 13면 참조.

34) 안드레아스 말름, 앞의 책 196면 참조.

35) 사이토 고헤이, 앞의 책 197면 참조.

36) 제이슨 히켈, 앞의 책 59면 참조.

은 자본주의 자체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며, 이를 극복하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인간에게 호흡을 멈추라고 ‘설득할’ 수 없는 것처럼 자본주의에게 성장을 제한하라고 ‘설득할’ 수는 없”³⁷⁾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생태사회주의나 야만이나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의 이 위기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성장주의로부터 기인했으며, 동시에 불평등을 일으키는 가부장제·제국주의·권위주의(혹은 그 극단적 형태로의 독재)를 거부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면, 그 대적점에 있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문제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넘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실제로도 연결되어야 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동지의 안타까운 죽음에는 원청-하청 구조,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희생되는 지방의 현실, 기후위기에 큰 책임을 가진 석탄발전 문제가 얹여 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측면은 업종을 넘어 제철소 용광로 하청노동자와 닮아 있고, 수도권과의 관계는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뿐 아니라 불안정하고 위험한 삶에 내몰려 있는 도시의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모습도 겹쳐 있다. 이러한 인식의 확장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공개되어 화제가 된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장관의 수중 연설 모습까지도 다다를 수 있다. 확장과 연결은 문제의 인식뿐 아니라 해결 방향의 모색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물론이고 도시의 구조를 함께 고민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며 소비하고 버리는 모든 것,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지구 생태계와 노동에 대해서도 기후정의라는 눈으로 다시 평가하고 고민해야 한다.

37) 머리 북친(Murray Bookchin)의 말. 제이슨 히켈, 앞의 책 122면에서 재인용.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보자.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가? 생태학의 선구자인 유진 오덤(Eugene Odum)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기 전에 상황이 아주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성향이 있고, 생존 전략으로써 화를 냄으로써 가해지는 압박에 대응한다”³⁸⁾고 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그때에 도달하지는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당사자³⁹⁾는 타자화되어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은 역시 당위일 뿐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로만 여겨지는 듯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에도 ‘티핑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그때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고 주저 없이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난하게 만나고, 배우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다양하고 단단한 응결핵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환경운동의 오랜 구호나, 1880년대 영국 생태사회주의자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가 당원중에 새긴 ‘교육하라, 선동하라, 조직하라’(Educate, Agitate, Organize)⁴⁰⁾는 말은 우리가 새겨야 할 지침일 것이다. 

38) 유진 오덤 『생태학』, 이도원 외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1, 363면.

39) 혹은 ‘기후위기 최전선 민중과 공동체’(MAPA, Most Affected People and Areas)라 칭할 수 있다.

40) 데렉 월 『그린레프트』, 이학사 2013, 202면.

세션3) 관행적 기후행동을 넘어서려면 (직접행동 등 새로운 전술의 모색)

발표1. 기후정의운동과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김선철: 독립연구자)

발표2. 직접행동이란 무엇인가: 전장연 투쟁 사례 (박주석: 전장연)

발표3. . 기후운동의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 (박이현, 신영은: 문화연대)

발표4. 대규모 직접행동, 전 사회적 '기후파업'을 모색해보자 (서린,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기후정의운동과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김선철 (기후정의활동가)

1.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등장 이후의 기후정의운동

1990년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체결되고 매년 기후변화당사자국회의(COP)이 열리면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체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기후위기 대응은 30년이 지나도록 진전을 이루기는 커녕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가 그간 과학의 성과들을 집대성해 발간한 ‘1.5도 특별보고서’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포함해 이전까지 국제사회의 대응 목표가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 보여주었고, 이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직접행동의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2018년 가을 시작된 미래를 위한 금요일(FFF)의 ‘기후를 위한 학교파업’은 2019년 9월에 이르러 세계 150여개국 800만명이 참여하는 대형 글로벌 저항 이벤트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후 소위 ‘그레타 효과(Greta effect)’를 일으키며 연행을 불사한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의 확산을 이뤄냈다.

2019년으로 넘어가던 시점 런던을 비롯한 영국 주요 도시의 도심 도로와 교량을 점거하면서 등장한 영국 멸종반란의 비폭력 불복종 행동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2019년초 연방의회와 각 주 의회의 점거 행동을 감행한 미국의 썬라이즈무브먼트(Sunrise Movement)도 400여개 ‘허브(hub)’를 조직하며 미국 기후정의운동 사회세력화의 상징이 되었다.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을 전면에 내건 새로운 흐름은 기후위

기의 근원인 화석연료 기업과 초국적 금융기관, 정부와 의회를 타겟으로 삼아 집회나 행진과 같은 전통적 행동방식을 넘어서는 공공장소 점거 및 교통 방해, 공공건물 바닥이나 계단, 벽에 페인트 칠하기, 화석연료 기업이나 은행 문에 강력 접착제로 손 붙이기, 유리문 파괴, 회의장 점거 및 진행 방해 등등의 급진행동을 전개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조직적으로는 한편에서 반인종주의, 페미니스트, 반전/반제국주의, 반빈곤, 노동운동 등의 흐름과 결합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350.org, 그린피스, 지구의 벗, 시에라 클럽 등 기존 기후/환경 단체들과 시너지를 일으키며(=급진화 시키며) 보다 강력한 기후정의운동의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최근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은 동물반란(Animal Rebellion), Just Stop Oil (JSO), 과학자반란(Scientist Rebellion), 마지막 세대(Letzte Generation) 등과 같은 단체로 확장되면서 더 급진화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들은 도로나 교량을 넘어 공항 활주로 점거, 석탄 탄광 점거, 송유관 파괴, 또 미술관 유명 작품들에 페인트나 통조림 음식을 던지며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백래시 또한 만만치 않다. 영국에서는 2년전부터 멸종반란 등의 단체를 ‘테러리스트’ 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우파의 목소리와 함께 경찰법 개정을 통해 직접행동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유럽에서 마지막 세대를 ‘범죄 단체’로 낙인 찍고 사무실과 활동가 집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포함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4개 주가 에너지 시설과 공공기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시위권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고, 프랑스와 호주에서도 도로 점거 등 기후 직접행동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있다.

많은 정부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 급진적 직접행동 전술은 정치적 좌우를 막론하고 백래시, 비판, 우려를 자아내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는 이들의 행동이 아니었다면 짧은 시간 동안 지금과 같은 기후정의운동의 외연 확장, [특히 젊은 세대의] 기후위기-기후정의에 대한 지지 여론 조성, 그리고 변화를 위한 사회적 압력

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더 적극적인 직접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1] 한국에서도 2019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최초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조직되고, 2020년 11월 13인의 연행자를 낸 첫 비폭력 시민불복종 기후행동 이후 급진적 직접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운동의 확산이나 사회적 변화를 촉진했다 보기는 어렵다.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을 기후정의운동의 무기로 버리고자 한다면 왜 그랬는지 돌아보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 글은 사회운동론의 논의와 해외 불복종 직접행동과의 비교에 기반해 한국에서의 직접행동이 가진 한계를 간략히 짚어보고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이 가진 힘의 원천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은 국가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이고도 공개적인 방식으로 법이나 규범을 위반하는 정치적 도전 행위이다. ‘불복종’ 개념은 법을 어기는 행동, 이에 따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내재한 의도성을 포함한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려면 그 근거가 필요한데, 대개는 부정의한 현실의 법보다 상위에 있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권위와 원칙을 내세운다. 정치학자 존 롤스의 경우 그것을 양심이라 봤고, 간디는 ‘진실에 충실하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사티야그라하’라는 개념을 통해 ‘진실’을 현실의 법보다 상위에 있는 도덕적 권위를 따라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행동의 기반으로 삼아 미국의 연방법을 어길 수 있는 도덕적 근거를 삼았다.

하지만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이 동일한 철학적 기초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비폭력’에 대한 접근에서 차이는 보다 도드라진다. 간디의 사티야그라하는 비폭력을 철학 혹은 세계관 수준에서 정립하면서 개인의 내적 믿음과 신념 체계를 정치 영역에서 드러내는 것이 비폭력 불복종의 핵심으로 이해했다. 간디는 비폭력 저항을 ‘강한 자의 무기’라

불렀는데, 이는 그가 비폭력 불복종을 운동의 ‘수단’ 혹은 정치적 효과의 측면이 아닌 도덕적 정당성 혹은 우월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 체계로 접근했기에 가능했다. 간디는 내면의 도덕적 힘을 통해 상대를 감화시키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굳게 믿었고, 비폭력 불복종도 자신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수행해내는 ‘수동적 저항’의 형태로 이해했다. 이런 점에서 간디의 사티야그라하에서 비폭력은 수단이자 목적의 통일체였다. 정치적 결과는 도덕이 가진 진실의 힘에 따라오는 문제로 파악되었다.

철학적 비폭력의 전통은 이후 미국의 퀘이커 커뮤니티의 반전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운동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은 그 전술적 가치로 인해 더 많이 확산되었다. 60년대 미국 남부 지역의 시민권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이 대표적인 경우다. 킹은 간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지만, 운동의 수단 혹은 전술로서의 비폭력 불복종 행동에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보였다. 400km에 이르는 간디의 소금행진이 내면의 도덕적 힘을 공적 공간에서 표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면 킹이 주도했던 알바니나 버밍엄에서의 행동, 또한 세 번에 걸쳐 셀마에서 몽고메리로 향했던 행진은 하나 같이 의도적으로 주 정부와 경찰의 폭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했다. 그는 평화롭게 행진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흑인들에 대한 백인 경찰의 잔인한 폭력성을 드러내 사회적 분노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주된 전술로 삼았고, 실제 버밍엄에서 경찰이 강력 살수차로 어린이들을 날려보내고 경찰견을 풀어 청소년 시위대를 물어뜯게 하는 폭력의 이미지가 전 세계로 타전되면서 대대적인 운동 확장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이미지는 소련과의 정치/경제적 경쟁으로 특징 지워지는 냉전 시기 미국의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에 압박을 느낀 미국 정부는 2년 후 결국 시민권을 법제화하게 되었다.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의 전술은 납세나 병역 등 법에 의해 시민의 의무로 규정된 것을 거부하는 ‘비협조’에서부터 파업이나 농성 같은 물리적 행동, 또는 도로나 교량 점거와 같은 불법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의 공통 분모는 주어진 법과 제도를 따라 반복되는 일상을 뒤흔들고 파열시켜 위기상황을 창출하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자주 인용되는 킹의 문구처럼, “비폭력 직접행동은 위기를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켜 협상을 거부해왔던 이들이 이슈를 제대로 대면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전술이기 때문이다.[2] 이는 사회운동의 힘이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유지되는 권력 체제에 파열을 내거나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을 때 변화의 힘이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제도권 사회운동 연구의 결과들과 궤를 같이 한다. 사회운동론의 거장인 시드니 테로우가 말하듯, “사회운동이 가진 가장 매력적인 힘은 행동을 통해 저들(opponent)을 놀라게 하고, 무력화시키고, 저들의 일상을 멈추게 하는 것에 있다. 세상의 일상적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것(disruption)은 사회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사회운동을 창조적이고 때로는 위험하게 만드는 혁신의 원천이다.”[3] 이런 맥락에서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이 가진 변화추동의 잠재력을 더 큰 사회운동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3. 더 큰 운동의 계획 속에 배치되는 비폭력 불복종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불복종 직접행동이 몇 차례 있었지만 위기를 조장하고 긴장을 조성하지는 못했다. 2000년대 들어 기후-환경운동이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거버넌스를 주된 활동전술로 삼는 소수 활동가 중심의 운동으로 정착되면서 대중운동의 기반이 약해지다 보니 불복종 직접행동을 함께 기획하고 사전 트레이닝에서부터 다양한 사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의지와 자원을 가진 단체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런 조건에서 전개된 몇 차례의 직접행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파장을 그려낼 수 있었으나, 행동의 소규모성으로 인해 대중적 접촉면은 작고 상대적으로 고립된 조건에서 더 큰 운동을 만들기 위한 면밀한 계획 속에서 행동을 배치하거나 행동을 통해 어떤 정치적 성과를 성취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은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비폭력 직접행동에 참여할 활동가 풀이 확장되지도 못했고 직접행동 당사자들의 재

판투쟁도 더 큰 운동의 흐름 속에서 모멘텀(여세)을 키워가는 계기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 파장이 제한된 조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불복종 행동이 주목을 끌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전략적으로 배치되는 불복종 직접행동의 필요성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나홀로 치고 나가는 직접행동 보다는 피케팅, 집회와 행진에서부터 토론회/공청회, 거버넌스 개입 등등 기존 기후(정의)운동의 전술들과 어떻게 결합되고 배치될 것인지, 현실의 담론 지형에 파열을 내기 위해 어떤 프레임(혹은 담론) 전략과 대안이 필요한지, 불복종 직접행동을 통해 만들어진 관심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면서 판 자체를 키울 것인지 등등에 관한 정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은 물론 ‘더 큰 운동’을 전제하고 동시에 보다 강한 내적 통합력을 가진 사회세력으로서 기후정의운동의 성장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1) 일회성, 국지적 행동만으로 변화는 오지 않는다

소수에 의한 국지적 긴장 조성만으로는 변화를 위한 힘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역사상 성공적인 불복종 행동은 하나 같이 더 큰 운동의 한 부분으로 기획되었기에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인도의 소금행진은 인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납세 거부와 행진 경로에서의 다양한 집단행동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고, 24일의 행진 기간 동안 6만 명이 넘는 이들이 구속되는 대규모 행동을 이끌어냈다. 미국의 시민권 운동도 몇 차례의 불복종 행동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인종분리 정책에 저항하는 버스 보이콧이나 식당 연좌행동(sit-in)에서부터 알바니와 버밍엄의 도심 시위와 셀마 행진과 같은 불복종 행동은 예외 없이 영향력 있는 시민권 운동 조직들에 의해 기획되었고, 인구 5만의 알바니에서만 천명 이상이 감옥에 갇히는 거대한 참여의 물결을 수반했다.

최근 국외 기후정의운동도 마찬가지다. 2018년 활동을 본격화한 이래 미국 썬라이즈

무브먼트의 활동의 초점을 변화하는 궤적을 보여왔다.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는 연방 의회와 주 의회 점거를 축으로 한 전국적인 비폭력 불복종 직접행동 캠페인을 벌이며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을 요구했다. 2020년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행동 보다는 각 지역의 풀뿌리 조직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바이든 당선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특히 수만명의 자원활동가를 조직해 전국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이었던 조지아 주에서 바이든이 이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썬라이즈무브먼트의 입장은 바이든 정부 초기 상당부분 받아들여졌으나, 바이든 취임일인 1월 20일 전국 동시다발 행동을 조직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와 시위, 행진은 계속되었다. 선거를 통해 민주당 안의 좌파 블록이 조금씩 커지면서 썬라이즈무브먼트는 지난 두 해 동안 지역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룹(DSA)와 노동자 가족당(WFP) 등과 협업하며 제도 정치권에 개입함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중이다. 비폭력 불복종 직접행동을 통해 긴장과 위기를 조성하면서 기후정의운동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권 정치에 개입하려는 전략을 읽을 수 있다.

영국 멸종반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궤적을 그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비폭력 불복종 직접행동 네트워크였던 멸종반란의 행동은 초기 영국사회에 크나큰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면서 엄청난 백래시도 불러왔다. 논쟁은 격화되고 멸종반란에 대한 비난도 컸지만 그만큼 기후위기 담론은 주류화 되었고(2021년 COP27때 비행기를 타고 글래스고우로 날라간 존슨 총리에 대한 비판이 일자 돌아올 때는 기차를 타고 올 정도), 집권 보수당으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앞선 기후정책을 채택하게끔 강제하기도 했다. 전국 단위 혹은 지역 단위에서 교통 방해, 건물 점거, 페인트 칠하기 등의 직접행동을 축으로 활동을 벌여온 멸종반란은 그러나 2023년을 맞아 대중의 일상을 교란하는 직접행동을 중단하는 대신 10만명이 연속적으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여 의회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작전명도 ‘큰 싸움(The Big One)’으로 잡으며 역대 최대의 동원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궤적 변화의 배경은 다양하다. 주류 언론은 멸종반란이 불복종 행동을 포기했다 선전하며 탄압과 민심 이반을 이유로 지적하고 있는데, 악의적인 면도 있지만 완전한 거짓말도 아닐 것 같다. ‘연행자 3000명’을 목표로 했던 2022년 대규모 직접행동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던 것도 변화의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기후정의운동의 의제들을 남반구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숙성되고 국내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지층 결집이 완료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후정의운동의 세력화가 구비되었다. 게다가 멸종반란이 안 해도 불복종 직접행동은 JSO나 과학자 반란 등 새롭게 등장한 공동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변화된 조건에서 멸종반란은 올해 5월의 지방선거 및 2025년 1월의 의회선거 앞두고 제도적 변화 추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크다. 주류 언론의 프레임 따라 멸종반란이 불복종 직접행동을 포기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확장되는 영국 기후정의운동의 지형 속에서 멸종반란이 새로운 역할을 자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회적, 국지적 행동으로는 변화를 추동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는 가운데 배치되어야 하며, 더 큰 운동의 목표에 따라 불복종 직접행동이 전술적으로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담론과 주요 행위자들 간의 힘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만들어내고 집행할 수 있는 연결된 더 큰 운동이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불복종 직접행동의 역할이 마냥 상대화 될 필요는 없다.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기상황을 만들어 정치적 공간을 열어놓는데 이보다 나은 전술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 백래시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행동의 목표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이들은 대체로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이지만, 행동이 초래할 민심 이반과 백래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우려를 가지기도 한다. 이런 경향은 세계 어디서나 발견되는데 운동을 마치 대면 설득

이나 동의를 구하는 문제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한 한국 기후나 환경운동에서는 더 큰 무게로 느껴지는 것 같다. 많은 기후 활동가들(특히 젊은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악플’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하고 백래시 유발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강하다. 이런 문화는 그만큼 기후-환경운동이 ‘우리’와 ‘저들’을 가르는 전선을 치는 운동의 전통이 약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역사는 성공적인 모든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은 어김없이 백래시를 수반했음을 보여준다. 여성 참정권 운동의 급진적인 행동은 여성들이 주의를 끌기 위한 스텐트라는 식으로 매도되기 일쑤였고 킹 목사는 분열주의자니 공산주의자니 하는 비난을 일상적으로 받았다. 여성 참정권 운동에 반대하는 반씨프라켓 운동도 등장했고 흑인 시민권 운동이 힘을 얻어가면서 KKK 등 인종주의자들의 동원과 폭력도 늘어났다.

그러나 백래시 담론과 운동이 등장하면서 각각의 의제들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시대를 대표하는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도 똑같은 양상을 보였다. 지금은 ‘민주화 투쟁’이 마치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말하지만, 당시 학생운동권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아이자 북한을 이롭게 하는 불순분자로 취급되었다. 군사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화염병 시위와 최루탄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운동권 학생들을 손가락질했다. 그럼에도 1982년 부산 미 문화원 방화/점거 사건 이후 불복종 행동은 지속되었다. 1984년 말 민정당사 점거와 85년 봄 서울 미 문화원 점거 등 상징적 공공장소에 대한 점거와 도심 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 1987년초 대학생 박종철의 치사고문 사건이 일어나자 대중적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고 6월 이한열이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자 대중적 저항은 폭발했다. 백래시와 탄압이 두려워 ‘과격함’ 행동을 포기했다면, 그래서 민주주의의 문제가 더 이상 국내외에서 주요한 이슈로 여겨지지 않았다면 1987년의 정치적 전환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회적 백래시가 있다는 것은 공고해 보이던 담론과 정치 질서 속에서 안정과 편안함을 찾던 이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징표이자 기존 질서에 파열이 일어나기 시작

했다는 징포다. 사회운동에겐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유발시켜야 하는 과제다. 그러나 백래시가 자동적으로 사회운동을 강화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사회운동을 통해 제기하고자 하는 이슈가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대안적 전망(혹은 프레임)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하나이며, 백래시를 견뎌내면서 전략적 전진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조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이다. 이런 조건이 갖춰졌다면 백래시가 강할수록 ‘우리 편’도 강해진다는 믿음을 가져볼 수 있다.

3) 불복종 직접행동을 증장기적 계획 속에 배치하고 백래시에 맞설 조직적 힘의 구축이 필요하다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 지지자들에게는 성찰과 연대의 기회를 제공하며 결집시키기도 하지만 반대편에겐 위협으로 다가가 백래시를 유발하기도 한다. 정부는 형식적 법논리를 앞세우며 ‘불법행위’를 응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충격요법이 어떤 변화를 초래할 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한다. 정부가 기후 이슈에 대한 대중적 의식흐름에 그다지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후정의운동의 정치력이 약함을 보여줄 따름이다. 역으로 노동운동이나 장애인 권리 투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면서도 기민한 대응은 노동조합과 장애인 권리 단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만만치 않음을 방증한다. 성장주의에 찌든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가 가진 가장 큰 힘의 원천은 이들이 경제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위치성에서 나오고 장애인 권리 투쟁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일상적 작동에 파열을 낼 수 있는 힘에 있다. 모두 지금의 법과 행정 질서에서는 불복종 직접행동이라는 충격요법이자 엄청난 백래시를 유발하는 전술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오랜 탄압과 강력한 백래시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지속해왔다는 것, 그러면서 조금씩이나마 진전을 이뤄내왔다는 것이다(긍정적인 변화는 언제든 뒷걸음질 칠 수 있지만).

단단한 조직력은 이것을 가능케 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노동과 장애 모두 대중 기

반의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이는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동원을 이뤄내고 다양한 전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이들이 가진 ‘파열력(disruptive power)’으로 인해 정부와 자본 혹은 지자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의 탄탄한 조직기반은 탄압과 백래시를 (때로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물론 기후정의운동은 잠재적 ‘조직대중’의 풀(pool)이 뚜렷한 이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 그러나 썬라이즈무브먼트나 멸종반란 등 해외 사례들을 보더라도 불복종 직접행동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과 전술의 배치/활용을 가능케 하는 탄탄한 조직기반이 필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COP27에 참여했던 기후정의운동의 국제 연대체의 이름은 (2015년 COP21과 같은) “단단한 뿌리를 위한 COP27 최일선 참가단(It Takes Roots COP27 Frontline Delegation)”이었다. 불충분하나마 유엔기후변화협약이 기후정의 의제들을 받아 안고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와 같이 불가능할 것 같은 과제가 (역시 매우 불충분하나마) 합의될 수 있었던 것도 ‘북반구 내의 남반구’를 포함한 남반구 기후정의운동이 나름 조직적 뿌리를 내리고 연대할 수 있었던 탓이었음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조직적 힘을 구축하는 것은 단지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의 효과적 작동에만 도 움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저들’이 누구인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 에서 우리는 부정의한 현실에 대한 대중적 분노의 표출이 부정의 공범인 민주당의 지지 율과 의석 수 증가로 결론나는 경험을 슬하게 해왔다. 이런 사회운동의 현실에서 기후정 의운동의 조직적 힘을 구축하는 일은 주류 정당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영향력 있는 사회세력으로 설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개별적인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과 기후정의운동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한국의 불복종 직접행동은 기후정의운동의 전략적 계획 속에서 배치 되지 못했다. 작년 여름 시작된 탄증위 해체 공대위와 이를 이어 받은 기후정의동맹이 어 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 또한 924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기후운동의 잠재력을 확 인한 시점에서 이런 현실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을 중요한 전술로 사고한다면 말이다.

[1] 예를 들어, Dylan Bugden. 2020. "Does Climate Protest Work? Partisanship, Protest, and Sentiment Pools." *Socius* 6: 1–13; Stephen Tackeray. 2020. "Civil disobedience movements such as School Strike for the Climate are raising public awareness of the climate change emergency." DOI: <https://ro.uow.edu.au/smhpapers1/1130>; Von Storch et al. 2021. "New Climate Change Activism: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Social Anthropology* 19(1); Mallika Talwar. 2022. "Do Climate Protests Shift Public Support for Climate Change Action?" *Yale Environmental Review*.; The Lancet Editorial. 2022. "A Role for Provocative Protest." *The Lancet Planetary Health* 6(11); Stuart Capstick et al. 2022. "Civil Disobedience by Scientists Helps Press for Urgent Climate Action." *Nature Climate Change* 12(9).

[2] 마틴 루터 킹, "알라바마 버밍엄 감옥에서의 편지" 중. 1963년 04월 16일. 킹 목사 주도로 흑인 시민권 확보를 위한 활발한 투쟁이 전개되던 당시 목회자를 포함한 미국 남부의 '양심적 지도자들'은 흑인들이 평등한 시민권 가지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협상을 추구하지 않고 갈등과 혼란을 불러오는' 시민권 투쟁을 비판하고 있었다. 대대적인 시위와 행진을 조직하기 위해 킹 목사가 버밍엄에 도착하자 이 지도자들은 '외부자'인 킹목사(킹은 알라바마 주 바로 옆 조지아 주 출신)가 '문제를 일으키러' 왔다고 성명서를 발표해 비판했다. 이 편지는 이들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의 형식으로 쓰여졌다. (원문 제목은 "Letter from Birmingham Jail." <https://kinginstitute.stanford.edu/encyclopedia/letter-birmingham-jail>)

[3] 시드니 태로우. [운동의 힘] 99쪽. (Sidney Tarrow. 2011.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메모

단일한 공간, 복수의 전선, 다양한 신체들의 직접행동

박주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

1. 직접행동이 무엇인가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

- 매번 발제 때마다 가장 스스로 고민하는 지점 : “조직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한 질문에 내 의견을 어디까지 개진할 수 있을까?”

- 전장면에서는 직접행동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보다는 “우리는 누구와, 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집중. 즉, “전선과 전술”이 가장 주된 논의. 우리의 전선은 어디인가? 장애인의 투쟁 공간은 지하철. 무정차 지하철은 비장애인들의 권리만 보장하는 사회를 의미. 허나, 이 공간에서의 투쟁 전선은 계속해서 변화함.

- 우리의 투쟁 전선은 한국판 T4 프로그램을 자행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효율성의 논리였음. 전술은 시작한 발판을 이용한 지하철 타기로 비장애인중심주의·자본주의 사회를 장애인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었으나, 오세훈과 ‘무관용’ 폭력 관치 선언 이후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시민을 끌어들이며, 새롭게 전선을 구축하고, 권력의 폭력에는 ‘무대응·비폭력’으로 저항하는 전술을 수립.

* 지하철 타기의 전략·전술¹

1) 법원 조정안

- 전장연 : 유감스럽고 불공정 조정. '수용'.
- 오세훈 : '비합리적'이라며 '거부'.

2) 열차 탑승

- 전장연 : 무대응·비폭력, 장애인차별 불복종운동, '저항'
- 오세훈 : '무관용'이라며 '지구 끝까지 찾아오겠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의 폭력적 관치 선언. '무정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국민 호소문

시민분들께 호소합니다.

지하철행동'은 장애인권리예산과 입법을 향한 '권리투쟁'입니다.

'지하철행동'은 '세상에서 목소리가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세상, 들으려 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실천이자 저항입니다.

시민여러분,

23년 새해는 탐욕스런 '권력투쟁'에 강요된 '각자도생'보다 권리를 향한 '연결과 관계의 공간'을 내어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비장애인만 '시민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장애인만 타는 '시민권 열차'에 '탑승'시켜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레이크 없는 '무정차' 폭력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전장연은 '권리를 향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1.2.

1 [논평] 오세훈 서울시장 법원 조정안 거부, 전장연 오세훈서울시장 관치폭력 거부 <https://sadd420.notion.site/d59f78f8fa5f48aca79f30d711ae7809>

- 전장연의 투쟁은 단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예술, 저술, 연구, 협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다양한 전술이 무엇이고 다양한 전술이 가진 효과에 대한 고민. 실제로 거버넌스로서의 전장연을 조명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짐²³. 물리적 투쟁과 동시에 국회와의 협상력을 가져감으로써, 현장에서의 요구안이 국회 각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유도. 각 정당 원내대표들과의 협상력을 가져오기 위한 토대를 마련.

- 물론 가장 중심이자 핵심인 전술은 지하철 타기임. 이는 투쟁공간으로서 ‘지하철’이 재해석된 결과. 투쟁 초기 ‘지하철=이동권’으로 인식되어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권의제로 전달되는 의제가 축소됨. 그러나 투쟁이 장기화되며, 이동권 뿐만이 아닌, 다른 권리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하철이라는 공간 자체가 장애운동의 현장성을 가진 하나의 의미체로 재해석되기 시작.

- 22년 전에도 지하철을 탔으나, 출근길을 막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존재가 드러남. 이 사회의 가장 핵심에 다가갔기 때문. “21세기 가장 극렬한 존재투쟁”⁴. 이 과정은 권리의 언어로 이루어짐. 전장연의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존재감과 존엄성을 확인한 것.

2 변재원. (2022). 활동가의 관점에서 행정학 바라보기.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2, 3349-3374.

3 시민력은 투쟁이다 <https://brunch.co.kr/@culturalaction/37>

4 [임소연⑤] 21세기 가장 극렬한 존재 투쟁 / 홍은진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62>

"오늘 우리 투쟁을 조롱하고 짓밟은 경찰,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직원들. 여러분 모두 나중에 나이들고 약해져서, 혹은 장애를 갖게 되면 꼭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용하십시오. 꼭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하십시오. 절대 시설가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것을 위해 처절하게 투쟁해온 우리를 짓밟고 모욕한 오늘을 꼭 기억하십시오."

- "장애인도 지하철 타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14시간 외친 2023년 1월 3일,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2023.1.2.

2. 단일한 공간, 복수의 직접행동

"만일 저항이라는 게 그것이 쟁취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바로 그 원칙들을 실행하는 일이라면, 저항은 복수(複數, plural)여야 하고, 신체를 매개로 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공적 공간에 애도 불가능한 이들이 모이는 일을 수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실존과 살 만한 삶에 대한 그들의 요구, 간단히 말해 죽음에 앞서 삶을 온전히 살겠다는 요구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⁵." 주디스 버틀러,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들: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김응산·양효실 옮김, 창비, 2020. p.305-306

- 지하철을 앞으로 사수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정치적이고, 중요한 일이 될 것으로 전망. 존재를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이기 때문. 이 때, 이 존재는 복수의 몸.

- 11월 7일 '제4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의 종착지는 삼각지가 아닌 강동구

5 주디스 버틀러,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들: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김응산·양효실 옮김, 창비, 2020. p.305-306

청역. 활동지원 시간 확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을 요구했지만, 강동구청장은 반영하지 않고, 면담도 일방적으로 파행. 이에,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집회를 40분 간 진행⁶⁷.

- 2022년 4월 11일 9차 삭발결의자는 노금호 동지. 척수성근위축증 희귀난치성질환을 지닌 지체장애인. 전장연의 고가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첫 당사자. 투쟁은 전개한 1월 이후, 4월 지하철 타기에 대한 관심을 활용하여 건강권 의제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기자회견을 지하철에서 진행하기도 함⁸.

- 중앙 뿐만이 아닌 지역, 이동권 뿐만이 아닌, 지역생활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와 노동권, 건강권 등 다양한 권리들이 다양한 당사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의 전술로 존재가 드러남.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한 저항은 복수의 것.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 핵심을 통해 다층을 포섭하는 행동 양식.

“나는 지하철 이동권 시위를 ‘지하철 탑승 직접행동’이라 부른다. 이건 기본권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의도적·공개적으로 정책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서인지 사람들은 시위의 목적을 장애인 이동권 보장으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직접행동은 이동권 보장 너머 장애인 권리 예산, 탈시설, 교육권 등 전반적인 장애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⁹

6 전장연, 8호선 강동구청역서 40분 동안 집회...열차 운행 지연<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107/116350425/1>

7 약속 파기한 강동구청, 장애인들 계단 기어 올랐다<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73>

8 [투쟁결의문] 척수성근위축증으로 고통의 일상을 보내는 저는, 살고 싶습니다 / 노금호<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03>

9 장애학의 시선, 절망 대신 희망을 꺼안다<https://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8836>

3. 직접행동을 통해 배운 것 : 내 삶은 나의 것임을 알고, 내 동료를 믿는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결정하는 것. 그 누구도 나의 의지, 앗아갈 수는 없네"

- 노들장애인야학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작곡한 노래 T4

-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2022년 내내 함께 지하철을 탐. 그 과정에서 '선전전'이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한 적은 단 한번도 없음. 허나, 오세훈의 법원 조정 결과 불수용과 무관용의 원칙 이후 같은 사람이었지만 다른 이들이 됨. 그들의 삶을 권력에 빼앗김. 허나,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빼앗겼을지언정 삶은 빼앗기지 않음. 그래서 어제든 오늘도 내일도, 22년째 같은 권리를 외침.

-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오리가 작성한 "비폭력직접행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¹⁰에 따르면, "비폭력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책임감. 사람들 스스로의 삶의 방법을 인식하는 것. 비폭력적인 질서를 지속하는 것에서 개인의 성찰과 결단이 아닌 회의 결의, 조직의 지시, 내부 규율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익"하며 "비폭력은 모든 공동체, 그리고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

-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지하철"이라는 장소와 "삭발"이라는 행동 양식으로 참여하고 결의를 표현하며 "당사자의 사회적 존재 투쟁만이 마침내 권력을 넘을 수 있다."는 명제의 증거를 매일 차곡차곡 쌓아감. 이 과정에서 비장애인 활동가들도 함께 개인의 결단을 표출.

- 전장연이 낸 집회·시위 매뉴얼 2022에서는 "동료와 함께하기"를 제안. "현장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한 참여자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지원"하여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하며, 감정 상태를 확인"해주는 것.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연행되거나 강제 집행당하는 과정, 경찰의 폭력

10 비폭력직접행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s://www.sarangbang.or.kr/hrdailynews/68551>

앞에서 한 발자국 빠져있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닌, 동료를 믿는 것. 육체적으로 경찰이 만든 폴리스라인에 고립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고립되지 않고, 옆사람의 감정과 안아줌을 느끼는 것도 중요.

- 지하철은 사회에 ‘연결과 관계의 공간을 내어주시기 간곡히 요청’하는 공간인 동시에, 동료들과 함께 스스로 연결과 관계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함.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조직함으로써, 현장에서 투쟁의 답을 찾는 우리는 비장애중심 사회를 한 걸음 이동시켜나갈 것임.

기후운동의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

박이현, 신영은(문화연대)

지난 3년간 기후운동 전술 평가 : 선언의 시간, 투쟁의 시간, 조직의 시간을 지 나

지난해 9월 24일, 국내 기후운동역사에서 가장 많은 대중들이 기후정의행진에 집결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계도 명백했다. 기후변화가 구글코리아 집계 기준 2022년도 뉴스/사회 분야 인기검색어 1위에 등극한 데에 비해 3만 여명이란 숫자는 아직 턱없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한편, 정부는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퇴보하고 있으며, 기업의 그린워싱은 한껏 교활해지고 있다.

2019년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 이후(주최측 추산 7,000여명 집결),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인 기후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기후변화 혹은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이미지는 아마 북극곰일 것이다. 혹은 지구가 앓고 있는 그림이나 우상향하는 그래프. 지금-여기-우리의 문제가 아닌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들의 한계는 명확했고, 지난 3년간 기후운동은 주요 목표, 투쟁 대상, 주체, 캠페인 언어 등에서 적지 않은 폭의 변화를 거쳐왔다.

	2020년 선언의 시간	2021년 투쟁의 시간	2022년 조직의 시간
주요 타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 • 2020.7. 문재인 정부, 한국판 그린뉴딜 계획 발표 • 2020.9.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통과 • 2020.12.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유엔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2.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 2021.5. P4G 규탄행동 /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 2021.8. 국회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의결 • 2021.9. 기후정의 세계공동행동 '지금당장 기후정의' • 2021.9. 탄중위해체 공대위 출범 (2021.12.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2. 기후대선 전국행동 • 2022.3. 대통령 선거(윤석열 당선) • 2022.4. 기후정의동맹 출범 • 2022.4.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행진 • 2022.9. 924 기후정의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6.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한 그린뉴딜 촉구 기자회견' • 2020.6.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 2020.9. '우리는 살고 싶다' 비대면집회 • 2020.11. 1.5도씨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P4G 2021.2. 두산중공업 멈춰! 행진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철회 액션 • 2021.3. 기후불복종 직접행동 '기후파괴 당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철회하라!' • 2021.3. 포스코 주주총회 <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 포스코OUT> • 2021.5. P4G 멈춰! 행진 • 2021.9. 2030 NDC 상향안 간담회 저지 행동 • 2021.9. 기후정의 세계공동행동 '지금당장 기후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2. 기후대선 전국행동 '기후바람' • 2022.3. 포스코 악당에 맞선 노동시민사회 규탄행동 • 2022.4. 기후정의를 위한 행진 <오늘도 기후바람은 순풍> • 2022.4.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행진 • 2022.5. 기후정의동맹 출범 • 2022.9. 924 기후정의행진
주요 액션 및 대중집회			

	<div data-bbox="192 1052 983 14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정부 활동 및 캠페인 성격의 프로젝트가 기후운동의 다수 차지 • 정부, 국회, 지방자치 단체 등 정부기관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동참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법 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으며 국가 단위 목표도 국제기준에 미달 • 환경단체 이외 확장성 부족하였으나, 새로운 기후운동 세대 출현 • 신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투쟁 등 지역 현장 일부 결함 </div> <div data-bbox="192 608 983 10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정의'를 중심으로 담론 예각화(vs. 시장주의, 기술중심주의) • 불복종 직접행동의 등장 및 확산 • 소규모 투쟁은 활발하였지만, 코로나 등의 한계로 대규모 행동 미진 • 탄중위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기후운동 분화 </div> <div data-bbox="192 154 983 6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투쟁 현장 및 노동운동 등 타 운동과의 보다 적극적인 연결 도모 • 시민사회 전반에 기후 의제 전면화. 기존에는 기후운동 (하위) 부문으로서 조직되었다면, 이제 운동들을 가로지르는 연대운동으로 자리매김 • 기후정의동맹 출범으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단일 상설 연대체 지위 상실 • 동맹의 활동과 더불어, 924 조직위 활동으로 기존에 비상행동의 조직이 미진하였던 지역/노동/인권 등으로 확장 •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 기후 의제 대중 집회 개최 성공(3만 여 명) </div>
--	--

특징

2020년은 선언의 시간이라 명명할 수 있다. 당시 기후운동은 기후위기가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고발하는 데에 주력했다. 보편성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지구공이 주요 오브제 중 하나로 사용되었으며, 시급성이라는 점에서 시한폭탄이 애용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집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선 신발들을 모아 시민들의 행진을 시각화하기도 했다.

적은 인원과 부족한 자원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기후운동은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가능한 여러 언론과 접촉하여, 보도가 잘 될 수 있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 액션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중강연도 활발하게 열렸고 기후위기를 고발하는 영상 콘텐츠도 확산되었다. 그 결과 기후위기라는 말은 꽤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사회운동 진영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자체까지 나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선언에 나섰다. 하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그들의 선언이 반쪽짜리라는 게 드러났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제안하는가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시장주의적인 임시방책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그마저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동력이 부족한 안이었다. 오히려 뒤에선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거나 해외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려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기후운동은 2021년에 투쟁의 시간에 돌입한다. 기후운동을 상징하는 건 이제 조형물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아서는 활동가들의 몸이 된다. 가덕도신공항을 막아내기 위해 멸종저항서울과 멸종반란의 활동가들은 민주당사를 막아서며 경찰에 연행된다. 노들섬에서 탄증위의 밀실 담합을 고발하며 경찰과 온몸으로 부대끼며 저항하고, P4G에 맞서 동대문에 모여 초록 깃발을 휘날리며 연막탄을 피우고, 기만적인 기업의 로고를 희망의 초록색으로 덧칠한 뒤 그 위에 올라섰다.

여러 색깔의 직접행동은 그 절박함 만큼이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지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 있어야 했다. 그렇게 기후운동은 2022

년에 조직의 시간을 보낸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선을 맞아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말들을 의제화한다. 기후정의동맹이 출범해, 정책의 언어를 넘어 자본주의 성장체제에 맞서는 주체들의 선언을 준비한다. 여러 기후운동 주체들이 힘을 모아 체제전환을 골자로 하는 924 기후정의행동을 주최한다. 한편, 2022년도에는 2021년만큼 직접행동이 이어지진 않았다. 2022년도의 전술이 변경된 탓도 있지만, 2021년도 직접행동으로 인한 여러 소송과 재판으로 또다른 직접행동이 출현할 동력을 소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3년도 기후운동 전술 제안 : 예술행동이라는 지렛대를 통해 문화적 전환을

2023년은 여러모로 기후운동에 있어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핵발전 정책으로 불려도 무방할 만큼 퇴행했다.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는 이제 포섭의 대상도 못 될 정도로 퇴보했다. 지난 몇 년간 기후운동의 주요 전략은 탄소 배출량 감축 위주의 대정부투쟁이었으나, 2022년을 경유하며 체제 전환으로 담론이 확장되었다. 한편, 기후운동에 있어 연대활동의 지형도 꽤나 변해, 집중력 뿐만 아니라 확장력과 균형 감각이 더욱 중요해졌다.

관성적인 사회운동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위기감이 지속된지 오래다. 사회운동은 지난 시기, 체제로의 편입, 전문가주의, 이데올로기와 일상과의 분리 등 여러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꾸준히 실패해왔다. 기후운동은 지난 사회운동을 반면교사 삼아, 꾸준히 자기 혁신을 거듭해왔다. 다른 의제와 대비하여, 대중의 동력도 넘치는 편이며 새로운 운동주체 역시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여전히 기후운동의 주요 조직 대상은 새롭게 등장하는 주체들이 아니라 기존 사회운동 조직에 가깝다. 기성 운동을 기후 이슈의 부문으로 조직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후 의

제로 대중들을 조직하고 이들이 다양한 의제로 관심을 확장해갈 수 있도록 활동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대중과의 접면만 늘려선 안 될 것이다. 듣고 따르는 주체가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 등장할 수 있게 우리는 여러 경로를 새로 만들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기후운동의 중요한 과정이자 방법으로 예술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행동은 주체면에서 예술가들의 예술을 통한 사회참여를 넘어선다. 보다 모든 시민들이 예술이 지닌 역동성과 일상성, 확장성을 통해 직접행동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기후운동에서의 예술행동은 이미 만들어진 메시지를 예술을 통해 돋보이게 하는 방법에 가까웠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이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을 고발하기 위해 회색 물감을 뒤집어쓴 기자회견이나, 포스코 주주총회에 방호복을 입고 기후·노동·인권 탄압에 희생된 자들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물감을 뿌렸던 액션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 효과적이었으나, 투쟁 주체를 성장시키거나 일상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하지만 보다 강력한 예술행동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일시적인 시간과 제한적인 공간을 넘어 투쟁을 확장할 수 있다. 이처럼 예술행동이 역동성을 발휘한 사례로 희망버스 운동을 들 수 있다.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고공투쟁이 조합원들의 연대를 넘어 사회 전반의 연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회적 문화기획이자 예술행동의 하나였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희망버스 탑승객에 나눠주었던 1만개 종이배는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날랐고, 전국에서 모인 음식과 물품들 그리고 예술가들의 공연으로 집회공간은 축제공간으로 변모했다. 영도에서 최루액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인왕산 등반 대회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뒷산을 넘기도 하며, 결국 정리해고자 복직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용산참사 현장에서의 예술행동은 도시 재개발과 철거민 운동에 있어 전환의 계기가 되어 두리반 투쟁과 명동 재개발 반대투쟁 등 자율적인 예술행동으로 이

어졌다. 철거가 들이닥치는 순간 뿐만 아니라, 긴장감이 넘치는 연대의 시간에 예술행동은 주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마련하며 공동체의 기반을 다졌다.

기후운동에서 예술행동의 역량이 발휘된 사례로 ‘기후위기를입는다’를 꼽을 수 있다. ‘기후위기를 입는다’는 924 기후정의행동을 맞아, 시민·활동가·소설가·기획자들의 이야기와 슬로건을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그래픽 디자이너가 100개의 포스터를 제작한 뒤, 실크스크린 티셔츠로 제작하여 일련의 활동을 벌이는 프로젝트였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메시지 전달형 캠페인을 넘어, 시민들의 참여를 고려한 프로젝트였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입는다’에 앞서 슬로건과 내러티브를 수집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된 ‘기후와 당신의 이야기’를 가졌다. 10여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위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나누었다.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선 기후위기가 문제라는 지식을 넘어서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때로 끓어오르는 분노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며, 이런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시민이기도 하다. 일상 공간에서의 소규모 워크숍을 통해 지식을 넘어 행동의 가능성을 나눌 수 있었다.

활동가를 넘어 디자이너, 기획자 등 여러 주체들을 규합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련의 결과들이 휘발되는 게 아니라 과정에 연계성이 있었으며, 제작된 티셔츠들을 시민들이 입고다니며 일상에서 이야기나눌 수 있는 거리를 남겼다는 지속성도 있었다. 한편, 특정 장소와 시간, 주최자를 넘어 확장 및 응용가능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한 판의 실크스크린이 수 백장의 티셔츠를 찍어낼 수 있듯, 잘 기획된 프로젝트는 서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체제 전환은 드라마의 사이다 서사나 참교육 서사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보다 복잡하고, 주체들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 안에서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체제는 우리의 구호만큼 선명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당위성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여전히 텀블러와 대중 집회 사이 즉 일상과 정치 사이의 시공간은 너무 멀기만 하다. 예외적인 이벤트에 참여하는 걸 넘어, 윤리적 소비를 넘어서는 일상에서의 실천을 조직할 수 있도록 여러 실험이 필요하다. 예술행동은 기후운동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운동이 문화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관성에 젖어있다면 우리의 목소리는 반향실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대규모 직접행동, 전 사회적 ‘기후파업’을 모색해보자

서린, 한재각(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1. 시도중인 기후파업

기후파업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각국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출근 또는 등교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우선 정의해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학교 파업’이 대표적이며, 제한적이지만 노동자들에 의한 ‘기후파업’도 관찰된다.

1) 청소년들의 학교파업

스웨덴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스톡홀름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지난 4년간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 3월 15일 : 1차 글로벌 기후파업, 125개국, 2200여 도시 에서 100만명이 참가.

• 5월 24일 : 2차 기후파업, 125개국 1600여개 도시에서 열림. 처음에 그녀는 혼자였지만 곧 다른 사람들이 합류했다. 9월 8일, 그레타 와 그녀의 동료들의 학교 파업은 스웨덴 정책이 파리 협정에 따라 2°C 미만의 안전한 경로를 제공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해시태그 #FridaysForFuture 를 만들고 전 세계의 다른 젊은이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함. 이것이 기후에 대한 세계적인 학교 파업의 시작되었다.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인류의 목소리 없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당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마침내 기후 위기를 위기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이며 우리는 우리의 전체 문명을 위협하는 세계의 의사결정자들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 기후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고, 죽어가고 있고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광기를 멈출 수 있고 멈출 것입니다. [...] 우리는 기후 정의를 볼 때까지 단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의사결정자들이 책임을 지고 이 위기를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3월 1일 그레타툰베리를 포함한 150여명의 학생이 가디언지에 공개서한 발표.

2) 2019년 노동자행동 사례

2019년 아마존 주주총회에서 아마존 노동자 수천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모임에서 ‘기후정의를 위한 아마존 직원’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기후변화에 관한 종합적 대책을 회사 쪽에 요구하고 나섰다. 아마존은 이를 계기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자가 나서서 회사로 하여금 비재무적 목표를 경영전략에 도입하도록 만든 것이다.

2019년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의 기간 동안 ‘기후 파업’에 구글·아마존·페이스북·트위터·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BigTech) 산업 노동자들도 함께 동참하였다. 이들은 ‘기술노동자연합’(Tech Workers Coalition)을 출범시키고 “테크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지만, 친환경 이미지로 내세워 그린워싱하고 있다”며 테크기업들의 반환경적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기술노동자연합이 작성한 ‘권리장전’엔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및 다양성, 투명한 의사결정, 노동환경, 직원 평가 등 열악한 테크업계 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2. 파업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만 하는 것인가?

‘기후파업’은 ‘기후’와 ‘파업’의 합성어로서, 기후위기를 이슈로 하는 파업을 의미한다. 그런데 ‘파업’이라고 했을 때,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로서 ‘파업’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파업’을 꼭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파업’을 시도하기도 했다. ‘여성파업’ 역시나 불평등한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등에 항의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로서의 ‘파업’과 같은 선상에 볼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낮은 임금에 맞서는 3시 stop 여성파업 등: 아래 상자글 참고). 그러나 가정에서 가사와 돌봄 노동을 전담하는 여성들이 이를 거부하며 불평등에 항의하는 파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파업의 모습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업을 임금이나 노동조건 개선 위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로서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내세우고 쟁취하는 사회운동의 한 방법으로 노동자 이외의 다양한 사회 주체에 의해서 실행되는 행동으로 확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기후 학교파업의 경우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레타 툰베리는 금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로 나서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그 뒤를 위해서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시위를 벌였다. 한국의 청소년들도 학교를 가지 않고 (체험 학습에서 무단 결석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파업을 진행했었다. 기후 학교파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거 일제 시대의 3.1 운동에서부터 근래의 민주화 운동에서 학생들의 ‘동맹휴학’의 경험이 있었다. 비슷하게 상인들이 정부에 반대하여 상점의 문을 닫는 ‘첼시’도 있었다. 노동자들도 임금과 노동조건 만이 아니라, 민주화 요구나 다른 사회적 의제에 동감하여 파업을 하는 경우도 국내외에서 발견된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기후정의 실현의 절박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의 한 방식으로 ‘파업’을 구상하고 또 요구하는 논의들은 커질 수 있다.

3. 기후파업을 상상해보자

‘파업’은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질서에 따라서 돌아가기만 하는 현재의 체제의 작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또 이를 멈춰 세우면서, 문제를 부각시키고 또 해결을 요구하기 위한 집합적인 행동이라고 좀더 넓게 해석해보자.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노동자와 농민은 생산을 멈추고, 학생과 교사들은 학교를 멈추고, 모든 시민과 주민들은 소비를 멈추는 사회적 (총)파업을 통해서 대응하는 ‘기후파업’을 사회운동이 상상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작년 9월 24일, 서울에서 3만 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한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정의’와 함께 ‘체제전환’을 요구하였다.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수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역 곳곳에서 기후정의행진을 반복해서 시도해야겠지만, 우리는 보다 강력한 전술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전술 중에 하나가 ‘기후파업’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힘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기후위기대응에 미온적이고, ‘그린워싱’에 여념이 없는 정부와 기업에 맞설수 있으며, 이것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업의 탄소배출감축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 현 정치체제에 대한 도전하는 한 전술로서 ‘기후파업’을 상상해보자. 사회를 멈춰 세우면서, 무한정 생산하고 소비하는 성장 기계를 멈춰 세우면서,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토론을 시작하고, 그렇게 기후위기를 헤쳐 나갈 주체임을 선포하는 계기로 파업을 상상해보자. 관행적 기후행동을 넘어서 대규모 직접행동의 새로운 전술로서 전 사회적 ‘기후파업’을 모색하길 원한다. 기후문제는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문제만이 아닌 이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투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대중들의 대규모 직접적이고 급진적인 행동의 전개와 맞물릴 때 그 힘을 통해 기후위기에 진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기후행동은 홍보와 교육, 기자회견과 토론회 개최, 정부와 정치인들과의 면담, 국회, 정부부처, 지자체 앞의 시위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최근 들어 한편에서는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시되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긴박한 위기 상황에 필요한 ‘사회적 개입’과 그에 의한 ‘사회의 중단’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또한 그에 따라서 기후위기를 야기하고 방조하는 세력과 기후위기를 해결을 요구하는 세력 사이의 명확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화물연대 파업과 전장연 지하철 투쟁과 같은 정세를 형성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 답보 상태를 돌파할 방안으로 ‘기후파업’을 모색해보자. 이미 기후정의운동은 924기후정의행진을 통해 보았듯, 수많은 노동자 농민, 빈민,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운동이 합류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격렬한 투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체제전환을 담보할 정치세력과 사회적 힘을 어떻게 형성할 것 인가를 고민해야 할때, 우리는 전 사회적 ‘기후파업’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끝으로

‘기후파업’, 물론 쉽지 않는 이야기다.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내세워, 학교를 만나가고, 하루 영업을 쉬고, 하루 별이를 포기하고, 심지어 징계와 해고까지 감수하면서,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을까? 아마도 작업장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활동가들이 고개부터 저을 수 있다. 당장 눈 앞에 놓인 문제를 위해서도 파업을 결의하지 못하는 데, 기후학교에도 사람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데, 무슨 ‘파업’이냐고 되물을 수 있다. 당연히 어려울 일이고, 그리 하자고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상하고 꿈꾸기를 포기하지 말자. 시도하고 토론하기를 멈춰지 말자. 필요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자. ‘기후파업’을 위한 다각면에서의 장기적 전략을 모색해보자. 기후파업을 직접행동의 가장 높은 수위이기에, 당장 대규모 기후파업을 조직하고 전면에 내세우

기 보단, 그레타 툰베리의 1인으로 시작되어 125개국가로, 2200여 도시로, 100만명이 기후파업에 동참하게 만들었듯, 작은 행동이 눈덩이 처럼 커져나가는 방식이 될 수 도있다. '기후파업'을 새로운 직접행동의 전술로서, 고민해보고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 '여성파업' 참고자료

여성파업, 3시 스탑

- 세계여성의 날... '3시 STOP 조기퇴근' 시위 열린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4992.html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STOP 여성파업!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72543/story>

여성들은 감정, 꾸밈, 가사/돌봄 노동을 멈춘다. 감정노동, 꾸밈 노동, 독박 가사-돌봄 노동 파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의 파업을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3월 8일 여성 파업과 연결시켰습니다. '여성 파업'은 많이 생소했지요. 한국 사회에서 파업이 주는 강한 어감과 고정화된 관념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나는 노동조합 가입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파업을 해', '이런 이슈로 파업이 가능해?', '대중들의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 등등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이유로 여성 파업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성은 어디에서건, 항상 노동을 해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노동을, 가정에서는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을.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임금노동 그 자체에서의 차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여성이 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무급 가사-돌봄 노동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여성이 일시에 멈춘다면? 그 순간 세상이 멈출 것이며 여성이 해 왔던 모든 것이 노동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가 및 종합토론